

제 7 차

2003 정기총회 자료집

- 일 시 : 2003년 1월 28일 (화) 오후 4시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장실 국제회의실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7 차

2003 정기총회자료집

일시 : 2003년 1월 28일(화) 오후4시-7시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장실 국제회의실 5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고 이우정 이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본회의 고 이우정 이사장님은 2002년 5월 30일에
80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 일동은 고 이우정 이사장님이 남기고 가신 평화의

염원과 열망을 이어받아

이 땅에 평화를 내고 동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우정이사장님의 영결식에 조문해주시고 조의를 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리 일본과 미국 등 외국에서
조문해주시고 조의를 표해주신 모든 인사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해주신 장례위원회 위원들께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월 28일 정기총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 일동

목 차

총회 순서	4
인사말씀	5
2002년도 사업보고	
전체사업 보고	7
사무처 보고	18
각 위원회,팀,연구원 사업보고	28
연대사업 보고	94
2003년도 사업계획	
사업방향	123
각 센터 사업계획	126
월 별 사업계획표	138
경관개장안	139
운영규정	141
규모음	146
보도기사모음	242

정기총회 순서

여는마당 (오후4:00~5:00)

영상물 감상 :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2002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본부 제작

강의 : 2002 희망과 가능성 : 이형모 (시민의 신문 사장)

영화영상 : 평화심성팀

정기총회 (오후5:00~6:30)

인사말씀 : 이길현속 상임대표

성수보고

개회선언 및 개회사

회순채택

전 회의록 낭독

2002년도 사업보고

-사무처

-각 위원회와 팀, 연구원

감사보고

2001년도 회계결산보고

임원 선출/ 공천위 보고

임원 인사

2003년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사무처

-각 센터와 연구원

2003년도 예산(안) 보고와 승인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기타토의

모병회원 시상

회의록 발음

폐회선언

의장 : 이길현속 상임대표

서기

의장

의장

서기

사무국장 : 진은주

각 위원장

(김동리,홍승희,김복숙,박수선,김옥영,

서익숙,최경란,김현락)

감사 : 이문우

회계 : 신유순

공천위원장

의장

의장

사무국장

각 센터(원)장

의장

의장

의장

의장, 공동대표

서기

의장

먹거리 나눔... 그리고 평화역담 (오후6:30~7:00)

인사말씀

이길원숙, 김숙임, 심영희(본회 공동대표)

평화여성의 가족여러분!

2003년 1월에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뵙게 되어 많이 반갑습니다.

새해는 우리모두가 건강하고 우리의 꿈과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하나됨이 한발짝 더 진전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선 지난해에 대한 보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양에 다녀온 보고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여성위원장 자격으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민족공동행사 실무회담에 참석하고 서울 권(25일)에 귀국했습니다. 실무집행결과 남북은 올해도 6.15공동선언 3문, 8.15광복절, 개천절 등의 기념일을 제기로 서울, 평양 등 합의되는 장소에서 남북공동의 통일행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는 3.1일에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실을 비롯한 부문별행사에서는 전년도와 행사평가와 함께 2003년도 사업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출은 부문별행사는 앞으로 계속 실무집행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어떤 합의를 이루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평양방문은 북한 핵문제도 북미갈등이 고조되고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긴박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남북 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남북당국자간 철도도로 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됨으로 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희망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21일 아침, 평양행 고려항공을 타려는 순간,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평양의 백문길선생(민화협단체장)과 우리와 자주 만났던 인물이 나타나 우리를 더욱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양행 고려항공 출구에는 우리말고도 우리민족서로돕기, 이웃사랑회, 전교조 관계자들이 함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날씨는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많이 풀렸다고는 하나 바람날씨는 매우 매서웠습니다. 평양거리는 전보다(2002년 7월 20~23일 방문) 자동차의 수가 늘고 거리에는 눈에 띄게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고려호텔에서 대다분 밤 풍경은 전보다 전깃불이 많이 켜져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려호텔은 방마다 전기난로를 제공했고 비교적 따뜻해서 추위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담 사이사이 방문한 평양산원, 친선병원 등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친선병원은 외국인전료전담병원이었지만 실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고 각 과별 방에는 전기난로 하나가 있었지만 의사나 간호원, 환자들은 모두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말 북쪽의 에너지난은 심각하게 사람들의 거주살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리원쪽으로도 여행을 했는데 평양을 벗어날수록 김철과 사람들의 모습은 더 많이 험기워 보였습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지원이 중단된 북한의 겨울나기는 생각보다 힘든 것

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나 폭폭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북측사람들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예상
을 하고 북측에서는 고위급인사(안경호, 강재연, 전금철)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핵문제에 대
한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남측의 문제인식과 조연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
였습니다. 민화협과 여성, 청년부문에는 전금철부위원장(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종교부문에는
강재연(리직집사)이, 통일연대와 노동, 농민부문에는 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
장이 들어와 광시간 포포시간을 가지고 동석식사까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측은의
의 핵심은 현재 핵문제의 원인이 대북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현재 위기해법
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정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남측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의를 전달하였고 북측은 일리가 있으며 참고가 된다는
말로 응답했습니다. .

존경하는 평화여성회 가족여러분!

식민지역사와 전쟁, 분단, 외국군대의 주둔, 군사독재의 역사로 이어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은 고통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북쪽이 겪고 있는 에너지
난과 식량난, 권경위험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여성
회는 바로 이런 현실을 바꾸려는 여성들의 의지를 모아 출범했고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광범 5년의 활동을 점검하는 5주년행사를 성대하게 치뤘내고 이를 토대로
반민평화와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활동을 심도 있게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처음 평화여성상
을 제정하여 수여(박성수님)함으로써 여성평화지도자를 격려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며
2003년도 한반도전쟁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시에는
여성150인의 평화요구를 발표하여 부시대통령이 한반도에 대대리전쟁확대의도나 계획이 없
다는 것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이후 부시대통령은 한반도전쟁계획이 없음을 밝힘). 호
순이 여순이를 위한 여성추모시위를 주도하고 범대학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활동을 이끌어나가는데서도 여성지도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
였으며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시키고 개최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
다. 2002년에는 특별히 평화심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과 평화만들기의 계기를 열고 갈
등배경의 취약한 활동은 학교사회와 시민단체에 평화교육과 갈등해결훈련의 중요성을 알
리고 이에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여성회 가족여러분!

이화같이 2002년에는 작지만 강한 힘으로 또한 여성의 가슴으로 우리사회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평화문화를 만들고 통일의 길을 열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핵위
기가 걸린 2003년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새로운 과라다임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여내고 여성들의 말신을 인도해내고
여성들의 가치를 실현시켜나가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어깨에 매여져 있다 하겠습니다. 건강
과 웃음과 행복을 도모하며 우리모두 평화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003년을 평화의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사업보고

I. 전체사업보고

○ 사업목표 : 반전평화 행동과 평화문화의 확산

전쟁과 폭력으로 일궈진 지난 해에 이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 부시대통령의 선택이 전 세계를 또 다시 폭력과 긴장으로 몰고 있다. 이는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미국의 확전론으로 인한 위기감 조성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더욱 예외일 수 없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반전평화 행동의 전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유연하고 다양한 평화통일운동의 자세와 함께 평화적 감수성과 상생적 삶의 지혜를 요구한다.

2002년은 월드컵경기 개최, 지방자치선거, 대통령선거 등에서 요구되는 국민들의 평화의식과 통일의식의 고양은 남녀평등사회와 평화로운 민주공공체 형성에 주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회의 올해의 사업목표를 '반전평화 행동과 평화문화의 확산'으로 정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기조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1) 반전평화운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상호 평화공존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
- 2)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문화 형성과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을 활성화한다.
- 3)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4) 선거국면을 맞이하여 현시기에 필요한 대안적 평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거활동에서 표명되는 평화와 통일정책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한다.
- 5) 여성평화운동의 확산과 강화를 위하여 대중적인 조직기반과 자립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한다.

○ 주요사업

1. 전쟁반대를 위한 평화행동

(1) 사업방향

- 1)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폭력적인 갈등과 전쟁분위기 조성을 평화적 상생의 구도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대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운동을 전개한다.
- 2) 포럼이나 토론회, 사이버공간 등을 통해 확대되는 전쟁의 위험성과 반전의 필요성을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알려줌으로써 평화의식을 확산하고, 정부와 미국, 유엔의 국제활동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 3)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테러법의 강화, 부시의 군사외교전략,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평화단체와 연대하면서 시안별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내용

- 1) 반전평화행동-부시방한반대 시위전개,FX사업-F15기 도입반대활동, 전쟁반대연대활동
- 2) 평화쪽지날리기사이버운동 제개, F-15K반대 사이버행동(종이비행기날리기) 전개
- 3) 국제회의 참가 및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국제평화단체와 연대활동
- 4) 전쟁반대 및 평화군축을 위한 각 종 설명서 발표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부시방한 반대 평화시위와 FX도입반대 활동을 전개하여 여성평화운동의 바람을 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를 통해 평화여성회의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영향력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 2)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평화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국제화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나. 과제

- 1) 실무자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요구되는 사안에 비해 실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2) 의화된 활동에 비해 본 회 내부적인 논의가 체제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논의와 실행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3) FX반대 사이버행동은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준비성과 논의과정의 치밀함 부족으로

작년 '평화속지남리기'만남 사이버행동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저조했으며 여론형성 또한 미흡했다.

2. 평화문화 확산

(1) 사업방향

- 1) 일상생활에서의 비폭력적인 생활문화 형성과 실천을 위하여 대중적인 생활지침들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2) 북한 어린이와 전쟁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저금통을 마련하여 작은 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도모한다.
- 3) 평화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평화인형극 공연과 갈등과 분단현장 평화기행, 평화노래 보급 등 대중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화로운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 4) 일년을 마감하면서 평화통일사업의 디딤돌과 결실들을 선정하여 평화 통일관련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평화통일운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2) 사업내용

- 1) 평화인형-아동극 전국 순회 공연
- 2) 평화노래 만들기, 보급하기
- 3) 평화여성상 제정
- 4) 북한 어린이와 전쟁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작은돈 모으기 운동 시도
- 5) 평화문화캠페인 활동 기획 시도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올해는 무엇보다 평화문화 확산이라는 사업목표를 충실히 수행했던 한 해였으며 대중친화적인 내용의 기획 및 진행으로 대중인지도가 높아졌던 성과를 얻었다.
- 2) 인형극사업 또한 작년에 이어 전국순회로 문화행식을 통한 평화통일 교육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어린이평화교육의 문화적 토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나. 과제

- 1) 작은 돈 모으기사업이나 평화문화캠페인 사업은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담당자의 부재와 함께 그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도를 현실화시켜 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2) 평화문화캠페인은 독자적인 캠페인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창의적으

로, 상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형상화하는 아이디어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
사업진행의 흥보 과정에서 평화문화결집인을 병행하면서 전략화하는 방법으로 실천
적 과제를 모색해본다.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1) 사업방향

- 1)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평
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실시한다.
- 2) 갈등해결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평화교육 내용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한다.
- 3) 평화심성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4) 평화통일교육의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조직하여 강사뱅크사업을 강화시킨
다.

(2) 사업내용

- 1) 8기 여성평화아카데미 진행
- 2)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매뉴얼개발과 교육 확대
- 3) 평화심성개발프로그램 실시
- 4) 평화교육 강사드레이닝 및 청소년 평화캠프
- 5) 외부 단체 평화교육 지원 및 글 게재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반전평화와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 2) 여성평화아카데미가 8기에 이르는 성과와 함께 본 회의 대표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자
리잡아가고 있으며 참가자에게 평화기념과 본 회의 성격을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전쟁과 평화문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시기적절한 교육과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3)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올해 무엇보다 성실한 준비과정과 왕성한 활동력으로 교육사업
의 한 정형을 마련하였다. 갈등해결팀의 헌신적인 활동과 연구에 기반하여 갈등해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만든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과 현장 교육 실시를 통해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면서 검증해가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성받았다.

- 4) 평화심성개발프로그램은 1년간의 치밀한 준비과정과 평화심성팀의 조직적인 뒷받침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주의 가치와 평화주의자의 삶과 운동 성찰,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기법 개발 등 평화교육의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여 평화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5) 청소년 평화캠프는 평화교육 대상을 청소년계층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평화교육을 학교교육에서 제도화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열었다.

나. 과제

- 1) 향 후 여성평화아카데미의 과제는 수요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원으로 참여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며 참가자들의 대중적 확보(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청소년평화캠프는 추가 사업으로써 사업목표와 진행, 결과의 일관된 흐름 속에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으로 그쳤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평화교육이 필요하며 일회적이고, 주관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좀 더 전문적인 책임성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요구된다.

4. 남북여성교류사업의 활성화

(1) 사업방향

- 1) (가칭)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사와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 2)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내용

- 1)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의 개최 주관 및 참여
- 2)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좌담회 개최
- 3) 남북여성교류 참가자 설문조사 및 분석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그동안 본 회가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남북여성교류사업이 민회협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모색, 지속적으로 준비되었으며 2002년에 본 회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2) 상임대표는 민회협 여성위원장으로서 본 대회를 발의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남북실무회담과 정부와의 협의 및 남남대화를 주도하여 협상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면서 남북여성교류의 물꼬를 뜨는데 평화적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 3) 남북여성교류사업의 전문단체로서 이번 대회의 실무진에 참여하고, 임원과 회원이 비중있게 참여하였다.

나. 과제

- 1) 대회 준비 및 참가 과정에서 전문단체로서 비중있는 논의와 준비가 부족하였다. 2) 이후 남북여성교류사업의 장기적 전망과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와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

5.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

(1) 사업방향

- 1) 조직강화를 위한 회원태가사업으로 1000명 조직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소모임, 회원캠프를 통해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평화 통일운동의 입상적 실천을 도모한다.

- 2)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젊은 층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자원봉사자 발굴과 남성후원회원, 협력회원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강화한다.

- 3) 신입회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깊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4)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여성 지도력을 태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사업내용

- 1) 소모임 및 커뮤니티 운영의 시도 및 진행
- 2) 자원봉사자 및 사이버회원 모집 시도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사이버회원, 자원봉사자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원 및 예비회원이 조금씩 확대되어 가면서 회원확대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 2) 소모임 진행을 통해 회원확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신입회원은 평화교육을 통해 일종의 풍과의례를 거치게 되었다.

나. 과제

- 1) 회원담당 실무자 확보를 못함으로써 확대 및 조직력은 본 회에서 여전히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기존회원과 신입회원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회원관리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이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2) 회원태가 사업이 목표이긴 했지만 전체 구성원들이 모두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부담감만이 아니라 조직 확대와 운동의 대중화라는 측면과 함께 회원태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여성평화운동의 자립화

(1) 사업방향

- 1) 본 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초토대로서 회원결속력과 상호만족도, 조직에 대한 애정 등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힘쓴다.
- 2) CMS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고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후원회, 기획행사 등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한다.
- 3) 창립 5주년 기념 평화야회를 앞차고 성과있게 개최한다.

(2) 사업내용

- 1) CMS 가입 확대
- 2) 창립5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여성평화축제 및 평화여성상 제정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재정자립을 위한 기초토대마련을 위한 CMS 사업의 제도화가 일정부분 시도되었다.
- 2) 5주년 기념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5년의 활동을 '여성들의 평화보고서'로 출간하고 국내외의 격려와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었다.

나. 과제

- 1) 재정사업의 담당실무자를 설정하여 CMS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한다.
- 2) 재정자립 의지로 이어지는 회원결속력과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강화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데는 미약했다.

7.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1) 사업방향

- 1)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을 제시하고, 당면한 선거국면에서 평화통일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평화감시단 활동을 진행한다.
- 2) 정세대응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평화운동 이론과 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전문성을 높인다.

(2) 사업내용

- 1) 김대중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평가 전문가포럼
- 2) 대선후보들의 평화, 통일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제시 활동 및 대담포럼
- 3)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 4) 국제연대를 통해 바라 본 한반도의 평화, 통일 토론회
- 5) 여성과 평화 2호 발간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을 모색하였고, 선거시기 후보들의 평화통일분야의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2) 정세대응 및 정책과제 제시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내용성을 담보하였고, 이 활동을 통한 내외 인적자원 인프라를 형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 3) 5차례 정책협의회, 3차례 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평화여성회 정책과 조직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 과제

- 1)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역량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충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내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견을 모으는 역할이 필요하다.
- 2) 연구분야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평화운동을 이론화하고 새로운 전방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요구된다.

8. 홍보활동 강령

(1) 사업방향

- 1) 소식지, 브로셔 발행과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신속한 정

보급과 확산에 힘쓰고, 다양한 평화주체들을 이끈다

- 2) 언론매체홍보활동 및 기자회견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회가 조직하는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공론화한다.

(2) 사업내용

- 1) 소식지 발간 - 1회
- 2) 여성과 평화 2호 발간
- 3) 단체 브로셔 제작
- 4) 평화협진을 통한 사이버평화문화 확산
- 5) 각 종 행사 시 언론매체 홍보활동 및 관련글 게재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담당실무자가 부족하지만 자료 발간을 지속하고 웹진 가동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시도한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나. 과제

- 1) 실무자부족으로 소식지 발간이 지속되지 못했고, 평화웹진 등 사이버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데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 2) <여성과 평화> 무크지 발간 및 홍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9. 평화운동연대의 네트워크 강화

(1) 사업방향

- 1) 평화운동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여성, 평화, 통일, 국제 공 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2)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연대체를 조직하여 평화운동의 과급력을 높이고, 통일평화운동의 연대사업정책과 내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2) 사업내용

- 1) 군사주의반대 여성평화네트워크 연대활동 및 “서울국제회의-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군사주의와 여성인권)” 공동주최
- 2)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관련 연대활동, SOFA개정운동 연대
-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통일운동의 연대: 민화협여성회, 통일교육협의회, 소파개정 국민행동, 대인지리대체협의회, MD지지 공대위, 반전평화공동실천, 국방포럼 등

(3) 사업평가

가. 성과

- 1) 여성평화행동,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국제평화단체와의 연대 등 평화운동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 2)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사건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도 강화하였고, SOFA개정운동 등 여론형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과제

- 1)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운동의 대응을 통해 평화운동의 파급력을 높이는 활동이 다소 미약했고, 다양한 연대 활동 속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 2) 촛불시위의 성공적인 평화운동의 사례와 같이 여성평화운동에서도 네트워크의 활용 등을 통해 여성다수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의 방식을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10. 평화여성상 제정

(1) 사업내용

- 1) 제1회 평화여성상 제정 위원회 구성
- 2) 제1회 평화여성상 제정 및 수상자 선정, 시상

(2) 사업평가

가. 성과

- 1) 최초로 평화여성상을 제정하면서 여성평화운동가를 발굴, 양성하며 상호 축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여성평화활동가들을 지원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 2) 평화문화 확산과 여성평화운동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나. 과제

- 1) 평화여성상 제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마련을 위한 대책 및 후원처 확보가 필요하다.
- 2) 이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여성평화활동가를 발굴, 격려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 총평

본회는 5년의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여성평화운동의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조직으로 대내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내부의 인적, 내용적 전문성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헌신성에 기반하여 여성평화운동을 선부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작년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 사회적 관심의 화두가 되었던 '평화'는 이제 온 국민의 요구가 되었으며 따라서 본회에 거는 기대 또한 상당히 높다. 2002년을 '전쟁의 해'를 선포하며 대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강경정책을 비판하며 본회 역시 올 초부터 반전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이와 같이 실무력의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전평화운동을 위한 사회행동과 사이버행동 및 평화의식 확산 등 어느 여성단체보다 선두적으로 그 길을 개척해 왔으며 동시에 평화심성훈련과 갈등해결프로그램의 창의적 개발과 확산 등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내실있는 평화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로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여성교류활동을 매우 모범적으로 전개하면서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열매를 맺는 감격을 느낄 수도 있었으며 올 해 아주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과제를 각 후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안적 평화, 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 성과에 비해 여성평화운동의 대중적 조직기반 형성과 자립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는 여전히 부족하며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남아있다.

올해 역시 부시정권의 북한 '악의 축' 발언, 북핵문제 등 북미관계,故이우정 이사장님의 별세와 평화여성회 5주년기념행사 '여성평화축제', 국내 최초 평화여성상 제정,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내부 조직 인프라 형성의 부재, 재정부족 등 아픔과 희망이 여전히 공존했다.

하지만 반전평화운동과 평화문화확산이라는 사업목표에 걸맞게 활발한 사업과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본회는 이제 여성평화운동의 대표격인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점차적으로 내용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해 가며 사회적 영향력 또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내부적인 논의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과 대중성을 위해 힘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더욱 영향력있는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해 가야할 것이다.

II. 사무처 보고

1. 회의일지

1) 이사회

- 1/21(월) 오후6시 정기이사회, 어머니의 품
- 1/21(월) 오후4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회, 본 회 회의실
- 4/25(금) 오후6시 이사회, 어머니의 품

2) 운영위원회

- 3/14(목) 오후3시 1차 운영위원회, 여성교회
- 4/19(금) 오후4시 2차 운영위원회, 여성교회
- 7/10(수) 오후4시 3차 운영위원회, 여성연구소
- 9/30(월) 오후4시 4차 운영위원회, 여성연구소
- 12/14(금) 오전1시 5차 운영위원회 회의, 풍도수련원

3) 사무국회의

- 1/31(목) 오전10시30분 사무처회의, 회의실
- 3/12(화) 오전10시30분 사무처회의, 회의실
- 3/25(화) 정오12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3/26(화) 정오12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4/2(화) 정오12 사무처회의, 어머니의 품
- 4/9(화) 정오12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4/16(화) 오후12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5/28(화) 오후3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7/5(금) 오전10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8/7(수) 오전10시-6시 사무처 MT, 김숙임대표 자택
- 9/3(화) 오전10시 사무국회의, 회의실
- 9/17(화) 오전11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9/25(수) 오전11시30분 사무처회의, 회의실
- 12/26(목) 오후2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 12/27(금) 오전10시30분 사무처회의, 회의실
- 12/30(월) 오후4시 사무처회의, 회의실

4) 외부회의

- 1/22(화) 오전9시 여성평화의집 이사회, 여성연구소(이김현숙 대표 참석)
- 1/24(목) 오후7시 무시방한 대응 연대회의, 느티나무카페(전은주 참석)
- 1/30(수) 오전10시 여성평화의집 정기이사회, 여성교회(전은주 참석)
- 1/31(목) 오후4시 MD공대위 대표자연석회의, 느티나무카페
- 2/5(금) 오후4시 통일교육협의회 2002년제3차 정기총회,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이김현숙)
- 2/6(수) 오후2시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연석회의, 창산교육장(전은주)
- 2/7(목) 오후4시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집행위회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2/22(금)-25(월) 제주인민학술회의, 제주도(심영희, 김영리, 정경란, 전은주)
- 3/13(수) 경오12시 전쟁반대공동실천 실행위, 하늘당2층(전은주)
- 3/19(화) 오후3시 여연통평위, 여연회의실(전은주, 김현희)
- 3/29(금) 오후3시 학부모연대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전은주)
- 4/3(수) 오전11시 F-X관련 논의 대표자회의, 느티나무카페(이김현숙, 김현희)
- 4/17(수) 오후3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 서울YMCA(전은주)
- 4/17(수) 오후4시 MD공대위 집행위, 참여연대(김현희)
- 4/18(목) 오후12시 평화포럼-한반도 보고서 검토회의, 세종홀(이김현숙, 정경란)
- 5/21(화) 오후4시 F-X관련 연대회의, 참여연대(김현희)
- 5/27(월) 오후 통일교육협의회 의정단회의(이김현숙)
- 5/29(수) 경오12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어머니의집(전은주)
- 6/14(금) 오후4시 MD공대위 회의, 자통협사무실(김현희)
- 6/18(화) 오후1시30분 여연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사회교육원3층(김현희)
- 6/20(목) 오후3시 국제연대 전략회의, 참여연대(정경란, 최원진)
- 6/26(수) 오후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단 회의, 세실(이김현숙)
- 6/26(수) 오후4시 MD공대위 회의, 참여연대(김현희)
- 6/27(목) 오후2시 3차 통평위 회의, 여성연합 1층회의실(전은주, 김현희)
- 7/30(화) 오후3시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략회의', 국가인 권위(이김현숙, 김현희)
- 8/1(목) 오후5시 여중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8/5(월) 오후3시 범대위 대표자 회의, 향연교회(김현희)
- 8/5(월) 오후5시 범대위 제6차 집행위회의(김현희)
- 8/6(화) 오후1시 토론회 -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위한 준비모임(김현희)
- 8/8(목) 오전11시 민화협 여성위 회의, 민화협 (이김현숙)
- 8/9(금) 오전11시 남북여성대회 준비위회의(이김현숙)
- 8/10(토) 오전 11시 공동집행 위원장 회의(김현희)

- 8/12(월) 오후 8시 남북여성대회 준비모임 2차 (이김현숙, 전은주)
- 8/20(화) 오전8시 남북여성통일대회 준비모임 3차, 뉴서울호텔(이김현숙, 전은주)
- 8/21(수) 오후2시 한반도 위기예방과 시민사회역할 토론회, 국가인권위(이김현숙, 김숙임, 김현희)
- 8/23(금) 오후7시 여중생대책위 집행위원단 회의(김현희)
- 8/27(화) 오후4시 여중생대책위 집행위원회 회의(김현희)
- 8/30(금) 오후1시30분 남북여성대회 준비회의, 평화여성회(이김현숙, 전은주)
- 9/1(월) 오전8시 남북여성대회 성사를 위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여성대회추진본부, 청년대회추진본부 3자회의, 민화협(이김현숙)
- 9/2(월) 오전8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와 여성추진본부, 청년위원회 연석회의, 민화협사무실(이김현숙)
- 9/3(화) 오후3시30분 한반도위기예방 간담회, 6월사랑방(김숙임, 전은주)
- 9/5(목) 오후2시 소과국민행동 집행위원회, 참여연대1화회의실(김현희)
- 9/5(목) 오후4시 MD공대위 집행위원회(김현희)
- 9/6(금) 오전7시30분 여성부 정책자문회의, 매리어드호텔(이김현숙)
- 9/9(월) 정오12시 민화협 집행위원회, 민화협사무실(이김현숙)
- 9/10(화) 오후1시 여성연합 이사회, 창산교육장(김숙임)
- 9/11(수) 오후3시 시민연대회의 운영위, YMCA(이김현숙)
- 9/12(목) 오전10시 남북여성통일대회 집행위, 민화협(전은주)
- 9/12(목) 오후3시 여중생대책위 집행위(김현희)
- 9/13(금) 오후3시 국제연대전략모임, 여성연구소(정경란, 김정수, 전은주, 최정현진)
- 9/14(토)-9/15(일) 6월사랑방 워크샵, (김숙임)
- 9/17(화) 오전9시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 통일협 사무실(이김현숙)
- 9/17(화) 오후7시 남북여성통일대회 운영위,프레스룸(이김현숙, 전은주)
- 9/24(화) 오후7시 여중생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과주(김현희)
- 9/25(수) 오전9시 한반도위기예방연대회의, 6월사랑방(김숙임, 전은주)
- 9/25(수) 오후4시 108 반전평화국제행동 준비회의, 비록터평화연대(김정수, 정경란, 김엘리)
- 9/26(목) 오후2시 남북여성통일대회 홍보팀 회의, 본 회 회의실(김엘리, 김정수, 정경란, 전은주)
- 9/27(금) 오후2시 남북여성통일대회 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 민화협(이김현숙, 전은주)
- 11/12(화) 오후1시 여성연합 이사회, 여성사회교육원(이김현숙)

- 11/13(수) 오전11시 평화단체 후보 평화,통일정책명가회의(전은주)
- 11/17(일) 오후 대항리 보훈달축제, 대항리(최정현진)
- 11/18(월) 오후4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청해수산(전은주)
- 11/20(수) 오전11시 대선후보 평화,통일정책 평가회의(전은주)
- 11/25(월) 오후 6시 여중생 범대위 공동집행위 회의, 민주노총 9층(김현희)
- 11/27(수) 오전11시 범국민비상사국회의, 여중생 범대위, 민주노총 9층(김현희)
- 11/27(수) 오전11시 대선후보 평화,통일정책 평가회의(전은주)
- 11/28(목) 오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카타르동맹에게 편지보내기 회의(평화여성회 외, 정경란 진행)
- 12/1(월) 오후5시 대선후보 평화,통일정책 평가회의 및 기자회견준비(전은주)
- 12/2(월) 오후6시 대선후보 평화,통일정책 평가 자문단 회의, 6월사망방 (김숙임, 김정수, 박현선, 전은주)
- 12/11(수) 오후1시 여중생관련 시국회의, 흥사단(이길현숙, 김현희)
- 12/11(수) 오후5시30분 미군주둔 관련 국제포럼준비모임, 서울대보건대학원(전은주)
- 12/16(월) 오후4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회의, 청해수산(전은주)
- 12/17(화) 오전10시 북핵관련 회의, 참여연대(전은주)
- 12/30(금) 오전11시 여성연합 2차 총준위, 청산교육장(김숙임)
- 12/30(금) 오후6시 여중생범대위 집행위원장단 회의(김현희)
- 12/24(화) 오전9시30분 북핵관련 회의, 참여연대(이길현숙, 전은주)
- 12/28(토) 오전9시 북핵관련 회의, 참여연대(이길현숙)
- 4/10(수)-12(금) 남북민간교류 실무회담, 금강산(이길현숙 대표)
- 6/28(금)-30일(일) 남북실무회담, 평양(이길현숙)

2. 사업일지

1) 집회

- 1/30(수) 오후2시 군산화재참사 항의집회, 광화문(전은주, 이은하 참석)
- 2/4(월) 오후2시 군산화재참사 항의집회, 광화문(전은주, 이은하)
- 2/8(금) 오후2시 군산개복동화재참사노제, 서대문경찰청 앞(이은하, 장희원)
- 2/14(목)-20(수) 부시방한반대 1인 릴레이시위, 미대사관 앞(이길현숙, 심영희, 이은하, 김숙임, 이낙호, 윤여령, 김정수, 김엘리, 김귀옥)
- 2/20(수) 오후3시 부시방한 범국민대회, 종묘공원(이길현숙, 김숙임, 이은하, 김정수, 이낙호, 김엘리, 박수선, 김귀옥, 윤여령, 전은주, 이은하, 장희원)

- 2/25(월) 오후3시 제주도지사 성추행사건 항의집회, 제주도(김영리, 전은주, 정경란)
- 3/25(월) 정오12시 FX사업관련 집회, 탑골공원(사무처 실무자)
- 3/27(수) 정오12시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 1인시위, 미대사관 앞(김현희, 장희원)
- 4/10(수) 오전11시 F-X사업 외압 의혹 진상규명과 F-15K 내정 철폐촉구 시민대회, 전쟁기념관(김숙임, 김현희, 전은주, 이은하, 장희원)
- 4/17(수) 오전11시 FX반대 집회, 국방부 민원실 앞(이김현숙, 김현희, 정이신아)
- 5/24(금) 정오12시 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 기념 '국방부 항의비행기 날리기' 사이버행동 실시
- 5/27(월) 정오12시 국방부 앞 MD저지 1인시위(김현희)
- 6/21(금) 정오12시 ABM협정탈퇴 규탄1인시위, 미대사관 앞(김현희)
- 7/4(목) 오후4시 여중생암사사건 항의집회, 회정부2사단(김현희)
- 7/31(수) 오후6시 고 신효순, 심미선 49세, 시청(이김현숙, 김현희, 이은하, 최정현진, 김영리, 이낙호, 이정자, 정경란, 안병선, 김정수)
- 8/3(토) 오후4시 여중생사건 전국등시다발 재판권 이양포기촉구 집회, 장소 마로니에공원
- 8/7(수) 오후6시 재판권 포기 거부 규탄 집회, 종묘(김현희)
- 8/31(토) 오후4시 여중생법대위 6차 범국민대회, 마로니에공원(전은주, 김현희)
- 9/14(토) 오후6시 여중생추모문화제, 경희대노천극장(이김현숙, 전은주, 김현희, 최정현진)
- 11/21(목) 오전9시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재판 저지 2차 투쟁대회 (김현희)
- 11/25(월) 오전11시30분 주한미군 여중생 암사사건 무죄판결 규탄 및 소과재개정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김숙임, 김현희, 이김현숙, 이낙호, 전은주, 지성혜, 최안진경, 최현진)
- 11/30(토) 오후6시 여중생 추모 범국민문화제(이김현숙, 김현희, 전은주, 지성혜 외)
- 12/7(토) 오후6시 여중생 무죄판결 항의시위 인간띠잇기 대회/ 범국민문화제 (김현희, 전은주, 지성혜)
- 12/11(수) 오후11시 평화단체 공동 대선활동 - 대선평화,통일정책 관련 거리홍보전, 서울YMCA 앞(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 12/14(금) 오후2시30분 주권회복의 날(미군재판 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 사과, SOFA 전면개정), 시청(이김현숙, 김숙임, 김정수, 정경란, 윤여경, 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스타디그룸, 조명희, 그 외)
- 12/17(화) 정오12시 대선여성연대 캠페인, 신촌(김현희)

- 12/31(화) 오후6시 100만 벌국민행동의 날(여중생판권), 평화문(이김현숙, 김숙임, 김현희, 김열리, 최정현진, 정경단, 지성혜 외)

2) 기자회견 및 성명서

- 2/18(월) 오전10시 부시방한규탄시국선언 기자회견, 서울YWCA강당(이김현숙, 전은주)
- 2/21(목) 오후 부시방한반대시위 장경진암 등의성명서 발표(피해자 이김현숙 대표 외), 경찰청 외
- 3/6(수) F15 전투기 도입반대 성명서 발표
- 3/20(수) 오전10시 FX사업 의혹 규명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느티나무카페(이김현숙, 전은주, 김현희)
- 3/20(수) 정오12시 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 반대 제민주 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미대사관 앞(이현숙, 전은주, 김현희)
- 4/1(월) 정오12시 F-X사업 국민감사청구권 서명전, YMCA 앞(김현희)
- 4/3(수) 오전11시 느티나무카페 : F-X의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사회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 및 서명활동(이김현숙, 김현희)
- 4/11(목) 오후12시30분 F-X사업 서명전, YMCA앞(김현희)
- 4/18(목) 오후 F-X사업 의압 의혹 진상규명과 F-15K 내정 철회촉구 신문광고 참여(강남석 외 12명)
- 4/18(목) 오후12시30분 FX서명전, 종로YMCA(김현희)
- 5/28(화) 오전11시 F-X대통령제가 거부 기자회견(이김현숙, 김현희, 장희원)
- 7/3(수) 오전11시30분 여성생업사사건 기자회견, 참여연대느티나무카페(김현희)
- 11/13(수) 오전11시 북핵관련 시민사회단체제언 기자회견, 참여연대강당(이김현숙)
- 12/5(목) 오전10시 대선후보 평화,통일정책 평가 기자회견, 느티나무카페(김숙임, 전은주)
- 12/5(목) 오전11시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제관련 이양! 부시리검사과! 소과전연개칭! 을 위한 여성도래비국, 미대사관 앞(이김현숙 외)
- 12/30(월) 오전11시 시민사회단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회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느티나무카페(이김현숙, 전은주)

3) 외부행사 및 내방

- 1/22(화) 오후4시 민회협 후원회, 63빌딩 브스모스홀(이김현숙 대표 참석)
- 2/5(화) 오전11시30분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회, "2002년 주요여성단체대표 신년간담회", 63빌딩 국제회의장(이김현숙)

- 2/26(화)-28(목) 새해맞이 공동행사, 금강산(심영희, 전은주, 정현백)
- 2/26(화)-28(목) 2002 새해맞이 남북 공동모임, 금강산(심영희, 정현백, 전은주)
- 2/7(목) 오전11 일본 호카이도부인회 본 회 방문, 여성연구소(김숙임, 전은주)
- 3/8(금) 오전11시 우먼타임즈 광림1주년기념행사, 43빌딩 국제회의장(전은주)
- 3/8(금) 오후7시 경실련 통일협회 송월주 스님 취임식, 광화문 푸근식당(전은주)
- 3/10(일) 정오12시 3.8세계여성의날기념 한국여성대회, 11시-시민난장(김숙임, 박수선, 윤여경, 전은주, 장희원)
- 3/12(화) 오전11시 민주당 시민사회단체장 인사회, 국회커피번식당(김숙임대표)
- 3/25(월) 오전11시 국방정책설명회, 국방회관(국방장관주재-김숙임대표 참석)
- 3/28(목) 오후3시 민화협대의원대회, 은행연합회관(이김현숙 대표, 김현희)
- 3/29(금) 오후2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면담(김숙임 대표)
- 3/29(금) 오후6시 참여연대, F-X사업관련 토론회(김숙임대표, 김현희)
- 3/30(토) 오후6시30분 메가워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환영안전(김숙임대표 초청)
- 3/30(토) 오후7시 안해경콘서트, 대학로라이브극장(김현희, 전은주)
- 4/1(월) 오후7시 국방포럼(김숙임)
- 4/10(수) 오후1시30분 여성개발원 "국면의정부,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김숙임)
- 4/18(목) 오후3시 국가인권위 사무실 이진식, 국가인권위(이김현숙)
- 4/28(일) 오전7시 여성인우회 걷기대회, 남산(김현희, 전은주, 이은하)
- 5/5(일) 오전10시 여성신문사 아줌마마라톤대회, 월드컵경기장(이김현숙)
- 5/23(화) 오전10시 공군 F-X관련 정책설명회, 성남(이김현숙, 전은주)
- 5/23(화) 오전11시 여성부 월드컵성공개회 여성단체 간담회, (김현희)
- 5/27(월) 오후2시 평화포럼(이김현숙)
- 6/9(일) 오전10시 610항쟁계승 시민달리기대회, 상암경기장 공원(이김현숙)
- 6/10(월) 오전11시 6.10 항쟁계승 기념식, 성공회대성당(이김현숙)
- 6/12(수) 오후3시 포럼, 대북 햇볕정책과 여성, 민주평통장당(김현희)
- 6/14(금) 오전9시 통일부 6.15 기념 토론회(김현희, 장희원)
- 6/14(금) 오후3시 인권평화센터 포럼, 성공회대(김숙임)
- 6/18(화) 오후 평화포럼(이김현숙)
- 6/13(목)-16(일) 6.15 두들 민족공동행사, 금강산(이김현숙 전은주, 정현백, 김귀옥)
- 6/22(토) 오후3시 6.10항쟁기념, 한일공동포럼, 수운회관-김귀옥 발제(이김현숙, 김숙임, 김정수, 정경란, 전은주, 김현희)

- 6/26(수) 오후 평화포럼회의, 타워호텔(이김현숙)
- 6/28(금) 전체 여성협 하루찾길, 경동교회(김숙임, 사무처 등)
- 7/2(화) 오전10시 여성부 주최, 한민족여성네트워킹 국제회의, 팔레소호텔(김현희)
- 7/9(화) 10시~5시30분 유네스코 주최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워크숍, 유네스코 10층(김숙임, 박수선, 정경란, 전은주, 이은하, 김현희, 안병선)
- 8/14(수) 오전10시 이대 총장 이취임식, 이대(김숙임 대표)
- 8/14(수)-17(토) 8.15민족공동행사, 서울워커히 호텔(이김현숙, 정현백)
- 8/21(수)-23일(금) 여성협주최 조총련여성단체 초청토론회, 경동교회(김숙임, 전은주)
- 8/26(월) 경오12시 헬렌 본 회 내방-인터뷰, 사무실(김숙임 대표)
- 8/26(월)-9/4(수) WSSD(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GO 포럼 참석,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정경란)
- 8/29(목)-9/1(일) 아시아평화네트워킹(APA)총회 참석, 웰리관(김정수)
- 9/5(목) 오전8시 평화포럼 대선후보초청토론회, 타워호텔(이김현숙)
- 9/5(목) 오후3시 동티모르지원 손봉숙 출판기념회, 세종홀(이김현숙)
- 9/5(목) 오후6시 벨롱 박사아시아상 수상 기념식, 한일관(이김현숙)
- 9/6(금) 오후3시30분 통일부 주최, 여성단체대상 남북관계 현황설명회, 프라자호텔(이김현숙)
- 9/6(금) 오후6시30분 여성연합 후원의 밤, 워커히호텔(김숙임, 이김현숙)
- 9/9(월) 오후2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단체 초청 2003년도 정부 여성관련 예산간담회>, 민주당 4층회의실(김숙임)
- 9/10(화) 오후6시 참여연대 창립8주년 후원의 밤, 세종홀(이김현숙, 김숙임)
- 9/11(수) 오전8시 평화포럼, 조선호텔(이김현숙)
- 9/13(금) 오후6시 여성신문사 방문(이김현숙)
- 9/13(금) 오후6시30분 우리민족서로돕기 창립6주년 후원의 밤, 농협중앙회 강당(전은주, 김현희)
- 9/15(일) 오전 정몽준의행과의 간담회, 조선호텔(이김현숙)
- 9/17(화) 오후2시 여성부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 공청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김숙임)
- 9/18(수) 오전10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남방한계선 2통문 앞(이김현숙)
- 9/25(수)-9/26(목) 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제2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김

- 10/16(수)-18(금)
 - 11/15(금)-16(토)
 - 11/19(화) 오후2시
 - 11/21(목) 오전7시
 - 11/26(화) 오전11시
 - 11/28(목)-12/5(목)
 - 12/2(월) 오후6시
 - 12/6(금) 오전10시
 - 12/6(금) 오전10시
 - 12/6(금) 오후7시
 - 12/6(금) 오후7시
 - 12/6(금) 오후7시
 - 12/9(월) 오후3시
 - 12/10(화) 오전7시
 - 12/10(화) 정오12시
 - 12/12(목) 오후2시
 - 12/24(화) 오후2시
- 현회)
- 제1회 남북여성통일대회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수련회, 천마산수련원(이길현숙)
 - 서울대생 8명 본 회 내방(김현희)
 - 핵문제와 한반도 주년경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층(이길현숙)
 - 16대 대선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이희창), 방송공사 국제회의장 (김현희,이길현숙, 전은주, 지성혜)
 - 비폭력 평화 세력(Nonviolent Peace Force) 창립대회, 인도(박수선, 정경만)
 - 박경서 인권대사 출관기념회, 세종홀(이길현숙)
 - 고구려전 개막식, 코엑스(이길현숙)
 - 여성재단 3주년 후원의 날(김숙임)
 - 여성연합 송년의 밤, 경복궁 식당(김숙임, 전은주)
 - 고구려전 제일본고고학자 환영모임(이길현숙)
 - 국방모임, 안국동식당(김숙임)
 - 여성사전시관 개관, 서울여성플라자(이길현숙)
 -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토론회-대선후보정책평가, 프레스센터(전은주)
 - 통일부장관 오찬모임(김숙임)
 - 소과개정 국민행동 주최-소과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이길현숙, 김현희)
 - 남북여성통일대회 해단식, 송원(이길현숙, 전은주)

3) 강의, 원고 의

- 3/11(월) 오후 이길현숙대표 강의, 기장여성신도회
- 3/12(화) 오후 해군 칼럼 게재(김숙임대표)
- 3/14(목) 오후 생활연대 원고(김숙임)
- 3/22(금) 오후3시 이길현숙 상임대표 강의, 광주인권센터(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 3/27(수) 오후 CBS Radio 시사채널 인터뷰(이길현숙 대표)
- 6/15(토) 한국기독교공보 칼럼 게재 '고 이우정 선생님'(이은하)
- 6/18(화) 오후1시30분 교육복지연구원 강의 '평화와 여성', 송파구지역사회교육원(김숙임)
- 6/19(수) 오전9시50분 통일교육, 창동초등학교 5학년 (김현희)

- 6/19(수) 오후 한겨레신문사 인터뷰(이김현숙)
- 6/21(금) 충북여성민우회 원고제과-'여성주의자가 꿈꾸는 통일'(전은주)
- 6/21(금) 오후 CBS 위성TV 인터뷰-6.10항쟁 관련(이김현숙)
- 6/22(토) 오후 KTV 인터뷰-6.15 두 돌 민족공동행사 관련 인터뷰(방영 6.25,26일)(이김현숙)
- 7/4(목) 오후4시 대한저널 주간지 인터뷰, 본 회 회의실(전은주)
- 9/1(월) 오후3시 KTV 방송인터뷰 '평화교육 관련', KTV 방송국(이김현숙)
- 9/12(목) 오전 이화여대 강연(이김현숙)
- 9/13(금) 오후 MBC 라디오 "남북한아담"전화인터뷰(이김현숙)
- 9/14(토) 오전10시 인천여성의 전화 강의-여성과 평화운동, 남북여성통일대회, 성공회대(이김현숙)
- 9/14(토) 오후 KBS라디오 "여성이 달린다" 전화인터뷰(이김현숙)
- 9/16(월) 오후3시 K-TV "아, 코리아"-인간과 안보 방송출연(이김현숙)
- 11/21(목) 오후2시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사례발표회, 국가인권위 (김현희)
- 11/21(목) 오후4시 방송인터뷰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KBS본관 5층(이김현숙)
- 11/23(금) 오후 6시 세종대 여성학강의-남북여성통일대회와 평화·통일운동 (전은주)
- 11/24(일) 오전10시30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1000일 정진희향식(이김현숙)
- 11/25(월) 오후 4시 세종대 여성학강의-남북여성통일대회와 평화·통일운동 (전은주)
- 11/29(금) 오전11시 시사범을 주간지와 인터뷰-단체활동소개 등,사무실(전은주)
- 12/2(월) 오후5시 영국 THE TIMES 인터뷰 (김현희)

III. 각 위원회 사업보고

1.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자 : 김엘리 위원장)

위원장 : 김엘리

위원 : 강남식, 김귀옥, 김숙임, 김정수, 박수선, 박현선, 이권명희, 이김현숙, 임희숙, 정경단, 홍승희

(1) 사업목표

- 1) 진정반대와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개발 및 정책 제시
-대시기 요구되는 사업별 정책 대안과 각 위원회 사업에 대한 협의와 조정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나 이렇게 살아보련다'와 같은 대중적 생활지침 개발
- 2)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 제시
-김대중대통령 임기기간동안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총 평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
-여성평화주의자의 입장에서의 평화통일정책 논의와 정책 제시
- 3) 여성평화운동의 정립과 확산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과 정책 구상
-정책논의와 개발을 위한 원활한 논의구조 형성
- ㄱ. 정책위원들의 다원적 네트워크 만들기: 각 영역의 전문화, 정보 교류, 논의 심화
- ㄴ. 남성 정책협력위원 구성: 남성들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의 협력체제 구축.
- 여성평화운동의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과제 토론과 내용 만들기
- 차세대 여성평화활동가의 생산과 청소년, 20-30대층의 회원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2) 회의

①1차 정책위

일시: 2002년 3월 8일 (금) 오후6시

장소: 한국 여성연구소 회의실

참석: 김엘리, 김숙임, 박수선, 이권명희(명희님의 딸), 이김현숙, 권은주, 홍승희

내용: 정책기획위원회 위상, 2002년 사업계획

② 2차 정책위

일시: 2002년 4월 19일(금) 오후6시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참석: 김엘리, 김정수, 이김현숙, 김숙임, 심영희, 박수선, 홍승희, 정경란

내용: 여성주의자와 평화주의자 만남의 딜레마 (발제: 김엘리 정책위원장)

③ 3차 정책위

일시: 2002년 5월 24일(금) 오후7시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참석: 김엘리, 이현숙, 김숙임, 김정수, 정경란, 홍승희, 이명희, 박수선, 전은주, 김현희

내용: 여성평화운동의 과정과 방향 (발제: 이현숙 공동대표)

④ 4차 정책위

일시: 2002년 6월21일(금) 오후6시

장소: 본 회 회의실

참석: 김엘리, 김숙임, 심영희, 김귀옥, 김정수, 홍승희, 이명희, 전은주, 김현희

내용: 여성과 통일운동-여성운동은 반통일적인가? (발제: 김귀옥 정책위원)

⑤ 1차 정책협의회

일시: 2002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오후7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참석: 김귀옥, 김숙임, 김엘리, 김정수, 김현희, 박수선, 서미숙, 신운순, 심영희, 이명희,

이김현숙, 전은주, 최정현진, 홍승희

내용: 평화여성회 사업 방향, 조직 체제와 운영방식, 회원확대와 재정확보 방안 논의

⑦ 2차 정책협의회

일시: 2002년 10월 24일(목) 오후 12시-5시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내용: 평화여성회 사업의 성격과 운영방식 논의, 회원확대 사제와 조직운영 사례 발표

참석: 이김현숙, 김숙임, 김엘리, 정경란, 홍승희, 박수선, 신운순, 김현희, 전은주

⑧ 3차 정책협의회

일시: 2002년 12월 13일(금) 오후 5시-14일(토) 오전1시

장소: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참석: 이김현숙, 김숙임, 김정수, 김엘리, 김귀옥, 정경란, 박수선, 신운순, 이명희, 서미

숙, 홍승희, 전은주, 김현희

내용: 평화여성회 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과 성격 논의

(3) 사업내용

1. 정책협의회 개최

① 1차 정책협의회

가. 일시 : 2002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오후7시

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다. 사회 : 김정수 정책위원

라. 순서와 내용

ㄱ. 회원확대를 통한 조직 인프라 형성 (발제: 양세진 참여연대 회원사업국장)

ㄴ. 평화여성회의 대중화와 인프라 형성 (발제: 김숙임 공동대표)

ㄷ. 평화여성회 사업운영과 방향 (발제: 김엘리 정책위원장)

ㄹ. 조직운영에 관한 제안 (발제: 이김현숙 상임대표)

ㅁ. 전체토론

ㅂ. 사이버 사업 설명회 (발표: 전주주 사무국장, 최정현진 정보간사)

② 2차 정책협의회

가. 일시 : 2002년 10월 24일(목) 오후 12시~5시

나. 장소 :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다. 진행: 박수선 정책위원

라. 내용 :

ㄱ. 사업성과와 조직 체제에 대한 전망 모색 : 김엘리 정책위원장

ㄴ. 조직 운영 사례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 : 윤정숙 여성민주회 공동대표

-내가 경험한 조직(조직)관리 : 신윤순 평화여성회 회계

ㄷ. 회원확대를 위한 사업 구상 : 김숙임 공동대표

회원확대 사례 : 김현희 평동부장

ㄹ. 전체토론

③ 3차 정책협의회

가. 일시 : 2002년 12월 13일(금) 오후 5시 - 12월 14일(토) 오전1시

나. 장소 :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다. 사회: 박수선 정책위원

라. 내용

ㄱ. 정세 분석 및 평화여성회 사업방향, 조직 재편성 (발제: 이김현숙 상임대표)

ㄴ. 평화여성회 사업방향 및 조직체제 논의, 구체적 방안

ㄷ. 팀빌딩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2. 과제별 정책논의

1) 여성평화운동의 정립을 위한 모색

- ① 1차 : 2002년 4월 19일(금) 오후6시
사회: 정경란 정책위원
발제: 김엘리 정책위원장
의제: 여성주의자와 평화주의자와 만남의 딜레마
- ② 2차 : 2002년 5월 24일(금) 오후7시
사회: 김엘리 정책위원장
발제: 이길현숙 상임대표
의제: 여성평화운동의 과정과 방향
- ③ 3차 : 2002년 6월21일(금) 오후6시
사회: 김엘리 정책위원장
발제: 김귀옥 정책위원
의제: 여성과 통일-여성운동은 반통일적인가?

2) 평화통일정책 평가를 위한 소모임 구성과 방향 논의

- ①일시: 2002년 3월 19일(화) 오후5시
- ②장소: 느티나무 카페
- ③참석자: 김엘리, 김귀옥, 김정수, 박원선, 정경란, 전은주 (담양실무: 김희희)
- ④내용: 김대중 정권과 대선후보자들의 평화통일정책 평가의 범위, 사업일정 등 논의
- ⑤결과: 7-8월중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소모임 단위에서 이행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이 사업은 하반기 전문가 포럼과 대중 포럼의 내용으로 진행되다.

3) 전문가 포럼과 대중 포럼 기획 회의

- ①일시: 2002년 9월 9일(화), 오후 2시
- ②장소: 본 회 회의실
- ③참석자: 정현택, 김엘리, 김현희, 전은주
- ④내용:
 - 전문가 포럼 (김대중 평화통일정책 평가와 여성통일운동)과 대중포럼(대선후보자들의 평화, 통일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의 목적, 일정, 발제자 선정 등을 논의
 -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여성연구소가 공동주관하기로 하다.

4) 사이버 사업 논의

①1차 회의

②2차 회의

가. 일시: 2002년 9월 11일 수, 오후 2시

나.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다. 참석자: 최현진, 전은주, 김엘리

라. 내용

ㄱ. 자료실의 이름을 개칭하고 재범주화하기로 하다: 통합자료실 / 간행자료 / 군사주의와 여성 / 평화문화.교육 / 북한여성 / 평화통일.운동 / 국제 (코디: 김엘리)

ㄴ. 기사작성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국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코디: 전은주)

ㄷ. 문학 이사람 코너는 회원들 중심으로 소개하되, 소개가 되었던 회원이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회원을 추천하여 직접 인터뷰하고 기사작성을 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하기로 하다 (코디: 최현진)

ㄹ. 문화마당 코너는 세상다시읽기로 개칭하고, 평화주제관련 영화, 드라마, 책 등을 비평하거나 일상적 삶속에서 느끼는 점들을 게재하기로 하다.

ㅁ. 기타

5) 평화문화사업 방향을 위한 논의

① 1차 회의

가. 일시: 2002년 9월 25일 (수) 오후 2시-4시

나.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다. 참석: 김숙임, 이권명희, 최현진, 전은주, 김엘리

라. 내용:

-평화문화팀의 이름을 (가칭)평화문화 캠페인팀으로 고려해보기로 하다.

-평화문화팀 팀장으로 이권명희 정책위원이 선정되다

-평화문화팀의 성격과 사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를 하다.

-평화문화팀은 정책위 소속이 아닌 개별 독립된 팀으로 운영하기로 하다.

② 2차 회의

가. 일시: 2002년 10월 10일 오후 2시

나. 장소: 본 회 사무실

다. 참석: 이권명희, 최정현진, 김엘리

라. 내용: 평화문화팀의 성격 논의, 2003년 캠페인 사업을 위한 적절한 소재 찾기

3. 전문가 보람: 김대중 평화통일정책 평가와 여성통일운동 개회-평통위, 연구원 공동

①일시 : 2002년 11월 6일(수) 오후 3시~6시

②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③참석 : 평화, 통일, 여성분야 전문가 25명

④내용

-사회: 이길현속 상임대표

-발제1: 김대중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평가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2: 여성평화통일운동의 평가와 전망 / 정현택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전체토론

4. 대중포럼: 대선주자들의 평화, 통일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개최-평통위, 연구원 공동

①일시 : 2002년 12월 4일(수) 오후 2시 - 5시

②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③참석자: 25 명

④내용 : -사회: 김숙임 공동대표

-기조발제 1: 대선주자들의 평화, 통일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지경토론 : 통일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 윤덕희(명지대 북한학 교수)

여성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 남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군사,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전체 토론

(4) 사업평가

(1) 성과

-여성평화운동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 논의구조 형성과 이의 정기적인 모임 개최를 통하여 평화운동에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을 모색하고 명료화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본회 사업방향과 조직운영을 위한 정책협의에 중점을 두어 본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업의 성격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평화통일정책의 전문가 포럼과 대중포럼을 통해서 현 정부와 대선후보자들의 평화통일 정책을 여성운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사업, 평화문화사업 등 앞으로 개발되어야할 사업내용을 모색함으로써 일상의

살에서의 여성평화운동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2) 과제

-정책과제를 통일, 군축 등 과제별로 세분화하여 논의하는 주제별 팀을 구성하여 중앙
기적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심화시키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정착시켜야 한다.

-정책관련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회 중앙기적 사업 방향과 단계별 추진 활동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
평화운동 전장을 논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내부 논의 구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평화여성인력을 배출하는 그룹,창구의 기능과 여성의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여성평화운
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천가능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평화교육위원회

(보고자: 임희숙 위원장)

위원장 : 임희숙

위 원 : 김숙임, 김경수, 김희숙, 박애경

사무국 : 이은하 평화교육부장 (전은주 사무국장)

(1) 사업목표

- 1) 평화의식과 통일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화교육 실시
- 2) 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평화운동 여성지도력 개발
- 3)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활동 전개

(2) 회의

① 1차

일시: 2002년 1월4일(금)오후 4시

장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참석: 김숙임, 임희숙, 박애경, 김경수, 이은하

② 2차

일시: 2002년 3월4일(월)오후 4시

장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참석: 임희숙, 김숙임, 박애경, 김경수, 이은하

③ 3차

일시: 2002년 4월17일(수)오후 6시

장소: 본 회 회의실

참석: 임희숙, 김숙임, 박애경, 김정수, 이은라

④ 4차

일시: 2002년 9월 9일(월) 오후 6시

장소: 사당동 na1커피숍

참석: 임희숙, 김숙임, 김희숙, 박애경, 전은주

⑤ 캠프기획회의

일시: 2002년 6월 17일(월) 오전10시

장소: 본 회 회의실

참석: 임희숙, 이은라, 최정현진, 이나영, 홍아

⑥ 캠프교사 워크샵

일시: 2002년 7월 5일(금) 오전11시

장소: 어머니의 뜰

참석: 임희숙, 최정현진, 장희원, 홍아, 최우정

(3) 사업내용

1)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 training 및 청소년 평화캠프

○ 목적

- ① 여성주의와 평화교육 집목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 ②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의 폭력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
- ③ 소녀들의 평화의식 고양

○ 내용

- ① 홍보를 통해 모집된 10명의 사업지원자를 대상으로 총 8회의 내부 워크샵을 개최하여 평화교육과 여성주의적 시각의 집목을 해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컨텐츠를 재교육한다.
- ② 워크샵으로 훈련된 평화교육 전문가 10명을 캠프에 투입시켜 소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위협롭게 하는 반평화적 요소는 무엇인지, 여성으로서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육한다.

○ 기간 : 2002년 3월~8월

○ 대상 :

- 1)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 training : 여성평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 및 일반여성(여성단체, 대학생 등등) 10명
 - 2) 여중생 평화캠프 : 서울·경기 지역의 여중생 30명
- 사업 전개방법 : 워크샵, 캠프
 - 후원 : 한국여성재단
 - 추진내용 :

<청소년 캠프 강사 training>

- 일시: 4월19일~6월7일
-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 교육장
- 목표: 청소년 평화 캠프를 진행하고 도와를 강사들을 사전에 groupwork를 통하여 이론적, 실천적으로 준비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 훈련 대상: 계단실, 김숙임, 김경수, 문이은하, 임희숙, 이난규, 강김현주, 강희원, 최경현진, 허지연, 홍준희, 홍아 등
- 내용

순서(형식)	날짜	주 제	강사
2강(강의)	4월19일	도래중재	이재영/KAC강사
1강(강의)	4월26일	평화교육의 이해	김경수/본회교육위원
3강 (캠프준비)	5월3일	춤을 통해 바라본 청소년들(춤 배우기)	홍아/전문강사
4강(강의)	5월10일	오늘날의 청소년 이해 및 지도 시 유의점	임희숙/교육위원장
5강(강의/캠프 준비)	5월17일	평화교육을 위한 교안작성 및 교수법 친해지기 게임, 끝내기 게임	임희숙/교육위원장 최경현진/본회정보간사
6강(캠프준비)	5월24일	토론연극 끼어들기	박경필/국단 현장

<청소년 평화캠프>

- 일시: 7월22일 오전10시~7월23일 오후6시(1박2일)
- 장소: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 목표: 여중생의 평화의식을 고양시켜 바람직한 성정체성을 확립시킨다.
- 참가: 22명
- 프로그램내용:

시간	7월 22일(월)	7월 23일(화)
7:30-9:00		기상/아침식사
9:00-9:30		[전체활동]몸, 마음을 평화롭게'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명상훈련 (김숙임/본 회 공동대표)
10:00-10:30	등록	[모듬활동]내가 만드는 평화(가면 만들기, 본뜨기)(진행: 작 조 담임)
10:00-12:00	[전체활동]마음을 여는 몸 놀이 (최우경/레크레이션 전문가)	맛있는 점심을 나눔
12:00-2:00	아, 점심시간이다.	
2:00-4:00	[모듬활동]자기 소개 프로그램 "나는 누구니?" (진행:작 조 담임)	함께 배우는 평화(모듬 활동 발표)
4:00-6:00	[모듬활동]만평화 드러내기 (일회속 교육위원장)	피날레: 평화행진(가장명령) (최경현진/ 본 회 스태프)
6:00-7:30	맛있는 저녁 나눔	
7:30-8:10	[전체활동]평화를 꿈꾸는 몸짓 (이정화/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8:30-10:30	[모듬활동]평화를 꿈꾸는 몸짓Ⅱ (이정화/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10:30-	평가 및 취침	

2) 여성평화아카데미(8기)

○ 목적

- ①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통해 일상의 반평화 형성구조와 평화감수성 형성에 대한 장애를 이해한다.
- ②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등 경험적 구체적 접근방법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감수성을 키운다.
- ③ 일상에서의 평화실천과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의식을 서민들에게 확대시켜가면서 경험적 대화마당을 통해 여성들이 평화 세상을 향한 사회행동의 주제로 실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교육적 접근방법을 통한 여성들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 개발
 평화의 감수성 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을 통해 여성전문인력 발굴 제기 마련
 구체적 실천훈련을 통해 추상적 평화문화에서 구체적인 평화문화로 인식전환
 평화와 통일에 소외되어왔던 여성들의 평화감수성개발로 여성의 주체성 형성
 평화감수성 훈련을 통한 사회전반의 평화의식과 문화를 확산

- 일시 : 2002년 10월 10일~11월 28일 매주(목) 오후7시~9시

(단, 10월31일, 11월21일은 오후10시까지)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810-5075*6)

○ 내용 :

순서	날짜	시간	제목	강사
1강	10월10일	오후7:00~9:00	여성생 죽음과 불평등한 SOFA	김용한 기지공대학 김영희위원장
2강	10월17일	오후7:00~9:00	군사주의와 여성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3강	10월24일	오후7:00~9:00	부끄러운 역사를 평화와 화해로 꺼안은 여성들	차미경 베트남전실위 원회 집행위원장
4강	10월31일	오후7:00~8:30	아프간의 땅, 여성이기를 무 장해야 하는가?	김영미 일본니혼TV PD
5강	10월31일	오후8:30~10:00	여성평화의 눈으로 대중문화 를새 가기	김현미 연세대학교 수
6강	11월 7일	오후7:00~9:00	저, 여성, 섹슈얼리티	김영리 평화여성회 정책위원장
7강	11월14일	오후7:00~9:00	최근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박순성 동국대학교 수
8강	11월21일	오후7:00~8:30	우리 안의 반공주의를 돌아보 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
9강	11월21일	오후8:30~10:00	평화를 위한 대화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10강	11월28일	오후7:00~9:00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여성 평화운동	이김현숙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4) 사업평가

<평화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 훈련>

- 이런 강사 훈련은 비회원인 다수 포함됐다. 평화여성회는 이번 평화교육 전문가 강사 훈련을 통해 평화운동이 무엇인지 평화여성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화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 청소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고민함으로써 커뮤니티 댄스, 토론 연극 등 다양한 교수법과 방법론에 대한 창의적 시도들 해 보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강사진들을 평화운동의 장으로 끌어들이 문화운동과 평화운동의 접합점을 찾음으로써 평화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성과도 얻었다.
- 청소년캠프 강사활동을 담당하긴 했지만 지속적 관리와 내용으로 내부의 강사뱅크를 형성하여 본 회 활동으로 지속화시키는 역할을 잊지는 못했다.

<청소년 평화캠프>

- 1) 평화여성회는 그동안 성인 중심의 평화운동에 쫓겨왔다. 이번 청소년 평화캠프는 평화운동의 주체를 청소년 지층으로까지 확대시켰다는 조직적 성과를 얻었다.
- 2) 평화여성회는 청소년 평화 캠프 '내 안의 평화를 느껴봐'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폭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평화여성회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평화운동단체인 평화여성회가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장기적 안목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 3) 평화여성회는 아직 청소년 캠프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내실화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강사후원을 통해 배출된 교사들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후 또래중재교육, 청소년 평화영상 등의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4) 담론으로만 접했던 청소년들의 문제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는 점, 캠프 강사 후원을 통해 평화운동과 평화여성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사업이 평화 여성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 5) 청소년 평화캠프에 참가한 22명의 여성생들은 1박2일 동안 진행된 캠프를 통해 일상을 잊고 재미있게 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직면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평화'문제를 도출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따라서 기획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과 평화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살려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해 현장교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여성평화아카데미>

- 1) 평화감수성 개발후원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수요층(10명)을 발굴하여 여성전문인력 발굴에 기초토대를 마련하면서 참가자들에게는 행사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을 제공하였다.
- 2) 사업이 끝난 이후 <갈등해결 커뮤니티>와 <여성평화아카데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면제와 관리를 시도하면서 의사소통 구조를 이어내었다.
- 3) 사회의 근본문제에서부터 최근의 여성생사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하면서 여성들에게 좀 더 포괄적인 평화의식과 주변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인식하면서 평화감수성을 사회로 확대하는 경험을 느끼게 해 주었다.
- 4) 기획이 좋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서 평생교육 매뉴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교육과정에 경험했던 부분을 '자신의 문제', '나와 이웃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었다.
- 5) 담당실무자가 퇴직하는 관계로 실무집행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 추진일정 또한 늦어졌다.
- 6) 여러 가지 변수로 참가자 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홍보 방안과 기회

으로 참가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평화통일사업위원회

(보고: 홍승희 위원장)

위원장 : 홍승희

위 원 : 안수경, 고은실, 윤수경, 김유신

(1) 사업목표

- 1) 민족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중사업 전개
- 2) 반전 평화운동의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
- 3) 회원들의 구체적 욕구분석으로 회원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사업 전개
- 4) 대중사업확대를 통한 위원보강으로 안정적인 논의구조 정착

(2) 회의

① 1차

일시 : 2002년 5월 20일 (월) 오후 6시

장소 : 여성신문사 사무실

참석 : 홍승희, 김유신, 김현희

② 2차

일시 : 2002년 12월 26일 (목) 오전 12시

장소 : 충무로역 커피숍

참석 : 홍승희, 김현희

(3) 사업내용

1) F-15K 반대 사이버 행동

가. 사전회의 : 2002년 4월 1회 5월 1회

나. 활동기간 : 2002년 5월24일 -

다. 사업목적 : 의혹 무성인인 F-15K도입 반대 및 대통령 재가거부 운동에 대중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여론화한다.

라. 사업내용 : 'F-15K 반대 사이버 행동'

524 세계 여성 평화의 군축의 해를 맞이하여 40여개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F15K도입

반대

대통령 재가 거부운동을 시민의 신문사와 공동으로 ON LINE사이버 운동을 전개하다.
이는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소속, 하고싶은 말 등을 적어 청와대에 대통령 재가거부를 요청하는 항의 비행기 날리기이다.

※ F-15K반대 사이버 행동 글 : [자료집 글모음 참조](#)



다. 사업평가

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회, 여성단체 뿐 아니라 직장인, 주부, 학생,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사이버 운동에 동참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② 또한 한눈에 F15K 도입반대의 글을 웹사이트 상에서 볼 수 있어 F15K도입 반대의 여론을 읽을 수 있다.

③ 안보, 군사영역인 무기도입 감시에 관한 평화운동에 여성 참여가 그동안 소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이버 운동은 다수의 일반 여성들에게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성 스스로가 국방, 안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과, 여성들을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④ 40여개의 여성단체가 공동주최 함에도 불구하고 글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수적으로 작년 오마이뉴스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평화특지 날리기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이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운동은 네티즌들의 참여가 활발한 사이트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네티즌의 참여가 활발한 사이트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주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 세미나 '남북여성교류와 통일교육'

가. 일시 : 2002년 9월4일(수) 오후 3시-6시30분

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다. 참가인원 : 35명

라. 후원 : 통일교육협의회

마. 사업목적 :

- ① 남북한 통일대비 여성통일 전문인력 양성에 기반이 될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여성과 평화의 관점이 반영된 통일교육을 개발한다.
- ③ 남성중심의 통일교육을 극복하여 통일교육에 있어서 여성지도력을 수립한다.
- ④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방안모색으로 통일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시대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한다.

바. 사업내용 :

1부 소개 및 발제 (15:00-16:30)

- 인사 및 소개

사회자 : 임희숙 (평화여성회 평화교육위원장, 한신대학교 교육학 교수)

- 기초발제 1 국제정세 변화와 사회문화교류의 전망 :

구갑우 (경남대학원 북한학 교수)

- 기초발제 2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김현숙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기초발제 3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

함인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교수)

2부 토론 및 질의 응답 (16:30-18:00)

발제 1 지정토론 :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발제 2 지정토론 :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지연구 부장)

발제 3 지정토론 : 김정수 (평화여성회 평화교육위원, 성공회대 평화윤리박사과정)

전체토론 : 참가자 전체 발언 및 토론

사. 사업평가

- ① 10월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앞두고 시의 적절한 주제 선정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많지 않아 홍보의 진척 및 다양한 홍보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② 남성의 전문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통일교육 분야에 여성통일운동 지도력을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남녀평등에 기여하게 된다.
- ③ 남북여성교류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여성교류의 지평을 넓혀간다.
- ④ 대중 세미나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고 친밀하게 다가 설 수 있는 참신한 제목 선정

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 ⑤ 발제에 있어서 남북여성교류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였다. 전체적 연결을 위해 발제자들에게 사전에 대략적인 내용의 틀거리와 구조를 주어야 한다.

4) 어린이 평화통일 인형극

가. 기간 : 2002년 9월24일 ~ 29일

나. 후원 : 행정자치부

다. 공연 : 평화여성회 '타라'문화예술단

라. 장소 : 학교, 복지기관, 문화센터 등

마. 사업목적 : 미래의 통일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은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분단의 잔재를 경험하고 있으며 늘 평화의 위협요소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참마', '학교폭력', '일등주의' 등 어린이문화에서도 사회구조적 폭력이 만연해 있기에 정서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평화의 심성이 사라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평화심성이 사라지기 전에 관용과 화해, 평화, 통일에 대한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제기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는 유네스코에서 '비폭력을 위한 어린이 10년사업의 해'이기도 하다.

작년 본 단체에서 추진한 평화통일인형극은 전국적으로 규모나 호감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으며 그런 대중적 성과가 큰 문화적 접근방식의 교육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평화통일인형극 널리 보급하여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심성을 자연스럽게 키우고자 한다.

바. 프로그램 내용

작품해설 : '땅따먹기와 송송이'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이다.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곁에 늘 스며들어 있는 문제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제이지만 북한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작품 형식은 전달효과 뿐 아니라 감동을 얻어드릴 수 있다

평화통일 인형극 '땅따먹기와 송송이'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우화와 동화 기법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장인물을 사람대신 동물로 세웠고, 중간 중간 해설자 할머니를 등장시킴으로써 옛날 이야기적 방법을 통한 친근감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양식을 통해 통일 인형극'땅따먹기와 송송이'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담긴 평화, 통일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 인형극을 통해 점점 더 폭력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실에서의 모습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어린이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사. 관람인원 : 1,600여명

아. 일정표

일시	주관	장소	참여
9월24일(화)오전11시	인천YWCA연합회	인천YWCA선학어린이집	150
9월25일(수)오전11시	강화여전 부설 성북역 상당소	강화문예회관 2층 소강당	250
9월26일(목)오전10시	인수초등학교	다목적실	200
9월26일(목)오전11시	인수초등학교	다목적실	200
9월26일(목)오후2시30분	서울YWCA가락지부	서울YWCA가락지부 3층	100
9월27일(금)오전11시	서울YWCA봉천지부	서울YWCA 봉천지부강당	100
9월28일(토)오전9시30분	신미림초등학교	시청각실	100
9월28일(토)오전12시	신미림초등학교	시청각실	100
9월29일(일)오후2시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	300
9월29일(일)오후4시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	300

자. 사업평가

① 외부 참가소감

ㄱ. 인천 YWCA 선학어린이집 / 이옥선 원장

<인형극>을 처음 소개 받을때는 6-7세 친구들이 관람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준이라고 해 걱정의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며 걱정의 마음이 조금씩 수그러져갔다.

대경 및 셋드들이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졌고, '단팥구'라는 노래를 관람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어 단어를 친숙하게 접근시킴도 좋은 방법이었다.

주인공 인형들이 큰거리, 장거리 보시를 위해 손가락 인형과 리듬 인형옷을 입고 등장했던 모습은 그동안 접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맛과 감동을 느끼게 해 주어 유아들에게도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다. 단, 노래 지도가 좀더 적극적이었던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었겠고, 음향 소리가 조금더 컸다면 집중이 잘 되어 감동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도 갖아본다. 솔직한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인형극을 보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ㄴ. 인수초등학교 / 이은주 선생님

일단 장소가 너무 비좁고 인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웠지만 인형극을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그 분위기만이라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장치, 음향, 인형들, 실감나는 연기.. 모두 너무 좋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인형극이 10살 이하 정도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교사가 주의집중을 시켜 줄 수 있지만, 일단 인형극이 시작되면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것은 인형극단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교사가, "너 조용히 해!"... 등등의 말을 하는 것은 분위기를 깨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인형극 중간중간에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노래, 율동 등을 함께 하는 것 등등. 이 인형극에서도 호랑이가 나와서 방귀를 뀌는 행동,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동 등이 있었으나,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극의 내용보다도, 시청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니까요. 또 아무리 좋은 내용도 지루하다거나, 다른 떠드는 아이들로 인하여 집중을 할 수 없다면 내용 전달이 어려워질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인형극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그 밖의 짧은 이유로..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으로 학교 밖을 빠져나가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관람료까지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지요.

이런 점에서 이번 인형극을 무료로, 또 학교 앞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해 주신 주최측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㉔. 봉천 YWCA 유치원 - "땅땅이와 승승이"를 보고 나서

"땅땅"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선택해서 인지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남과북"이라는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설정을 토끼라는 동물로 표현 하여 비교적 쉽게 전달되었다.

동장인물들이 어린이들 가까이에서 간혹 스킨십을 해주고 하면서, 함께 하는 인형극을 만들어 준 것 같아 참 좋았지만 음향(동장인물들의 목소리, 배경음악)이 다소 적은 것이 아쉽다.

㉕. YWCA 본부 / 최인숙 부장

첫째는 도입부분이 좀 길고 설명적이라는 느낌입니다. 도입부분을 좀더 가볍게, 축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전체적으로 30분이라는 시간이 좀 긴 듯합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평화'와 '화합'이라는 메시지가 더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 아이들한테는 좀 길다는 느낌입니다. 20분 내외가 좋을 듯합니다.

셋째 평화통일 인형극이지만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다는 작가의 말처럼, 인형극 공연 전후에 간단한 설명이 있는 후에 공연이 있으면 좋겠구요. 인형극 자체의 공연보다는 전체적인 평화통일 교육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면에서 좀 일반적인 느낌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관객(어린이)과 함께

feed back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좋겠습니다.

□ 서울신미림초등학교 / 양홍엽교사

학교에서 아이들이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드끼와 산드끼로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점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학년 수준의 공연이었고 어린이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우 즐거워하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듯하여 의미가 있었습니다. 땅땅이와 뽕뽕이의 행동을 흉내내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희망사항으로 자주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연시 조명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좀 더 아름다운 언어 사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② 사무처 및 평론위 평가

인형극과 같은 문화공연은 메시지, 예술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신나고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래, 음악, 춤의 요소가 들어간 뮤지컬적인 요소는 많은 도움이 된다.

'통일'이라는 문제를 통일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내용을 풍부한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접수자의 신청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평화통일 인형극에 대한 수요 및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통일 인형극에 대한 수요가 많이 요청되는 만큼 후원 협찬 및 홍보를 확대하여 평화통일 인형극을 년 중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상의 배너(광고포함) 및 후원협찬 확보 또는 초등학교 관련 사이트, 초등학교 관련 교재 개발에 후원을 요청하는 것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5) 여성평화통일포럼

□ 김대중 평화통일정책 평가와 여성통일운동 (전문가포럼)

가. 일시 : 11월 6일 오후 3시~6시

나.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다. 대상 : 전문가 15인 내외

라. 참가자 : 기존의 전문가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여명 참가

마. 목적 :

- ① 여성적 시각에서 김대중 정부 평화, 통일정책을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

써 차기 정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평화통일 전문가들 사이의 토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정책과 여성참여 문제를 논의한다.

바. 내용 :

사 회 : 이 김현숙 상임대표

발제 1 : 김대중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평가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 (불암서 파리 제2대학정치학 박사학위취득)

발제 2 : 여성평화통일운동

장현택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토 론 : 15명 전문가 전체가 토론자로 참여

사. 참가 : 여성단체 종전 간부, 통일,평화분야 전문가 등

김경미(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김경애 (한겨레신문 기자), 김민정(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 김승국(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노귀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연구교수), 서미숙(평화여성회 재정위원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금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김현숙(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이평희(상지대 강사), 이정자(평화여성회 이사), 임순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숙(한신대강사), 전은주(평화여성회 이사), 정경란(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장현택(한국여연 공동대표), 최성미(한국여연 조직국장), 전은주(평화여성회 사무국장), 김현희(평화여성회 평통부장)

아. 사업평가

- ① 김대중 정부의 말기 즈음에 전반적인 평화,통일정책을 평가하는 포럼은 시의성이 있었으며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포럼과는 달리 여성적 시각을 도입한 것은 차별화가 있다.
- ② 김대중 정부 평화통일 정책 평가 (전문가 포럼)에서 참여자 전체를 지정 토론자로 진행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나온 몇몇 중요한 의견들은 2002 여성여성연대 평화, 통일 정책 분야에 반영되어 정책제안의 효과도 있었다.
- ③ 약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 개최를 통하여 향후 전문가 그룹 인프라 형성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자. 한계 및 보완

- ① 전문가 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총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② 사전에 언론사에게 포럼의 내용을 간추려서 알려주어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

□ 대선주자들의 평화, 통일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대중포럼)

가. 일시 : 2002년 12월 4일 (수) 오후 2시 - 5시

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다. 목적 :

① 대선후보 주자들의 평화통일 정책을 여성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검증한다.

②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정착시켜 나갈 주자를 선출하는데 관점과 기준점을 마련한다.

라. 참가대상 : 평화운동에 관심있는 일반인, 대학생, 여성

마. 행사 내용

-사회자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기조발제 1(20') 대선주자들의 평화, 통일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지정도론 1(10') 통일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윤덕희(명지대 북한학 교수)

-지정도론 2(10') 여성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남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지정도론 3(10') 군사,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

정육식(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

- 전체 토론

바. 사업평가 :

① 대중포럼 역시 대선 일을 앞두고 2002 대선 후보들의 평화통일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의 주제선정은 시의성이 있었으며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포럼과는 달리 여성적 시각을 도입한 것은 큰 차별화가 있다.

② 2002 대선후보들의 평화통일 정책을 여성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검증해 보고 이를 통하여 대선 후보자들의 평화통일 정책 평가의 기준과 관점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 스터디 모임 : 한미 소파를 통해 바라본 불평등한 한미관계 인식

가. 일시 : 매주 금요일 주 1회 (2002년 11월 ~)

나. 참여 : 김현희(담당), 조경훈, 김정화, 김수길, 장정옥, 박준서

일 정	내 용	자 료
11월8일	인사 및 소개	
11월15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출발	미군정약사관련
11월22일	해방전후 바라보기(주변국가)	한국헌법사
11월29일	두 여중생의 죽음을 통해 바라 본 형사재판권	미군법피와 한미소과 두 여중생의 죽음사례
12월6일	불평등한 한미 SOFA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한미소과개정안의 취지
12월14일	주권회복의날 '10만 범국민 평화대행진'	피켓만들기, 사진,기사올리기
12월20일	인사 청구권	미군법피와 한미소과
12월27일	미군 공여지, LFP	미군법피와 한미소과
1월10일	환경, 노무, 출입국, 통관,과세외	미군법피와 한미소과
1월14일	소과개정운동 집회 참여	피켓만들기, 사진,기사올리기
1월24일	외국소과와 한미소과와의 비교	인터넷자료
1월31일	쉽게 익히는 한미소과 OX퀴즈	

다. 평가

- ① 회원조직 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성회내의 회원조직사업이 활발하지 않음을 비추어 보았을 때 소모임이 구성된 것만으로도 평화여성회 내의 조직적 성과이다. 현재 모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임회원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 ② 여중생 사건과 맞물려 소과개정의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커진 만큼 소과개정 스터디 모임은 시의 적절하다. 이번 주제는 2003년 1월에 마지게 되는데 그 이후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계속 모임을 연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③ 스터디 모임내에 자료와 경험, 지식이 축적되면 평화여성회와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운동의 공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경제평가

올해 첫 번째 사업목표로 제시되었던 민족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중사업전개는 작년에도 이어 평화통일 인형극을 통해 전국 1,600여명의 아동들에게 관광의 기회를 주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다. 두 번째 사업목표로 제시되었던 반전 평화운동의 대중화와 확산을 위한 사업전개는 F-15K 도입반대 사이버 행동이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주부, 직장인, 단체, 청소년, 어린이, 외국거주자를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여 대중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 사업목표로 제시되었던 회원들의 구체적 욕구분석으로 회원 결함력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사업 전개는 시의 적절한 주제선정을 가지고 대중포럼을 2회 개최하였고 포럼에 평화여성회의 회원들의 참여가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두명의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도마위 에 오른 불평등한 한미 SOFA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하여 공부할수 있는 모임을 새로 조직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던 목표 대중사업확대를 통한 워킹보장으로 안정적인 논의구조 정착은

구조 정착의 목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이루어 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현재 구성된 위원들도 각자 생업의 역할이 있어 평화통일위원회 모임구성도 어려움이 있어 기획 및 일의 추진과정의 상당부분이 사무처에서 감당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 기타 제언

- 포럼 -

① 새로운 강사 인력풀 구상

대중포럼과 전문가 포럼의 발제자 및 토론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대중포럼의 경우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수 있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갖춘사람, 경험과 직관이 풍부한 나이든 학자와 언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포럼의 경우는 전문성위주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② 대중강연의 확대

기존의 포럼방식에서 탈피 대중강연의 방식을 적극적 도입하여 대중의 참여를 확대한다.

③ 대토론회 개최

시대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구상해 본다. 이를 통해 한쪽에 치우친 의식의 강박을 깨뜨릴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토론회 사이트 개설 : 평화여성회 사이트내에 현재 이슈화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중의 참여를 확산시킨다. 한 예로 여중생 죽음으로 도마 위에 올라선 소과개정을 둘러싼 네티즌 토론헤방을 개설하여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본다.

4. 재정위원회

(보고: 서미숙 위원장)

위원장 : 서미숙

위 원 : 윤명선, 이유일, 최경원, 김현숙, 이나호

(1) 사업목표

- ① 재정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사업을 개발한다.
- ② 2002년 운영비를 재정사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③ 재정위원을 보강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

(2) 회의

① 1차-창립5주년 행사 운영소위(재정위 확대)

일시: 2002년 3월8일(금) 오후 4시

장소: 여성연구소

참석: 이김현숙, 김숙임, 심영희, 박수선, 이유일, 홍승희, 전은주, 김은희

내용: 창립5주년 행사 준비

② 2차

일시: 2002년 3월27일(목) 오후 5시

장소: 우리집 식당

참석: 서미숙, 이낙호, 김은희

내용: 2002년 사업계획논의, 평화카페 준비

③ 3차

일시: 2002년 5월9일(목) 오후 3시30분

장소: 회의실

참석: 서미숙, 이낙호, 전은주

내용: 5주년 기념행사-평화카페(바자) 준비

(3) 사업내용

1) 창립 5주년 기념행사 - 평화카페

① 협찬사와 협찬품

협찬사	협찬품	내역
도서출판 파스칼	전은주	포스터, 티켓 제작, 후원금 35만원
OJB맥주	사무처	240병
성주인터넷서널	김숙임	평화여성상 후원금 100만원
런나이코피아	서미숙	일회용 버너 후원금 50만원
한국여성회전화연합	이김현숙	액제모기향
무명주의	이김현숙, 최경원	웃

② 물품기증

성명	내역
전은주(이사)	막세사리 등
이나호(회원)	커피말공, 숯, 밀반관 등 70여만원 상당
박예경, 김숙임(대표)	옷
김현숙, 김현진(회원)	옷, 가방 등
손덕수	도자기
이현숙	신발, 가방등
전은주(사무국장)	옷, 신발, 장신구 등

③ 결산

<수입현황>

수입	항목	금액	비고
	디젯관대	16,170,000	
	외부후원금	8,630,000	
	바자관대수익	1,586,600	
	합계	26,406,600	

<지출현황>

지출	항목	금액	비고
	장소대관비	500,000	6개
	행사진행	420,000	100개
		120,000	
	뱃프로젝트대여	100,000	4다발
		60,000	심사위원석대
		70,000	
		1,000,000	150인분
식사	뷔페	1,500,000	
인쇄물	자료집제작	1,345,000	
	현수막	65,000	100봉
바자물품구매	미역	230,000	240개
	향초	240,000	20박스
우편발송		244,200	

	운송료, 교통비		252,100
	인건비	영상물제작사채	50,000
		비디오촬영및 편집	150,000/WOM
	사무비	문구,행사물품 등	156,100
	행사준비아근식대 등	실무자,자원봉사자	279,500
	진행팀 및풀이	식대,음료, 교통비 등	191,000
	합계		6,973,900

	수입		25,406,600
	지출		6,973,900
	순수익		19,432,700

2) 2002년 운영비 확보를 위한 회원과 후원자 확보

매월 3만원 특별후원금 결의자 : ·CMS 특별후원금 모집 현황(총 26명)

-2002년 9월부터 2년간 후원

1 이현숙	11 이낙호	21 임희숙
2 이경자	12 천은주	22 윤여명
3 신원관	13 김영림	23 강미선(1만원)
4 김우경	14 박원선	23 최기영(1만원)
5 이은숙	15 김정수	23
6 김현숙	16 서미숙	24 김귀옥
7 손덕수	17 정경란	25 윤덕희
8 김숙인	18 홍승희(4만원)	26 강남식
9 유명선	19 박수선	
10 안병선	20 이명희	

(4) 사업평가

가. 성과

1) 올해는 무엇보다 재정사업을 5주년기념행사로 확대하면서 평화여성상 제정, 5주년축회공연, 5주년좌담회 등 매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2) 임원을 비롯한 회원들의 헌신적인 결의로 특별후원금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임원들의 결의가 매우 감동적이고 뜻깊었다.

나. 과제

1) 평화과제는 재정위원들이 그동안 중심이 되어 진행해 왔지만 지정위원들의 부족과 창립5주년 행사규모를 확대하면서 그 담당영역도 확대해 왔다.

- 하지만 어떤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재정위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이후 수익사업은 좀 더 풍부하고,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성대한 행사를 위해 세심한 준비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정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 3) 2003년 행사시기도 미리 설정하여 시기(4월 셋째주 경)와 장소(성군관대 600주년 기념관 건물 후부)를 미리 협의하자.

5. 평화심성팀

(보고: 김숙임 팀장)

팀원 : 이낙호, 유은옥, 박애경, 박현선, 문명녀, 김현숙, 김현진, 김숙임, 송경란

(1) 사업방향

*방향

내적 평화를 통한 평화심성, 김수성 강화 그로 인한 평화운동의 발전 모색
 평화운동 그 내용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연구

*목적

여성평화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위한 모색
 평화주의자의 삶과 사고 고취
 평화적인 운동방식 연구
 평화여성회의 회원 활성화
 타 시민단체, 여성단체와 평화주의 마인드 공유, 운동에 대한 성찰과 연대

*내용

평화주의자에 관한 글 보기
 평화로운 삶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관찰하기
 기존의 명상에 대한 경험과 성찰하기
 몸과 마음의 평화 모색
 평화운동 방식에 관한 성찰과 개발
 평화시위문화 개발과 실행
 평화주의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나눔과 정리
 평화주의자의 평화운동 정립(여성주의적 관점 포함)

*단계

다양한 명상경험자 만나기
 우리 안의 명상 경험 나누기

평화주의자의 삶과 운동에 관한 공부하기

평화를 위한 개인과 일상의 삶 접근

한국시민사회, 여성과 함께 나눔 평화심성프로그램 개발

(2001년 9월19일 평화심성팀 모임에서 1차 합리, 모임은 6월21일에 시작함,
2002년 1월14일 제합의, 2002년 8월에 평화영상팀을 평화심성팀으로 바꿈)

(2) 정기모임

총11회 운영(1월14일, 2월5일, 3월19일, 4월16일, 5월21일, 7월30일, 8월20일, 9월17일, 10월21일, 11월25일, 12월25일)

생활나누기 및 주제별 대화와 경험하기, 명상체조, 걷기명상(행선), 호흡명상, 평화명상, 간디읽기, 활동가의 자세와 중심,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읽기, 턱낯한의 화, 불교와 명상, 음식나누기, 평화심성개발프로그램 논의와 역할 나누기, 평가

(3) 사업내용

1) 정기모임 운영

• 평가

월마다 계속되는 평화심성팀 모임을 통해 자신이 평안해짐을 느꼈고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되었다. 또 다양한 연령층의 교류를 통해 세대간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매애를 형성하였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평화로움과 명상기법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개인과 사회, 운동이 분리된 기존의 사회운동을 바라보던 시각이 평화심성팀 모임을 통해 개인과 사회, 운동이 일치될 수 있었다. 앞으로 평화심성개발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1차 평화심성개발프로그램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평화로운 사람,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가. 기간: 5월23일 - 7월4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

나. 장소: 강좌: 원불교종로교당3층 소법당(종로 (02-765-4781),

합숙: 봉도청소년수련원(수유리) (02-993-0029)

다. 대상: 여성운동가, 주부, 평화운동가, 시민운동가, 일반인 등 평화를 원하는 사람

라. 취지: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은 그간의 사회구조적인 부자유자 갈등으

로 인해 반평화적인 심성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식민지, 전쟁, 군부독재, 개발과 성장이라 그로 인한 경쟁의식,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준전시체제, 어둠을로기 논쟁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은 몹시 혼란스럽고 긴장과 불안, 압박감, 심리적 박탈감, 두려움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정신질환 경험에 있는 것으로 발표한다 있다.(2002년 2월 2월 한겨레신문)

이렇게 한국인의 심성이 파괴되고 자기정체성의 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의식 계몽을 위한 전서행체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거나,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등 개인적으로 문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분리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전쟁의 해'를 선포한 미국으로 인하여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운명이 걸잡을 수 없는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지금 진정한 평화주의자로서의 가치관과 심성, 사회행동을 한국사회에서 개발하고 확산하는 일은 다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내적 평화와 사회행동을 통합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인간내면의 평화, 나로부터 시작하는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심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이 요청된다.

진정한 개인의 정체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심화된 평화심성프로그램이 한국사회에서 실시된다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된 폭력성, 반평화적인 심성을 평화심성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내적 평화의 증진과 함께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평화심성개발을 통해 조화롭고 관용적인 인간, 평화로운 심성과 평화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즉 평화주의자를 확산할 수 있다. 평화와 기술만으로 인간의 변화가 근원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인간성성의 변화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과 노력이 확산될 때 평화공존을 위한 마인드 형성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의 평화문화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마. 목적

(1) 여성들의 삶에서 반평화적 심성을 성찰하게 한다.

자신 안에 있는 얼어붙은 마음, 불안과 걱정, 긴장과 경직, 부정적 마인드, 이분법적 사고, 비관론, 획일주의 등 반평화적 심성을 성찰하게 한다.

(2) 반평화적 심성을 극복, 평화심성을 개발하는 능력 향상
치유와 변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주의, 평화주의적 관점으로 정립

내 마음의 주인 되기, 내 몸의 주인 되기, 내 삶의 주인 되기

(4) 대안적 평화공동체 형성과 평화문화 확산

사회구조, 인간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진정한 나'를 찾아 '나와 '너', '세상'을 맞峙 향유하며 더불어 살기.

평화심성과 실천을 겸비한 평화주의자로 전쟁을 포함한 모든 폭력에 대응하고 대안적인 평화능력과 평화문화를 확산한다.

박, 주요내용

(1) 수행의 세계와 평화만들기-진정한 자아의 발견을 위하여 - 조연현('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저자, 한겨레신문 기자) 5월23일

참 나를 찾기 위한 다양한 수행의 세계를 알아보고 내적 평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의 평화와 정체성을 찾아가기

(2) 플라톤과 평화만들기- 관용의 철학이 왜 필요한가? - 홍세화('제 플라톤인가' 역자) 5월30일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사건, 사람에 대해 어떠한 이해와 태도를 가질 것인가.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가치로서 관용의 내용, 방법을 익히고 자신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모색한다.

(3) 명상의 실제 경험하기 : 3박4일 합숙 6월6-9일

① 명상을 위한 입문과정(내면으로의 여행) : 1박2일 - 오원명(명상아카데미 원장)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느끼며 버리는 명상의 과정을 배운다.

자신을 제대로 보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과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방법을 배우기

② 예술치료: 춤명상, 음악명상, 미술치료, 글쓰기명상 등: 2박3일 - 이향림(예술치료전문가)

1단계: 자기 안의 감정과 만남 -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기

2단계: 자기 안의 예술성과의 만남 - 모든 생각, 느낌을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3단계: 예술과 각성, 치유 - 예술매체를 통해 각성이 일어나 몸과 마음이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4) 평화주의자, 그 삶과 운동(간디, 바해, 루터 킹): 비폭력 평화주의 - 박성준(성공회대 겸임교수 평화학) 6월27일

모든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평화를 위한 헌신에 바친던 비폭력평화주의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날의 평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반평화적인 현실에 대한 그들의 고뇌와 평화를 위한 원칙, 방식, 비폭력을 위한 생각과 노력을 알아보며 구체적인 교훈을 정리해본다.

(5) 평화주의자, 그 삶과 운동 (티나한, 달라이 라마, 슬라키 시바라사)- 정용기(참여불교 재가연대 국제협력국장) 6월20일

나와 세상의 문제를 언기적 세계관으로 보며 외적 평화와 내적 평화를 함께 구현하려는 불교 평화운동가들의 사상과 평상의 세계를 찾아가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그 조화와 균형의 눈을 제공한다.

(6) 티벳인의 삶, 수행, 내적 평화 - 주민황(동국대인도철학과 강사, '나의 아들 달라이 라마' 등의 역자) 6월13일

열악한 조건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티벳인의 지력과 깨달음을 향한 수행, 정진하는 삶을 돌아본다. 티벳인의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로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본다. 티벳 여성들의 삶과 지혜도 함께.

(7) 몸을 평화롭게 - 이유명호(대한어한외사회 부회장, '살에게 말을 걸어봐' 저자) 7월4일

몸에 대한 이해와 몸의 치유, 여성으로서 자기 몸 사랑하기 등을 통해 일상에서 자기 몸을 관찰하여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토론 및 평가자: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 김숙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4) 사업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역사의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예외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재 발전 방안, 다음 프로그램의 내용, 준비내용 등

① 실무차별

• 긍정적 측면

기획과 진척진행에 있어 사람들의 내적 욕구를 잘 맞춘, 참여자들의 내적 평화를 향한 욕구를 잘 파악하며 주제선정이 좋았고 짜임새가 있었음. 참가자들의 질적 수준도 높았음. 참가자들을 잘 모았음.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음. 교육방식과 장소,진척진행이 좋았음.

• 다음을 위해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점

강의와 질문 시간이 짧아 아쉬운 점이 있었음. 한 주제에 포함된 내용이 많았다. 앞으로는 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그리고 좀 더 데이터한 교육방식(시청각, 체험하기 등)도 필요함. 기획에 맞는 강의를 위해 적합한 강사가 선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강사뱅크가 부족함. 욕구를 건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이번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었지만 다음 프로그램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과 전문강사가 필요하다. 댄스 등의 보다 신나는 프로그램과 각 종교의 평화사상 특히 케이커 등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연문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기획기사도 더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학부모회, 부녀회, 여성회관 등도 탐색한다.

② 평화명상팀

*긍정적인 측면

평화심성프로그램 실시가 그 내용과 방식이 처음인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는 주요하였다. 이후 진행되는 타 단체의 유사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다.

평화여성회의 평화심성프로그램이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에 좋은 조건을 불러 일으켰음, 기획력과 팀력이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음을 위해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점

명상에 관해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총 자제를 배울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전문가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함. 유불선 사상과 다양한 사상가를 초청했으면 함. 명상음악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 직장인과 지역사람들을 위한 순회프로그램도 필요함.

③ 총진행자로서의 평가

평화교육에 있어 평화심성개발이라는 새로운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려고 한 시도였다. 평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조적 반평화와 관계(국가, 조직, 인간)의 반평화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평화아카데미와 갈등해결전문가훈련역사 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개인의 보다 근본적인 심성을 성찰하는 데서 출발하는 평화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평화적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조직과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박힌 반평화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제거하는데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번의 프로그램 실시로 당장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점으로 보아 대중의 참여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의 피폐함 속에서 평화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높은 지, 그리고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 수 있었음.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평화심성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치밀한 준비가 장기간 필요하다. 평화주의자의 삶과 운동, 평화주의적 가치형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평화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대군장갑차에 압사한 여중생(미선과 효순) 여성추모제 - 진혼명상과 진혼춤 공연
평화심성팀은 흰색 옷에 빨간 띠를 메고 면발의 차림으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명상음악에 맞춰 효순이와 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우리 여성들이 소파개정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하는 평화의 씨앗이 되겠다는 다짐을 특정한 동작에 실어 명상을 진행하였다. 미어서 여중생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모아 진혼춤을 추었다.

한국사회에서 시위참여자과 평화명상을 진행한 것은 평화시위문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가두집회에서 개인의 평화적 감수성을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평화심성팀원들의 자긍심과 소명감을 높일 수 있었다. 시위참여자들에게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평화시위문화를 실시해주어 고맙다는 민사와 함께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평화시위를 위한 명상춤에 대한 연구와 연습이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6. 갈등해결팀

(보고: 박수선 팀장)

팀장: 박수선

팀원: 김정수, 김학목, 이재영, 강운경, 정경란, 최현진

(1) 사업목표

1.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의 다양한 방법 모색, 실천
2.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확대로 교사들에게 갈등해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적 요구를 높인다.-심화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연결

(2) 회의

3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마다 회의를 진행하여 30여회 정도 회의 진행(각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3) 사업내용

1)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2002 중등교감자격연수' 갈등해결 프로그램(8시간)

가. 일시 : 5월 1일~5월 23일 16차시

나.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다. 배경 : 이 교육은 교감 자격을 얻게 되는 연수로, 공립 중등학교 교감 희망자는 반드시 이수하고, 성적이 좋아 교감으로 발령을 받는 자격연수이다. 사립중등학교의 경우, 이사장이 교감 발령의 권한을 가지므로 발령에는 상관이 없지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이다. 이번 연수의 전체 참가자는 133명이다. 연수의 총 시간은 150시간이며, 그 중 8시간을 평화물만드는여성회에 '갈등해결과 존용'이라는 제목으로 대정하였다. 이 연수는 정현택 여성평화연구원장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일 강사가 아니라, 팀 단위로 수업을 맡기게 된 것은 연수원 측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한 과목당 8시간 배

정이라는 것도 드문 일에 속한다. 게다가 보통 1만 33~35명으로 강의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다른 수업과 달리, 1팀 16~17명으로 분반해서 워크샵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목은 논술평가 항목에도 포함되며, 수업을 마친 뒤 100분 동안의 10점 배점의 논술시험을 치렀다.

라. 목표 :

*평화여성회의 목표

- 1) 학교의 행정주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감(예비)들에게 갈등해결에 대해 이해를 높임으로써 앞으로 제도화의 배경을 만든다.
- 2) '갈등해결'이 한국의 현실, 특히 학교 현실에 어떻게 적용가능한지의 시험대로서 교육을 활용한다.

*참가대상 목표

- 1) 학교의 운영 결정을 책임지는 교감(예비)들의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을 키운다.
- 2) 학교의 한 주체인 학생들에게 평화감수성을 키우고 갈등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방법에 대해 모색해본다.

마. 참여강사: 김정수, 김학묵, 정경란, 박수선, 이은아

바. 교육내용 :

차시	교육내용	교수방법	준비물
1	1. 갈등의 개념 2. 평화적 갈등해결의 의미,내용 3. 갈등분석, 실습	강의, 활동(Activity) 실습 및 그룹토론	Work Sheet 갈등대응유형 Test지 예치편 등, OHP 사용
2	1. 중재의 원칙과 과정 2. 중재실습 3. 평화교육과 미래중재 4. 평가	강의, 활동(Activity) 실습 및 토론	시나리오, Work Sheet 평가지 OHP 사용

사. 평가(참여자들의 평가를 기초로)

*성과

1. 수업방법이 참신했다.(참여식 수업,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업, 실습 중심, 다양한 도구준비 등)
2. '갈등'에 관한 학구적 이해: 단지 문제와 방법으로만 이해했던 것에서 갈등-해결-이론-다시 문제-해결의 순환을 가지는 현실적 학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
3. 갈등에 대해 직면,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로서의 의미
기타 : 장기적 계획으로 적용례를 수 있는 창의적 방법에 대한 이해

*과제

1. 시간 대비 체계적 프로그램 디자인

2.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준비
 3. 개념, 자료의 체계화 필요
 4. 한국적 사례개발, 한국의 상황과 역사에서의 '갈등해결' 경험 발굴이 필요하다
 5. 진행자의 진행에 대한 더 많은 경험과 훈련
 6. 참가자들의 의지에 따른 목표설정과 그 목표 중심의 수업 연구가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보면 평화여성회의 목표인 '갈등해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예비교감들에게 인식시키는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 모든 참가자들이 내용에 공감하고, 그 훈련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상의 특성,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승진, 발령)을 가진 참가자들, 순발력과 사고의 전환이 어려운 50대(평균/40대 조금, 50대 기본, 60대 조금)라는 이 연수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때 무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기타: 2월 3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주최하는 '2003 중등 일반사회과 1명 자격연수'에도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4시간 진행했다.

2) 춘천교대 대학원 갈등해결워크샵 프로그램

가. 일시: 7월 26일(금)~27일(토)

나. 장소: 홍천 산장

다. 참가자: 춘천교대 대학원 통일교육과 학생(현 초등교사들)

라. 진행자: 김정수, 박수선, 이재명, 정경만, 장윤경, 최현진

마. 배경: 이 워크샵은 평화여성회 주최가 아닌 1박2일 워크샵을 의뢰받아 진행한 워크샵이다. 춘천교대 대학원 통일교육과의 요청을 받아 디자인부터 모든 진행을 평화여성회 갈등해결팀에서 맡아서 한 것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집중 워크샵으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방식이다.

바. 프로그램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명
7월 26일 (금)	09:30 - 10:30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 일정 소개, 참가자 소개	박수선
	10:30 - 12:00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의미	김정수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6:30	갈등해결 이해하기 -갈등분쟁 개념, 이론적 배경, 평화적 갈등해결 이론? 갈등해결 적용방법 및 분야	이재명
	16:30 - 18:30	갈등분석 연습	정경만
	18:30 - 19:30	저녁식사	
	19:30 -		

7월 27일 (토)	09:00 - 11:00	갈등해결방법론 태우기-중재실습	박수선
	11:00 - 12:00	외국의 갈등해결교육 사례(도대중재) 소개 토론: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 갈등해결교육의 적용 모색	김경수
	12:00 - 13:00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기대와 전망	박수선

사. 평가 :

평화여성회 직접 주최가 아닌 워크샵의 디자인과 진행을 담당한 워크샵으로서 첫 시도이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별,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진행자 탱크를 확보한다면 더 많은 '갈등해결' 교육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갈등과 평화 워크샵

가. 일시 : 8월 31일(2박 3일)

나. 장소 : 풍도청소년수련원

다. 참가인원 : 초중고 유치원교사, 단서활동가 등 14명과 갈등해결팀 진행자 7명, 사무국 포함 총 22명

라. 프로그램 :

일자	시간	장차명	강사명
8월 31일 (토)	10:00 - 12:00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 일정 소개, 진행규칙 정하기	박수선
	12:00 - 13:30	점심시간	
	13:30 - 16:00	갈등해결 이해하기 1 -갈등분쟁 개념 이해하기	이재영 김학목
	16:00 - 18:00	갈등해결 이해하기 2 -갈등분쟁 대응유형 알아보기	이재영 김학목
	18:00 - 19:30	저녁식사	
	19:30 - 21:00	평화교육이란?	김경수

8월 4일 (일)	09:00 - 09:30	어제 프로그램 평가	정경란
	09:30 - 12:00	감동분석 1 감동의 원인 분석의 필요성과 여러 방법	정경란 최현진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00	감동분석 2 감동분석 실습 및 토론	정경란 최현진
	15:00 - 17:00	감동해결 방법 배우기 1 - 대화기술 익히기	박수선
	17:00 - 18:00	감동해결 방법 배우기 2 - 중재의 원칙과 방법	장윤경
	18:00 - 19:30	저녁식사	
	19:30 - 21:30	감동해결 방법 배우기 2 - 중재 실습	박수선
8월 5일 (월)	08:00 - 09:30	어제 프로그램 평가	김경수
	09:30 - 12:00	내가 생각하는 감동해결,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 인가?(토대 중재 외국 사례 소개 및 토론)	김경수 이재영
	12:00 - 13:00	전체 프로그램 평가/기대와 전망	박수선
	13:00 - 14:00	점심식사 및 집으로 돌아가기	

다. 평가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참여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샵으로 관심사에 구체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좋은 장소와 준비의 성실함은 모든 참가자들이 만족스러웠던 부분이다.

• 문제 및 어려움

① 모집의 문제/여교사에서 사회단체활동가까지 확대

처음에는 중등 여교사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수지정을 받았다.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의 지체도 빠르게 모집 홍보를 하지 못해서 워크샵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를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교사의 특성상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일정으로 2박3일의 연수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아 특정 조직된 대상으로 교육 섭외를 하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예: 춘천교대 대학원 통일교육과 정기세미나, 전교조 ○○지회 등) 구체적으로 실천예의 연결도 그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진행팀 구성의 문제

이번 워크샵에는 진행팀의 준비의 목적도 포함하여 7명이 함께 진행했는데, 진행자가 구성원 대비 많았다. 다양한 관점과 내용의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지만, 한편으로는 진행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진행자들간의 혼선도 조금은 있었다.

공동진행의 경우, 공동진행자들간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15명~20명

참석 워크샵에는 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③ 다양한 참석자

모집상의 어려움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참석자들간의 워크샵도 서로 다른 활동공간을 이해하고, 그 경험과 관점을 나누는 것으로 유의미하였다. 워크샵 이후 실천과정에서의 결합도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워크샵 자체로는 오히려 교육효과가 높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다양한 워크샵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④ 사무국과의 긴밀한 관계 요구

갈등해결팀과 사무국과의 사업적 연계의 근본적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사업 준비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그만큼으로 해서 실무와 팀간의 유기적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사무국장이 팀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과제

- 여러 방식의 프로그램 디자인을 가지고 특정 조직에 교육 마케팅을 통해 갈등해결교육, 평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심화프로그램의 필요: 현재까지 2회 약 30여 명의 갈등해결 기초 소개교육을 받았는데, 보다 구체적 실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심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평화여성회 회원 또는 지원세력으로서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4) 관악고등학교 창의재량 수업 "평화문화 이해와 갈등해결 기법 배우기"

가. 일시 : 2002년 8월 28일~12월 31일 주 100분, 총 11회

나. 장소 : 관악고등학교

다. 참가자 : 김학목, 박수선

라. 배경 : 인건시범학교인 관악고등학교의 요청으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재량 시간에 수업의 형태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00분 수업으로 한 반당 총 6회, 두 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마. 내용

1. 마음 열기/갈등예방과 해결의 기초
2. 갈등 개념 이해하기, 자신의 갈등대응유형 이해하기
3. 갈등의 심화요인/합리적 의사소통의 부재 극복
4. 갈등원인 분석과 갈등해결
5. 차이와 차별, 권선과 고정관념 이해
6. 평가와 기대

바. 평가

1. 경쟁, 입시위주의 교육여건에서 '창의성과 협동'을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부분적이거나 제도적인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대와 흥미를 유발했다.
3. 현재 창의제량 수업은 경해져 있기는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학교현실에서 준비된 프로그램과 진행자가 있다면 학교내 접근이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이후 보다 세밀화된 아이들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고, 진행자 훈련을 통해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평화교육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민주시민교육 매뉴얼 개발”

가. 일시: 10월~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사업에 평화를만드는여성의회 갈등해결팀이 '평화, 통일, 갈등해결' 분야 매뉴얼 개발에 참여하였다.

나. 참가자: 김경수, 김학목, 박수선, 이재영, 정경란, 최현진

다. 내용

1. 서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자료의 사용방법
2. 평화교육(Peace Education)·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과제
3. 교육방법론/참여프로그램의 특징 및 의의
4.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 및 과정
5. 다양한 주제별 교육 (평화, 갈등해결, 공존 등)
6. 프로그램 디자인 (1박2일, 2박3일, 4박5일, 주제영역별 프로그램...)
7. 결어를 대신하여/비폭력과 사회변화

라. 평가

1. 시간의 평화, 갈등해결 교육과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하는 의미가 있다.
2. 갈등해결, 평화교육 매뉴얼은 한국사회에서 첫 시도이다.
3. 외부 지원 프로젝트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평화여성회 재정에 기여했다.
4.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서 부족함이 있지만, 앞으로 평화, 갈등해결 교육의 매뉴얼화의 시작을 구체화했다는 데 큰 성과가 있다.
5. 지속적인 매뉴얼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6) 기타 단위별 교육 프로그램 참가

- 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갈등해결 프로그램 소개 4월 20일(토) 3시간/박수선
- 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최 학교내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교육 개발 회의 참여
년중, 8월 8~11일(3박4일) 워크샵 준비 및 진행/박수선
- ③ 통일교육협의회 제1기 통일교육아카데미 예비과정 -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 갈등해결교육 강의 6월 19일/박수선
- ④ 민화협 주최 갈등해결 기법 개발을 위한 워크샵에 진행 및 참가
주제 : 갈등해소와 남남대화
7월 20,21일 /김정수, 김학목, 박수선, 이은아, 이장호, 이재영, 장윤경, 정경란, 최원진
- ⑤ 제주5.18기념재단 주최 평화인권교육 워크샵에 평화교육과 갈등해결교육 참여
7월 24, 25일/김정수, 박수선
- ⑥ 전교조 통일위원회 연수 참여 8월 5~6일/이재영, 박수선
- ⑦ 부천여성회친화 양성평등의식 향상 교육프로그램에 평등을 만드는 말과 행동 강의
7월 21일/박수선
- ⑧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모듈개발과 워크숍
아시아여성개발센터와 (주)비즈우먼의 중앙인사위원회 프로젝트에 갈등해결 프로그램 연구도 참여(8~9월중)/박수선
- ⑨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갈등해결교육 디자인 및 진행
10월 7~22일 6차/이재영, 박수선, 장윤경
- ⑩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주최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진행 참여
10월 26일/박수선

(4) 사업평가

가. 평가

- 1) 2002년 갈등해결팀의 여러 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였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2)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나 춘천교대 대학원, 관악고등학교 등 공적인 기관에서 교육 의뢰를 받았다는 것은 '갈등해결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갈등해결·평화교육의 공교육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공적 영역에 진출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공신력을 획득해나가는 성과를 낳았다.
- 3) 2001년 교사대상으로 학교 갈등의 해결과 평화를 위한 교육을 시도했다면 2002년은 학교의 주체 모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교감, 그리고 아이들 대상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 우리 사회 특히 학교에서의 갈등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경험을 채득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 4) 2001년 이후 진행되어온 여러 활동과 자료를 종합, 매뉴얼화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 시도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과제

- 1) 그동안 평화여성회 갈등해결팀의 꾸준한 노력과 홍보로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의 수요는 매우 높아져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진행자 부족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내용의 팀원, 갈등해결 트레이너, 진행자의 재생산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 2) 시간대별 내용별 요구별 프로그램 디자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02년은 학교 갈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려면 다양한 계층에 알맞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 3) 이를 위해서도 각 영역 진행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현재 갈등해결팀의 한단계 질을 높이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또 재생산의 구조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보고 정현백 원장)

이사장 : 김윤옥

이 사 : 박분미, 윤영애, 이문우, 정현백, 최만자, 최영실

원 장 : 정현백

부원장 : 김귀옥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김귀옥

· 연구·편집위원 : 정현백, 김현미, 윤덕희, 이금순, 김귀옥, 박현선, 장남식

· 자문위원 :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강정구, 고병현, 이상열

(1) 회의

① 1차

일시: 2002년 7월 30 (화) 오후 6시

장소: 인사동 한정식 식당 지리산

참석: 정현백, 김귀옥, 박현선, 김열리, 김정수, 윤여정, 이은하

내용: 사업 보고 및 경기연구 발표회, 여성과 평화3호 방향 논의

(2) 사업내용

1) 여성과 평화 2호 출간

· 발간일 : 2002년 5월 초

· 발간부수 : 1000부(당대 500부)

· 편집 : 김귀옥, 윤여정, 이은하, 오재필

· 내용 :

시사와 초점 : 분단과 전쟁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통일을 향한 머니먼 여정-최근 남북관계를 바라보며(김현옥)

전쟁위기와 평화의 길(이김현숙)

경의선 연결과 2차 남북정상회담(신준영)

평화·통일 연구 논단

북한의 종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김당)

여성의 평화·통일 의식과 통일 전망(김귀옥)

한국의 군사주의와 상: 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김열리)

평화·통일교육

해외 평화교육 사례와 통일교육에의 적용 전망(김정수)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통일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최희경)

내가 만들 통일세상

남북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고일초등학교 6학년 한지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고일초등학교 어린이들)

영원한 2인자 '군'(강원민)
무지렁이 농사꾼의 옥옥방 통일론(강문필)
평화로운 통일의 꿈(김미미)

평화·통일 현장

백부기 등지로 날아간 새말: 아프가니스탄 현지 취재기(이유진)
'평화의 축' 만들어가는 여성(전은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찾아서(한성훈)

문화포착

대중문화가 '남대화'하고 있는 성폭력과 죽음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김현미)
업기와 여성이 만날 때(이은하)

<여성과 평화2호> 내부편집 원고비 후원

김엘리: 108,000원(108매), 김귀옥: 107,000원(107매), 김현미: 23,000원(23매)
이은하: 18,000원(18매), 이김현숙: 26,000원(26매), 김정수: 99,000원(99매), 전은주: 35,000원(35매)

2) '국내외 평화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만남' 통일부 통일교육원 총서로 발행(1000부)

3) 제1회 평화도론회 개최

- 일시: 2002년 11월 25일(월) 오후7시
- 장소: 여성교회
- 참석: 정현백, 김귀옥, 정경란, 김정수, 박수선, 윤여령, 안정애, 전은주
- 내용:
사회: 김귀옥 부원장
발제: 국제연대를 통한 한국 평화, 통일운동(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전체도론

4)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작업

- 일시: 2002년 10월17일
- 장소: 금강산 선상
- 주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작성: 김귀옥 부원장

(4) 사업평가

가. 성과

- 1) 담당주체가 없는 과정에서도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제1회 평화포럼'이라는 연구원 독자사업을 기획하였고 참여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 2)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 연구과제가 통일부 총서로 발행되면서 제도권 영역에서도 그 권위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남북여성 통일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작업을 통하여 남측 대표단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둘러싸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통하여 일반 여성들에게 평화통일의 염원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지, 또한 평화통일의 길에서 여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할 수 있었다.

나. 과제

- 1) 실무자의 변경, 부재로 인하여 여성과 평화 2호 출간이 다소 늦어지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여성과 평화> 기획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출간계획을 세우고, 3회 출간을 위한 기획을 마련해야 하며 형식은 학술지 형태 모색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
 - 3) 연구원의 성격에 맞는 사업 모색으로 여성평화·통일분야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연구사업의 폭을 넓여야 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논문(생질, 논쟁 등) 등으로 평화여성회의 정기행크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8. 소식지발행팀

(보고: 홍승희 팀장)

팀장 : 홍승희

팀원 : 박수선, 이김현숙, 김원희

(1) 사업목표

정기적 발행을 한다. 년4회 (봄3월,여름6월,가을9월,겨울12월)

회원과의 관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한다.

회원 보강과 위원회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회의

일시 : 2002년 9월 17일(화)

장소 : 회의실

(3) 사업내용

① 가을호 (통권 제16호) : 발행 10월5일 / 발행부수 1000부

쪽지	내용	쪽	글쓴이
특별기획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그 의미와 기대	2	권은주
좌담회	"여성이어, 민족의 화해자가 되자"		
시론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지금부터 치밀한 대응책 세워야	18	정육식
추모시	한반도 여성들의 단련과 추모	23	예미
이야기마당 1	미선이, 효순이는 말합니다. 우리모두 불평등한 한미소매에 총지부를 찍어달라고...	27	김현희
이야기마당 2	내 마음 속 평안함을 심었다	31	김혜진
이야기마당 3	갈팡! 니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35	류송화
참관기	2002서울국제회의-군사주의와 여성인권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	39	김엘리
	아시아평화연대(APA)장침송희를 다녀와서	42	김정수
	아시아와 유럽에서 평화를 위해 공동의 연대를 모색한다 는 것 - 제4차 여성연간포럼에 다녀와서	47	김정수
자료 1	2002년 9월-10월 반전행동 관련 정보	57	정경란
자료 2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앞두고	64	이 김 현 순
성명서 1	미군제도사상에 합사당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여성 들의 입장	85	
성명서 2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88	
성명서 3	미군의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권 이양거부에 대한 여성들 의 입장	90	
성명서 4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92	
성명서 5	국방부의 '미이라크 공격지연 검토'에 대한 논평	96	
알림과 나눔	5월 - 9월 사업보고 (연대포럼)와 10월 - 11월 사업계획	98	
회원소식	회원소식 및 신입회원 소개	104	

(4) 사업평가

① 편집구성

소식지 처음 부분에는 부담없이 읽을수 있는 글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특별기획물은 중반 앞부분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읽고 전문지로서의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편집형식(문)을 바꿀 필요가 있고, 신명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원고가 많이 실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② 정기적 발행의 한계로 인한 목표달성의 어려움
계간지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자의 부재 및 예산상의 부족 등의 이유로 1회에
만 그쳐 올해 소식지 전반에 대한 평가가 무리가 있다.

9. 국제협력위원회

(보고 : 정경란 위원장)

- 위원장 : 정경란
- 위원 : 권혜순, 김재민, 노길범, 박수선, 이아람, 정이신아

(1) 2002년 사업목표

- ①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의 지속
- ②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 강화
- ③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역문화와 홍보활동 강화
- ④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2) 회의

① 국제협력위원회 회의

일시: 2월 21일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참석자: 정경란, 박수선, 김재민

내용: "부시의 악의 축" 관련 성명서 검토, 국제협력위원회 제회 논의

② 평화여성회 국제연대 전략회의

사회: 정경란

일시: 5.28(화) 오후 5시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참석: 이김현숙, 김숙일, 심영희, 김혜라, 박수선, 김경수, 김귀옥, 정경란, 정이신아,
윤여영, 권은주, 이은하, 김현희, 장희원

목표: 1)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국제연대에 대한 방향과
목표설정에 기여한다.

2) 당면 현안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돕는다.

내용: 1) 결정사항: 국제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평화운동의 국제화와 국제평화운동의 국내화를 위해 여성이 평화형성을 위한 주류로서 활동

(mainstreaming)하고 이를 위해 여성 개인의 세력화(empowerment)를 추구한다. 제한적인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활용한다. 집중적인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2) 현안논의

*국제대회 대응-아시아평화연대, 아성긴급포진, 사회개발정상회의 관련 활동

*국제평화단체와 외국 평화단체와 관계 설정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단체- Coalition of Women for a Just Peace와 연대 추진

Nonviolence Peace Forces 연대 문제: Partner 단체와 affiliate의 차이 규명 필요, 국제평화단체와 관계를 고려해 국제연대 추진

(3) 사업내용

1)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① 1차(사회: 정경란)

일시: 2002년 6월 20일(목) 3시-6시,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참석: 정경란, 장희원(평화여성회), 강재숙(평화시민연대),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윤영달-1 (원불교 남북한살운동본부), 양명미, 양난주, 연인 2명(참여연대), 정옥식(평화네트워크), 이경아(MD공대위), 박준우(경실련통일협회), 박성준(비폭력평화연대, 성공회대학교 NGO 학과), 한상진(함께가는 사람들), 김승국

② 2차(사회: 정경란)

일시: 6월 27일(목) 3시-5시,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참석: 박준우(경실련 통일협회), 이경호(평화통일시민연대), 김승국(비폭력평화연대 등),

정경란(평화여성회), 강아경(좋은벗들), 한상진(함께가는 사람들)

③ 3차(사회: 정경란)

일시: 7월 19일 오후 3시, 장소: 여성연구소

참석자: 정경란, 김승국, 이경아, 한상진, 박준우, 박성준

<1차, 2차, 3차 회의내용>

가. 국제연대 공동대응 동의한 단체 및 개인

평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원불교 남북한살운동본부, 평화네트워크, MD공대위, 경실련통일협회, 비폭력평화연대(준), 함께가는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자주평화통일연대회의, 좋은 벗, 주한미군영처근접운동본부, 김승국

나. 평화단체 국제연대 모임의 구조

원래처럼 모이기 어려울 때 과연 어떻게 국제연대를 해야 할 것인가?

국내외 코디네이터/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해입을 통해 연락한다.

아시아평화연대, 아성긴급포진 지원체제로서 역할을 한다.

두 대회이후 보고간담회를 통해 양대 국제대회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후 참가단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향후 모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연락담당자를 평화여성회 정경란으로 한다.

다. 아셈인간포럼, 아시아평화연대 참가자 관련 논의
어리단체가 갈 수 있게 배려한다. 전문성과 영어 실력 고려, 통역 검토,
대회의후 보고 간담회를 갖는다.

라. 발표자 제안 및 참석자 선정: 아시아평화연대 창립총회 및 2002 아셈인간포럼 참가자 선정
김정수(평화여성회)-확정-아시아평화연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
김승국-군사화와 핵화의 유럽의 역할(제안)

오충일 목사-참가 신청

이대훈-전체총회 "한국평화운동"-유럽 국제조직회에서 제안

MD공대위-우주의 군사화와 미사일 방어-유럽 국제조직위 제안

윤영모(민주노동)-운동의 범지구화-유럽 국제조직위 제안

박성준: 비폭력과 평화 관련 발표 관심

통역 요청자: 이대훈, 이성훈(Pax Romana 사무총장)

㉑ 4차 회의(사회: 정경란)

일시: 9월 13일(금) 3시-6시, 장소: 여성평화의 집 1층 여성연구소 회의실

참석: 박준우(경실련 통일협의회), 김승국(자주평화통일협의회), 고영대, 이경아(MD 공대위), 박
석률(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최정민, 이수진(평화인권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
네트워크), 한상진(비폭력평화연대), 김정수, 정경란, 권은주(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최현진(평
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내용: 1) 아시아평화연대 창립대회 보고

2) 군사주의네트워크 보고 등

3)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소속단체와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이 "10.8
일 만민국제행동"의 공동제안단체로 참가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제행동"을 조
직하기로 결정.

㉒ 5차 회의(사회: 정경란)

일시: 2002년 10월 22일 오후 5시 20분-6시 30분, 장소: 비폭력평화연대 사무실

참석: 한상진(비폭력평화연대), 이이경아(MD 지지 공대위), 박석률(평통사), 김승국(비폭력평화
연대, 자동협, 평통사), 김정수, 정경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내용: 1) 2002 아셈인간포럼 보고

2) 10월 8일 만민평화 국제행동 보고

-10월 8일 만민평화 국제행동 평가 모임 보고서도 대체하다.

-민중연대 민족자주위원회는 10.8만민평화 국제행동에서 보낸 공문에 아직까지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

3) 일본평화단체 방문 보고

4) 아시아평화연대(Asia Peace Alliance) 관련 동향 공유

2) 전쟁반대를 위한 국제연대활동

① 2월 8일 평화문만드는여성회,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영문성명서를 2월15일 국제단체에 배포

가. 배포 범위: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ization and Nuclear Power in Outer Spac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omen and Life on the Earth, Psycholog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Peace Bureau,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등

나. 해외의 반응

가) '익의 축' 비판 성명서에 대한 반응은 2001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36개 단체가 발표한 전쟁반대 영문성명서를 배포했을 때 보다 많은 단체들이 관련 웹사이트나 메일링 리스트에 이 성명서를 보내면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표명했다. 일본에서는 이 영문성명서를 일역해서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ization and Nuclear Power in Outer Spac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omen and Life on the Earth, Psycholog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에서 이 성명서를 배포해주었다.

나) 50여종의 지지편지를 받았다. 일본, 파키스탄, 인도, 캐나다, 미국, 유럽 등 단체보다 개인 차원에서 지지편지를 보내왔다. 지지편지의 내용은 먼저 성명서 내용에 대한 동지(부시의 군국주의적 정책과 언사에 대한 비판)와 둘째, 많은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낸다는 사실이었다.

다) 미국의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과 단체 소개 요청이 많았다. Institute for Public Accuracy와 미국 라디오 방송국의 "Democracy Now!"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National Peace Foundation과 Housman Peace Project에서 평화여성회 소개를 요청했다.

라) 지지에 대한 감사편지와 질의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자료 사무국 보관).

마. 한국의 평화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관심이 늘어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더욱 알려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외국의 평화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

나. 무시방한반대 집회와 이현숙 대표 상처관련 영문 편지 국제단체에 배포

가) 2월 20일 무시방한반대집회이 대한 개요와 이현숙 대표님 다치신 것을 정리한 편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3월 5일 국제단체 및 외국평화단체에 배포.

나) 배포 범위: 위와 상동

다) 관심을 표명해주신 단체 및 개인은 미국헌우봉사회(AFSC), IFOR, WILPF, Global Focus on the South, Transnational Institute 관련자와 그의 평화운동가 등 10여명.

라) 이 분할은 당시 집회 상황에 대해 경악을 표하고 이현숙 대표에게 위로와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무시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중 AFSC의 조셉 거슨은 올해 북미사이에 핵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상당한 건강관계로 갈 것을 우려했고 전 AFSC 동아시아 담당자 카린 리는 2월 20일 집회와 관련하여 간단한 경과를 Human Rights Watch

에 보낸다고 했다.

3) "10월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

① 준비모임 / 가. 사회: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나. 일시: 9월 25일 4시

다. 장소: 비폭력평화연대 사무실

라. 참석: 이수진, 최경민(평화인권연대), 김정수, 정경란, 김엘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상진, 이경미(비폭력평화연대), 이경아(MD공대위), 박종필(평통사), 정옥식(평화네트워크), 정소영(민중연대 반전평화자주위원회), 박성민(민주노동 평화통일자주위원회), 이미영(여성분쟁연대), 김정일(다함께), 김승국(자통협, 평통사, 비폭력평화연대)

마. 경과보고

ㄱ) 지난 8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 여성네트워크' 국제회의(서울 개최)와 17개국 활동가들이 참가한 '아시아평화연대' 창립총회(마닐라 개최)에서 10월8일 공동행동 결정

ㄴ) 9월 13일 "평화단체 국제연대 4차 전략회의"에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와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소속단체들이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가칭)을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할 것을 결의

ㄷ) 9월 25일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 1차 준비모임 개최

바. 외국 반전행동 정보 공유(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2002년 9월-10월 국제반전행동 관련 정보 참고)

ㄱ) 미국전쟁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의 행동(아시아평화연대에서 제안)

ㄴ) '태리리즘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여성 행동의 날'(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미국, 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제안)

ㄷ) 여성그룹 미국의 이라크전 반대 서명 활동.

ㄹ)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9월 24일-29일 반세계화/반전 활동

ㅁ) 미국 Not In Our Name 활동

ㅂ) 우주에 군사화와 핵력에 반대하는 지구네트워크(Th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는 10월 4일-11일"평화를 위해 우주를 지키는 한 주"(KEEP SPACE FOR PEACE WEEK)로 경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중단하자는 국제행동 제안.

ㅅ) 미국 International Action Center를 중심으로 10월26일 전시적적으로 반전행동계획

ㅇ) 영국 Stop the War Coalition 9월 28일 대규모 반전집회 계획

자) 일본에서 2-3월 부시 전법재판이 있었고 10월에 다시 열릴 예정

차.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 계획

ㄱ) 제목: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년을 기억하며 이라크 공격을 반대한다.

ㄴ) 주최: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 참가 국내단체, Asia Peace Alliance, East Asia-US Puerto Rico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ㄷ) 행사: 11:00 기자회견, 미대사관 주변

11:30 평화행진(거리선전 포함) 미대사관-인사동

12:30 문화행사 -인사동

② 10월 8일 반전평화국제행동

참석자: 이길현숙, 김숙임, 정경란, 권은주, 김현희, 최현진

가. 1부 기자회견

개회사 / 이길현숙 대표발언 / 경과: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 연대사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인원 50명. 시작시간 엄수. 미대사관에 성명서 전달과 성조기 위해 손도장 찍기 문화행사가 경찰과의 논의 끝에 생략하기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국제행사를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는 행사 진행기조에 따른 결정이다. 따라서 미대사관에 성명서 전달시간에 진행하기로 했던 발언이 기자회견 내용에 포함되어 기자회견시간이 길어졌고 발언도 정해진 시간을 넘겼다. 미대사관에 성명서 전달은 팩스와 수편을 통해 전달하기로 결정

나. 2부 평화행진

사건제거는 YMCA회관에서 남인사마당까지 준비했으나 경찰의 헬조로 광화문사거리에서 남인사마당까지 풍물패의 뒤를 이어 200여명이 행진에 동참했다.

다. 3부 문화행사 · 김일리 정책기획위원장 행사 코디네이터

① 상실실치물과 상실 프로그램

평화재단과 꽃밭 푸기 설치 "군사주의와 전쟁으로 얼룩진 땅을 평화의 꽃밭으로"

② 사전행사(대시지가 담긴 무대설치 효과) <발라드 퍼포먼스> 10분 1인

③ 전쟁체험! 1년전 아프간 침공은 CNN워싱 머슬업게임이 아니라 생생한 고통이다!

- 발언 1 : 우리가 9.11이 아닌 10.8 행동하는 이유

"반-테러리즘의 허구성과 전쟁 반대"

- 발언 2 : " 미국 무시정권의 대 이라크 한반도 군사정복 비판"

- 발언 3 : " 미국 범죄 규탄 등 기타 발언 "

- 발언 4 : "전쟁과 군대, 군사주의가 여성과 아이들에 가하는 고통"

<전쟁 체험 퍼포먼스>

<한지 활무 퍼포먼스> 10분 5인

<꽃밭푸기 만들기>

<성명서 발표>

라. 연대 : "국제행동"은 여성, 민중, 평화, 시민단체 등 47개 단체가 참여

마. 연대사

* 한국에서 아시아평화연대에 보낸 연대사

* 외국에서 한국에 보낸 연대사, 관심표명

-아시아평화연대(APA) 일본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 여성네트워크(SAFE)의 미국회원

-SAFE 푸에르토리코

-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Transnational Institute, 네덜란드
- Openasia, 타지키스탄
- Michal Truc, 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Foundation.

* APA 필리핀 성명서 발표

파. 재정 : * 분담금 납부 단체: 총 25개 단체

(분담금: 일반단체5만원, 학생단체 등 일부단체3만원)

사. 주최단체: 24개 단체(경실련통일협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다함께, 두레방, 상대에 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구사무국,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송파을지구당, 인노당 여성위원회, 비폭력평화연대, 4월혁명회, 원불교 남북한삼동본부, 주한미군범죄반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학생반전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환경운동연합, MD적거와 평화실현 공동 대책위원회 / 미주회단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사)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 평가모임

ㄱ. 사회 및 정리: 정경란 (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ㄴ. 일시: 2002년 10월 8일 4시10분-6시20분

ㄷ. 장소: 비폭력평화연대 사무실

ㄹ. 참석자: 이경아(MD공대위), 한상진(비폭력평화연대), 양영미·자민봉사자(참여연대), 이수진(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정경란(평화여성회), 김장일(다함께), 박석물(평통사), 윤혜숙, 이선화(민주노동당 여성위), 명호(환경운동연합), 이선근(민주노동당 강남갑지구당), 김승국(자통협, 평통사, 비폭력평화연대), 이종우(청년학생반전위)

ㅁ. 내용

10월 8일 행동 보고 :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다. 많은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부터 문화행사까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평가

1) 성명서

성명서에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 여성네트워크(SAFE)와 아시아 평화연대(APA)가 회의를 제안한 배경이나 주최단체에서 빠진 것은 이번 행사가 국제행동임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2) 연대사

이번 행사가 국제행동연대 회의에 보내는 연대사에 어떤 단체가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아서 아시아평화연대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단체 명의로 연대사가 나갔다. 앞으로 연대사를 작성할 때 연대하는 단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1부행사에서 시민단체가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고, 일부 순서는 통합하여 진행하여 할 필요가 있었고, 발언이 길어져 기자회견이 늘어졌다.

4) 3부행사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전쟁 피해자들이 겪는 참혹함을 문화적으로 형상화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공연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 메시지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자회견과 평화행진에 사용한 플래카드와 피켓이 문화행사와 조화를 이루어 문화행사의 뜻을 더 분명히 해서 좋았다.

5) 언론

많은 기자가 끌려져 취재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있었다. 연합뉴스, 한겨레,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고 외신은 AP, 로이터통신 등이 취재했다. (참조: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다고 함. 일본평화단체에서 연락했음)

6) 연대

10월 7일 민중연대가 주최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민중연대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경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 명의로 보내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기로 결정.

7) 제안사항

① 10월 26일 반전집회 공동으로 할 것을 다함께에서 제안.

International A.N.S.W.E.R.에서 10월 26일 국제 반전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에 10월 8일 국제행동에 참여했던 47개단체에게 참여해 줄 것을 호소.

② 반전평화공동실천이 재가동될 것을 제안 (다함께, 참여연대)

③ 10월 26일 반전국제행동에 관심 있는 단체들은 10월 16일 5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3) 아시아평화연대 Asia Peace Alliance(APA)와 협력

① 아시아평화연대 준비회의

일시: 5월 10일-11일

장소: 홍콩 ARENA(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사무실

참석: 정경관 국제협력위원장

내용: 제2차 아시아평화연대 준비모임이 있었다.

참고자료: 아시아평화연대 논의배경 (Background of APA)

작년(2001년) 10월 26일 홍콩에서 아시아에서 전쟁과 폭력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모여 아프카니스탄에서 인도주의적 위기, 미국, 일본 및 다른 정부의 개입에 따른 군사화, 9.11이후 지역 폭력의 증가와 이슬람의 약마화, 아시아 정부의 지지를 받는 미국의 전쟁노력에 맞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관련단체들이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해 아시아평화네트워크(Asian Peace Alliance)를 형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끝없는 전쟁과 침략의 테러 속에서: 아시아민중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호소

아시아평화네트워크(Asian Peace Alliance) 총회 소집을 위한 제안서(초안)

1. 우리는 끝없는 전쟁과 침략의 테러속에서 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은 민중의 안보와 지역적·전지구적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2. "반테러전쟁"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패권을 재강화하기 위한 위임스런 변명에 불과하다.
3. 미국의 반테러전쟁은 대외강경주의(jingoism)위에서 존재하며 이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안보고리를 무릅쓰키고 지역내 폭력과 증오의 정치를 촉발한다.
4. 아시아 평화네트워크를 조직함으로써 세계적 평화를 위해, 전쟁과 침략에 대해 아시아 민주사이에 광범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아시아평화네트워크는 현재의 미국의 반테러전과 아시아 정부의 미국전쟁 지원을 중지할 것이며, 아시아 연중의 평화와 안보·아시아 주변을 대가로 한 미국의 패권적 통제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연중 사이에 연대와 통합을 촉진하며, 이 지역에 진정한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5. 2002년 8월 29일-9월1일 평화를 위한 연중회의에서 공동의 비전과 행동장령, 효율적인 작동 메카니즘을 세우기위하여 아시아평화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과 같은 단계와 조차를 제안한다.
 - 5.1 지역준비모임 5월 10일-11일 홍콩
 - 5.2 필리핀에서 총회 조직
 - 5.3 APA와 총회가 평화운동을 촉진
 - 5.4 총회의 목적과 의제
 - 지역 이슈에 기반한 세계 상황에 대한 공동의 분석과 이해
 - 공동 비전과 행동장령
 - 각업구조
 - 공개행사와 공동행동
 - 5.5 지원을 모으고 총회를 위해 지원.

㉔ APA-아시아평화연대(Asia Peace Alliance) 창립대회

가. 일시 : 8월29일~9월1일

나. 장소 : 필리핀 케손시(필리핀 대학)

다. 참가 : 김정수 정책위원

라. 참가국 :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호주, 미국, (아프카니스탄)에서 온 100명과 필리핀인 50명으로 150명이 참가

마. 한국참가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자동업, 평동사, 비폭력평화연대

바. 내용 :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 투쟁 성명서 채택

-APA 차원에서 10월 8일 '아시아반전평화행동의 날'로 결의, 미국이 아프간 침공한 1주를 맞아 공동대응 결의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위원에 향후 추가. 현재 한국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운영위원회 참가.

-아시아사회포럼(Asia Social Forum)에 '인보평화분사'를 APA가 조직자로 참여키로 결의

-APA는 개인과 조직이 모두 참여 가능

주요 프로그램

8월 29일

개막식

전체회의 I: 테러와의 전쟁과의 세계

소주제회의

(1) 군사주의, 핵화와 미국의 역할(한국 발표 가능)

(2) 전쟁과 경제

(3) 국제표준화의 침식

(4) 미디어와 대중담론

8월 30일

전체회의 II: 민중들 사이에 갈등과 폭력을 극복함 (평화여성회 김정수 발표)

소주제회의

내적 갈등과 평화과정

다종족 공동체에서 젠더와 폭력

종교의 역할

8월 31일

전체회의 III: 희망과 전략

아시아평화연대 조직문제

-연대의 토대 / -행동강령 / -참여총회 선언

9월 1일 : 폐막식

㉓ 아시아평화연대 12월 14일 100만 촛불대행진 참가 대표단 지원활동

가) 아시아평화연대 촛불시위 참석 대표단 방한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나) 12월 13일 촛불시위 참석 조직 및 오키나와 여성 연설 지원

다) 12월 14일 여성생 추모제 참가 아시아평화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일시: 2002년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사회: 정경란(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순서

- 아시아평화연대 소개 박식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 아시아평화연대에서 보내온 연대사 한상진 (비폭력평화연대 운영위원)
- 아시아평화연대 방한 대표단 소개
- 아시아평화연대 대표단의 한말씀

월간 벨로(Focus on the Global South)

구와에 테루코(Kuwa'e Teruko): "군사기지와 군대를 용서치 않고 행동하는 여자들

모임"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구사쿠츠탄

통역: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협력국장>

오하타 류지(Ohata Rjuzi)일본현대네트워크 회원

- 대표단과 질의 응답

참석: 한겨레 신문, YTN, 여성신문 등 기자 10여명

12월 14일 100만 촛불대행진 연설 지원

④ 아시아평화연대(Asia Peace Alliance) 관련 평화여성회 활동 추가

- 6.22 반전평화국제행동의 날 연대사 작성

- 아시아평화연대 발족선언문 한국 부문에 대한 수정 제의

- APA관련 국내 평화단체 논의 전달

- 2003년 1월 18일 반전평화촛불시위에 아시아평화연대 연대사 번역 및 전달

4) 2002 아셈민간포럼 평화분과(ASEM4people) 활동

○ 평화여성회가 아셈민간포럼 평화분과 간사단체, 평화여성회 대표가 민간포럼집행위원

○ 2002 아셈민간포럼이 9월 20일-23일 (코펜하겐, 덴마크) 개최

○ 주제 1) 다국적 기업과 기업의 세계화, 2) 정치적 사회적 권리(인권), 3) 안보와 군사화/세계화, 4) 민중의 대응- 아셈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의원 모임

또한 아셈민간포럼은 1차부터 아셈공식기구에 누락되어 있는 의원들의 기구(모임)에 착안 "Parliament Dialogue"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9월 회의에 국내 국회의원이 참가하도록 3차 민간포럼 때의 간사인 김성호의원을 비롯 진보적 의원들의 참여를 조직이 권유되었다. (연락 책임 Pierre Rousset, Chalica, 양영미)

○ 사회포럼 : 3차례 공식제안된 social forum실치 제안서에 대한 후속작업이 유럽에서는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다.

지난 1차 테를린 준비모임, 5월 6-7일 예정된 브뤼셀 2차 준비모임 등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소중한 바탕이 되고 있다.

○ 한국 시민사회의 아셈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결과

아셈은 세계화 특히 9.11 이후 미국 중심의 군사주의화와 결합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 첫째, 시장 자유화와 개방화로 인한 다국적 기업 및 자본의 횡포에 대한 민중연결 및 시민사회의 대응, 둘째, 그 과정에서 일차적 희생자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셋째,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대응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를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연대행동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각 단체의 과제도출 및 연대 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 아셈 한국민간위원회 조직제언

가. 8개 영역을 대표하여 8인의 공동집행위원회 구성

- ① 여성 (여성연합) ② 인권 ③ 평화/안보(평화여성회)
- ④ 환경 (녹색연합) ⑤ 노동/경제 (민주노총) ⑥ 종교/영성

⑦ 밴곤 ⑧ 가변년스

나. 4차 아셈회의의 단장 : 최열(환경연합), 국제조직원위원 : 정강자(여성민우회)

○ 2002 여성민간포럼

일시: 9월 20일-23일, 장소: 코펜하겐, 덴마크

참석: 김경수 정책위원

평화분과 프로그램:

9월 21일(토)

- 개막 전체회의 9.11이후 안보
- 주제 발표자

Johan Galtung 또는 덴마크 평화연구자

이대훈(한국 평화운동)

Tom Rafter, 캘리포니아 대학

- 폐년과 워크샵

우주의 군사화와 미사일 방어: 고성대 MD저지와 평화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한국평화운동: 김경수 위원

운동의 범죄화

9.11이후 핵화산

5)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정상회의의 관련 활동

① 리우+10 여성환경위원회의 산하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분과' 참여

② 2차 여성환경위원회 WSSD 오리엔테이션

• 일정 : 7월 19일 - 20일, • 장소 : 크리스찬 아카데미

• 주제 : 최근 동향, 한국NGO 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여성환경위원회 활동계획 공유

• 발표: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주제로 발표

공.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정상회의의 관련 보고서 여성리포트 공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작성

공. 지속가능한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세계민중포럼(Global People's Forum)

가. 일시 : 2002년 8월 26일~9월 4일, 장소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 참석 : 정경란 위원장, 정현덕 원장 참가

라. 내용 :

가). 정무간 회의

ㄱ. 모인 장소: 샌턴(Sandton)

Political Declaration and Plan of Implementation 결정

주요그룹과 NGO Caucuses

여성, 평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청년, 인권/환경/개발, 아프리카NGOs, Governance 등

각 Caucuses는 Plan of Implementation의 민중적인 요구 담도록 로비-성명서와 로비 문건 채택

1. 평화코커스

2일마다 모임 개최.

20여명 참석. Women Making Peace, Ceasefire Campaign, WILPF, Peaceboat, Okinawa group, Peace and Development Platform(남아공과 아프리카 NGO), 웨이커 그룹, 팔레스타인 조직, Peace Action 등

성명서 채택, 로비문건 작성 및 로비, 기자 회견

2. 관련 활동

1) 평화코커스 참석

wssd 참가 여성들의 성명서(Korean women's Appeal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여성생명대위의 부시에게 보내는 편지 선포의 주요그림상에 비치하고 평화 코커스 활동가들에게 전달, 기자회견시 우리입장 밝혀줄 것을 요청.

평화코커스 입장문서와 성명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전달

2) 여성코커스 참석

여성코커스에서 나온 로비문건 여성부 과장에게 전달

여성코커스 기습시위 참가

3) 비정부간 회의

1. 모임 장소: 나사역

-한국ngo 참가자 280명(100명 지방의제)/ 정부관계자 100명

-민간위 보고서 및 여성보고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부문 집필/ 배포

-26일-28일 여성평화침묵시위 조직, 참가

8월 26일 wssd 참가 여성단체(평화여성회, 리우+10 여성환경위원회 평화팀, YWCA 연합회, 이연)의 성명서(Korean women's Appeal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작성 및 이후 시위와 행사에서 배포

-8월 28일 침묵시위와 성명서 Global Fire(WSSD 시민사회회의 공식 신문) 1면 장식

-8월 28일 여성환경위원회 행사 참가 및 행진 진행

-8월 29일 WILPF 전부대프와 간담회 조직

-8월 29일 녹색연합, 오키나와 그룹과 미군기지문제로 워크샵 조직

-8월 31일 NGO 공동의 날 시위 참석 및 성명서 배포(총 30명 정도 참석.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NGO의 문열과 NGO대회가 2곳에서 개최되었고 8월 31일 시위도 2개로 진행

2) 총영

1. NGO의 분열-남아프리카 공화국NGO의 분열(ANC의 최락 inkada의 강화)

ANC 주도의 World People's Forum

반세계화 그룹이 주도한 다른 NGO대회-Stithian College에서 개최

환경 관련 주요 그룹 WSSD 반대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 로비에 집중
NGO 대회 부실

- 1. 내년 주변에서는 촉진조치를 중심으로 매일 시위가 조직되었으나 이것이 한국ngo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

주요 주제: 지구화, 토지 소유권, 어부의 어업권, 사육화 문제, wssd 반대 등

- 2. 한국NGO의 활동

남아공의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정부간 회의의 전체상황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숙소, 통신, 교통)

Caucus를 확인하는 단위가 별로 없었다.-언어 문제/로비력의 제한/ 외국 ngo와 관계 제한/wssd 정부간 회의에 어떻게 대응한 것인가에 대한 준비 부족

다양한 워크샵 조직-참가자들이 한국인들이 많은 편

평화주제에 대한 해리 부족 그러나 녹색연합의 사진전시회, 리우+10 여성환경위원회
의 침묵시위와 성명서 배포, Global Fire에 기사 게재로 나사레에서 한국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 3. New Partnership이라는 명명하여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짐.(국제사회가 정부와 ngo관계에서 정부-ngo-기업의 축으로 변하게 하는 데 주요한 장)

- 4. 환경의 악의 축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 5. 리우환경회의보다 후회했다는 평가.

- 6. 전체적으로 평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세계화,민본의 문제가 부각

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해외연수프로그램 기획위원회” 활동 및 <평화와 연대> 프로그램 진행

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해외연수프로그램 기획회의> 참석

일시: 6월 14일 9시 30분, 장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회의실

참석: 정경관 국제협력위원장

내용: 해외연수프로그램 논의-1차 프로그램 “주민자치와 지역운동”으로 결정

② 정경관 국제협력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평화와 연대>를 제안하고,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

③ 일본 해외연수프로그램 <평화와 연대>

일시: 9월 28일부터 10월 4일

참석: 평화여성회 정경관 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4명 등 총 18명

내용:

- 방문 단체: 한일시민스케어(일본전쟁유족회와 일본 군국주의 설명), 피스디모(일본평화운동 경리), 피스보드, 비전(非戰)네트워크, 포럼 환경/인권/평화, 한국피독자구원의 모임, 히로시마 연구회, 히렌코(일본피독자모임), 히로시마평화위원회, 코오테정민학생센터

- 방문 평화박물관: 피스오사카,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 군국주의관련 장소: 야스쿠니 신사, 유추관, 구테시 미군기지, 해상자위대기지, 예다성 해

상지위대 간부후보생학교와 전쟁박물관

○ 지방의회: 코오베 지방의회의원과 비핵고베방식 관련 간담회

일본평화단체의 제안사항

첫째, 피스보트는 세계사회포럼 전에 아시아활동가들이 모여 피스보트를 따며 전략을 논의하고 싶으니 참가자를 추천해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피스디포는 아시아비핵지대와 관련 연대할 단체가 필요하다.

셋째, 히로시마 견습료는 한국에서 반핵사건권을 열고 싶은 데 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전달되었고 이 관련활동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7) 일본 평화운동가와 간담회

○ 일시: 7월 5일(금) 3시, ○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초청손님: 아키히코 키미지마 (Akihiko Kimijima)

호카이도 가루엔 대학교수, 비폭력평화세력 국제운영위원

핵무기에 반대하는 일본평화가협회 회원

○ 간담회 내용: 비폭력평화세력(Nonviolence Peaceforce), 일본의 평화헌법

9.11이후 유사법제문제, 아시아평화를 위한 연대

8) 민주주의 공동체 NGO포럼(the Community of Democracies Non-Governmental Forum) 참가

일시: 11월 10일-12일, 장소: 메리어트호텔

참가: 이길현숙, 정경란

내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관으로 열린 민주주의공동체 NGO포럼은 민주주의의 공동체 정부포럼과 함께 열렸고, 정당체제 강화, 지방정부와 민주주의, 부패와 민주주의, 권리와 민주주의, 시장과 민주적 거버넌스(Market and Democratic Governance), 민주주의의 교육, 미디어와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와 NGO 보호, 폐쇄사회에서 시민사회 확대라는 주제토론을 통해 정부간 포럼에 의견을 제출했다.

9) 카터 대통령에게 편지보내기

목적: 북핵문제 등 현 상황이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매우 중대한 고비임을 인식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얻고자 그 하나의 방안으로 200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에게 편지 보내기를 여러 단체에 제안하고 같이 내용을 진행

내용: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며, 한반도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 노벨평화상 수상식과 인터뷰(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청하고,

나) 1994년 핵위기에서 같이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다) 가능하다면 한국을 방문해주시기를 요망하는 내용

진행: 11월 28일 진담

참가단체: 평화여성회 외 30여개 단체

대표서명: 이길현숙 대표, 박상중(참여연대 대표)

담장: Gordon Streeb 카터 센터 한반도 안보담당자가 카터 대통령과 카터 센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한을 보내냄.

10) 비폭력평화연대 창립총회 참가

기간: 11월 29일-12월3일, 장소: 인도

참가: 정경란, 박수선

활동: 평화여성회는 비폭력평화세력 회원단체로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국제협력위원이며 갈등해결위원 2명이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비폭력평화세력의 구조와 비폭력평화세력 시범 프로젝트 결정에 의사를 표명하고, 외국 참가자들과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갈등해결 관련 훈련프로그램에 상호협조를 논의했다. 또한 앞으로 비폭력평화세력의 프로젝트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참고: 비폭력평화세력 창립대회 프로그램

11월 29일

환영행사, 환영연설

Sheikh Hasina(방글라데시 전 수상) 연설

공동미디어 빌딩(Community Building)

엘라 간디(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의원, 마하트마 간디의 손녀) 연설

11월 30일

비폭력평화세력 창립 경과 소개,

비폭력평화연대 창립대회의 목적, 활동, 구조, 회원, 운영조직 등 결정

지역모임을 논의를 통해 국제운영위원회 추천

10여명 국제운영위원회 선출(한국 비폭력평화연대 김영 대표)

12월 1일

Peaceful Tomorrow를 위한 9/11 유가족 모임 대표 연설

비폭력평화연대의 시범프로젝트를 위한 논의.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과테말라 3지역에서 비폭력평화세력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3지역 상황에 대한 준비팀이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은 논의와 투표를 통해 스리랑카를 시범프로젝트 지역으로 선정했다.

한국 국제문제와 평화운동-박성준 비폭력평화연대 대표 발표

12월 2일

비폭력평화세력 앞으로 활동 관련 논의, 창립대회 평가, 마하트마 간디 묘소 방문

12월 3일

TRANSCEND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

11) 유럽갈등예방센터(Europe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과 연대.

유럽갈등예방센터는 2004년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무장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NGOs in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대회 준비에 평화여성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해와 앞으로 상호협력할 의사를 전했다.

12) 팔레스타인 여성 지원 관련 활동

- 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반대 4월 3일 평화여성회 등 8개단체의 성명서 작성
- ② 팔레스타인 여성 등 인도주의 지원 위해 평화여성회 회원 모금
- ③ Women and Life on Earth와 WILPF에 팔레스타인 여성 지원 관련 정보 수집

13) 이메일을 통한 국제연대활동

- ① 이우경 이사장님 부고 발송 【Obituary】 The Chairperson of a board of directors in Women Making Peace(Korea), Woo-Jeong Lee Passed Away.
- ② 두 여중생 사망사고 발송 Death of Two Girls crushed by US Forces Vehicle
- ③ 남북여성통일대회 국외홍보 활동

14) 외국 감지에 평화여성회 성명서 수록

2월 7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여성주의 감지 “Trouble and Strife” No. 43, Summer 2002에 게재되었다. 게재된 성명서의 제목과 일부 단어는 동의하여 수정되었다. Trouble and Strife 특별호는 9.11이후 여성평화활동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정리해서 모았다.

15) 평화여성회의 활동 해외 소개

Asia Women's Resource Center(일본), Houseman Peace Project(세계평화운동과 평화단체에 대한 정보를 Houseman Peace Diary에 수록해 세계에 판매하는 활동), 참여연대 영문잡지 Asia Solidarity Quarterly에 평화여성회 활동 소개 글을 발표했다.

++ 참조

- 1)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관련 국제연대-사무국 참조
- 2)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국제회의의 연대 -정경희희회원의 참조

(4) 사업평가

1) 성과

① email을 통한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발간평화, 여성의 통일운동을 위한 목소리 제시: email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비롯해 부시의 악의 축 반대, 부시방안반대시위 때 이런

속 대표 관련 보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등을 영문으로 발송하여 부시의 대북정책 비판과 남북여성통일대회 등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등 평화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국제평화단체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에 전달했다.

② 국제시민사회에서 평화여성회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IPB, WILPF, Proposition One Committee, Veterans For Peace, AFSC,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바바라 톰(USIP), International Action Center, Women and Life on the Earth 등 국제 평화단체들이 평화여성회의 반전평화활동을 자신의 홈페이지, 이메일 리스트 또는 소식지에 게재하였다. 특히 Trouble and Strife라는 케미니즘 잡지에 평화여성회와 여성평화행동의 실명서가 실리고, WILPF 소식지 International Peace Update에 부시대통령 방한 반대집회와 이현숙 대표의 부상소식이 실렸다. 이에 따라 국제시민사회에서 본 회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활동의 폭이 더욱 확장되었다.

③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및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역문화와 홍보활동: 아시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연대 창립대회, 아셈인간포럼, 아시아사회포럼 등 참가를 통해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하고 한국여성과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운동을 소개하는 등 국제평화운동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평화운동의 국제연대의 폭을 확대하였다.

④ 평화여성회는 아시아평화연대의 운영단체(Spooring Committee)로서 활동하였고, 국제협력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했다. 한국에서 아시아평화연대 운영단체는 평화여성회가 유일하다. 아시아평화연대 준비회의 참석, 아시아평화연대 창립총회 참석, 아시아평화연대 관련 행사 조직 및 연대사 작성, 아파 한국 파견단 활동 지원 등 아시아평화연대의 운영단체로서 아시아평화단체와 연대를 위해 기여했다.

⑤ 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회는 한국 평화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해 여러 평화단체와 함께 평화운동의 국제화에 노력했다. 평화여성회의 제안으로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이 회의는 평화단체의 국제연대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국제협력위원장은 이 전략회의의 전략담당자로서 회의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략회의를 통해 아시아평화연대, 아셈인간포럼 등 국제회의의 참석자를 권장하고, 국제연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10.8 반전평화국제행동”을 조직하였다.

⑥ 국제협력위원회는 평화운동과 시민사회의 공동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평화단체와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의 폭을 확대했다. 국제협력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정상회의 여성환경위원회”에 참가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정상회의 민간포럼”(World People’s Forum)에 참석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의 <평화와 연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국제협력위원회는 <10.8 반전평화 국제행동>을 주관체와 공동으로 조직하는 등 평화운동과 시민사회의 공동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평화단체와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의 폭을 확대했다.

2) 과제

- ① 한국 사회의 평화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평화운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화여성회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문 브루서, 영문 홈페이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② 국제 (여성)평화운동의 동향을 정리하고 이를 회원 및 한국시민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도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③ 국제협력위원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지속적인 인적자원 확보가 필요하고 사무국내에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무국내 국제연대 담당자 배치가 필요하다.
- ④ 평화운동의 국제연대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국제연대를 주제(군사주의와 여성, 갈등 해결)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며, 아시아평화연대 등 나머지 부분을 총괄하는 국제협력위원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국제협력위원장에겐 집중되었던 사업을 관련 주제에 따라 분화하는 것이다.
- ⑤ 평화단체와 국제연대의 논의 틀인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제 평화단체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 ⑥ 팔레스타인 여성 등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해야 한다.

10. 특별사업 : 창립 5주년기념행사 '여성평화축제'

<창립5주년기념행사 개요>

- 일시 : 2002년 5월 15일(수) 오후4시-8시
- 장소 : 성공회 대성당 프란세스 홀
- 참석인원 : 300 여명
- 프로그램 :

1부 : 기념식과 평화여성상 시상식

사회 : 심영희 공동대표/한양대 교수

인사말씀 : 이우정 이사장

5년의 평화활동보고 : 영상물/ 이길현속 상임대표

축하의 말씀 : 한명숙 여성부장관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감사패 수여 : 예쁜 아이들 / 이길현속 상임대표
기독교사회발전협의회 / 정현택 이사
오마이뉴스 / 김숙임 공동대표

평화여성상 시상식

수상자 발표 및 선정 이유 : 심영희 심사위원장

평화여성상 수상자 : 박청수(원광교 서울교구 강남교당 교무)

평화공로상 수상자 :

이우정(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전 국회의원)

이효재(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전 여성단체연합 대표)

윤정옥(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전 경대협 대표)

평화공로상 수여 : 이김현숙 상임대표

수상자 인사말씀 : 박청수 교무

평화공로상 수여 : 이정자 이사

수상자 인사말씀 : 이효재 교수

축하의 노래 : 안시성(성악가)

2부 : '평화의 씨앗심기' 운동 선포와 축하마당

"평화의 씨앗심기" 운동 취지 설명

어린이 입장/북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 최강미, 예쁜 아이들

축하공연 : '상글한 여성들'

'예쁜 아이들'

생일떡 자르기 : 내빈과 이사

3부 : 평화 식사와 꼬마 바자

사회 : 김숙임 공동대표

평화식사와 여흥 그리고 꼬마바자

<창립5주년 기념 좌담회>

- 일시: 2002년 4월 23일 (화) 오후2시~5시
- 장소: 여성연구소
- 사회: 심영희(공동대표,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김숙임(공동대표)
남은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김현숙(상임대표)
- 주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난 5년을 돌아보며

<평화여성상 제정 사업>

① 취지

이 땅에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을 내고,
군사주의문화가 팽배한 한반도에 평화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기 위해, 그리고
여성들의 평화노력과 기여를 발굴하여 사회적 평화자원으로 만들고
국내외 여성들의 평화지도를 고양시키기 위해 평화여성상을 제정하다.

②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심영희(공동대표)

*심사위원

장만길(상지대 총장)

김예실(이사,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길현숙(상임대표)

이정자(이사, 녹색연합 대표)

지영선(한겨레 논설위원)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③ 제1회 수상자 : 박청수 (원불교 서울교구 강남교당 교무)

④ 시상안내

시상내용	평화여성상	평화공로상
대상	통일과 평화분야에서 탁월하게 기여한 여성개인, 여성단체	여성평화운동을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
기준	1. 남북화해와 협력활동 2. 평화문화 확산운동 3. 반군사주의, 군축, 전쟁 반대 평화활동	여성 평화운동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시상	상패 및 부상	
추천마감	추천마감은 4월 26일(금)까지이며, 우편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	
접수방법	우편접수 : (100-391) 서울시 중구 광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실 4층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여성상 위원회 앞' 팩스 : 02-2275-4860, 이메일 : wwp@chollian.net	
선정방법	'평화여성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제출서류	1. 후보자 이력서 2. 추천서 1부 3. 후보자 활동자료 (홈페이지 http://www.peacewomen.com 에서 다운로드 가능)	
시상일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원5주년 기념 "여성평화축제" 행사일 (2002년 5월15일(수) 오후 5시, 장소: 성공회대성당 프란체스카홀)	
발표일	2002년 5월13일(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담당	1.사)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평화여성상 위원회' (담당 : 김현희 평화통일부장)	

IV. 연대사업

□ 상설연대활동

1. 여성연합(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1) 이사회

- ① 1차 : 2월 19일, 여성사회교육원
- ② 2차 : 5월 14일, 여성사회교육원
- ③ 3차 : 9월 10일, 여성사회교육원
- ④ 4차 : 11월 12일, 여성사회교육원
- ⑤ 17차 총회준비를 위한 2차 총회준비위원회 : 12월 20일, 여성사회교육원

2) 통일평화위원회

① 1차(3/19)

가.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논의

나. 2002년 통일평화위원회 세부사업계획 검토

다. 통일연대 가입에 대한 점검

: 2001년에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 차원에서 통일연대에 가입하기로 하였으나 가입시기는 전반적인 통일정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다 2002년으로 이월되면서 정현배 통일평화위원장이 여성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성연합 통일평화위원회로 가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필요함을 공유하고 통일연대에 대한 현황과 학 후 다시 가입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다.

② 2차(4/23)

가.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논의-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중심으로

나.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개최 검토

다. 기타도의

-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평화통일분야 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논의

③ 3차(6/27)

가. 남북여성통일대회 준비에 대한 논의

④ 4차(8/16)

가.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준비에 대한 논의

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운동방향에 대한 도의

3) 사무국연석회의

- ① 1차 : 2월 6일, 여성사회교육원
- ② 2차 : 4월 12일, 여성사회교육원
- ③ 3차 : 6월 18일, 여성사회교육원
- ④ 2002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8월 20일

2. 민화협 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1) 6.15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여성, 평화의 힘! (Women, Power of Peace!)

(1) 행사목적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여성의 역할을 확인하고 여성이 앞장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계기로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여성들의 참여를 높인다.
- 연단, 문예와 놀이, 산행, 공동걸이를 통해 남북 여성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따스한 자매애를 나눈다.
- 분야별 만남, 전시회 등을 통해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로 삼는다.

(2) 일 시 : 2002년 10월 15일(화) - 17일(목)

(3) 장 소 :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 / 금강산 여관

(4) 주 관 :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본부

남측 - 민화협 여성위원회, 7개중단 여성위원회,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여성위원회

북측 -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협회,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5) 주 최 :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원회

(6) 후 원 : 여성부

(7) 참가인원 : 총 677명

남측 참가자 (이현숙 상임본부장 등 357명) / 북측 참가자 (박순희 위원장 등 300명)

/ 해외 20여명

<남측참가자>

: 7개 주관단체 주요 임원

: 여성정치인, 여성학자, 여성미술작가, 문화예술인, 여성노동자 및 여성농민, 여성정
체인 및 문직 여성(보건의료인, 웹조인 등), 교육 및 보육관계자, 기자단, 공연팀 등

(8) 남북(해외) 대표단(가나다 순)

•남측 대표단

1. 문경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대한치위생사협회 회장)
2. 박정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3. 배은심 (통일연대 고문)
4. 윤금순 (통일연대 여성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 부회장)
5. 은망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6.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7. 이영신 (7대중앙 여성위원장, 원불교 교무)
8.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9. 이길현숙 (민회협 여성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0. 정현택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1. 지은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북측 대표단

1. 장승근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 서기장)
2. 김명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강촌협동농장 관리위원장)
3. 김진수 (평양산원 원장)
4. 조성실 (조선민주여성동맹 평양시 위원장)
5. 남순희 (삼흥대학 학장, 학장협의회 고문)
6. 리영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7.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8. 배민옥 (2.16 예술교육출판사 사장)
9. 권영애 (평양시인민공사총국 부총국장)
10. 방진실 (평양수예연구소 소장)
11. 홍일천 (김형직 사범대 학장)

•해외 대표단

1. 김소자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장)
2. 김지영 (재일본 민주여성회 회장)

(9) 주요행사 : 개막행사, 6·15 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남북합동수예
및 미술전시회, 유희·오락경기, 남북공동연회, 부문별 상봉모임, 합동예술공연, 폐막식,
공동산행, 전승행사 등

(10) 세부내용

<10월 15일(화)>

질경, 출발성명 발표, 서울 출발 (오전 7시)

평화기원 여성외식 : 풍족천에 손바닥 페인팅 및 평화기원 서명(오후 7시 30분~9시)

<10월 16일(수)>

○ 대회장 입장 및 개막행사 (오전 9시~10시)

- 장소 : 김정숙 휴양소 운동장
- 공동사회 : 남측 - 이김현숙 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본부 상임본부장
북측 - 리영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개막식 순서 :

- 주식단 및 참석자 입장
- 개회 선언
- 통일기 제양 - 남측 : 김정숙, 이은하(출처 '출')
- 대표단 소개
- 축하연설

- 북측 :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회장
- 남측 :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해외 : 김소자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 6·15 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오전 10시 ~ 11시)

- 장소 : 김정숙 휴양소 운동장
- 주제 : 6.15 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
- 내용 :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

- 남 - 윤금순 통일연대 여성위원장
- 북 - 최금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해외 - 김지영 재일본민주여성회 회장

▷ 평화와 여성의 역할

- 북 - 배민숙 2.16 예술교육출판사 사장
- 남 -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남북여성통일대회 기념 수예 및 미술전시회 (오전 11시 ~ 12시)

- 장소 : 김정숙 휴양소 안 전시장
- 전시품 :
북측 - 풍경 및 인물 위주의 수예품, 여성화가 미술, 손수예 등
현장에서 어린이 서예가들이 붓글씨 시범

남측 - <여성미술전> 여성의 삶, 역사, 정서를 반영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작품 23점 (주관: 민족미술인협회)

• 전시회 순서

- 개회

- 개막사: 김인순 민족미술인협회 회장(남), 방진실 평양수예연구소 소장(북)

- 전시장 이동

- 개막 테이프 자르기: 권혁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김덕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 연하 회장, 신숙희 우먼타임스 사장, 이영숙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정미 부산물인연대 상임대표,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현자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임정희 미술평론가, 경덕희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최영희 내일신문 사장

- 관람

• 작품 소개 (작가명·제목·표현기법)

윤석남 · 일기 · 드로잉 / 김건희 · 미사끼질벽 · 천에 유채 / 김미혜 · 소녀 · 천에 아크릴 / 방정아 · 새로운 시선 · 천에 아크릴 / 김종래 · 잠 · 천에 유채 / 홍미선 · 부엌 · 컴퓨터프린트 / 신현정 · 여인들의 깨달음 · 수묵 / 홍현숙 · 2002 통일전망대프로젝트 · 과자봉지 / 박영숙 · 나르시시즘 · 사진 / 김인순 · 심진강 · 드로잉+컴퓨터 합성 / 조정숙 · 진혼굿 · 사진콜라주 / 노원희 · 오래된 살림살이 · 천에 유채 / 정정열 · 곡식 · 천에 아크릴 / 안성금 · 원으로부터 — 共生 · 수묵

○ 율희·오락경기 (오후 2시30분 ~ 4시30분)

• 장소: 김정숙 휴양소 안 전시장

- 특징: 남, 북, 해외 참가자 전원을 자구팀, 단결팀으로 나누어 각각 선수단 30명을 선발해 대결한 후 승리한 팀에게 도자기, 수예품 등의 선물을 주었으며, 북을 동원해 응원전을 벌여 한껏 흥을 돋구었다. 종목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채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결하던 두 팀이 통일열차를 만들어 뛰다가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 ① 마음합쳐 꽃을 넘기: 꽃모자 쓰고 남북해의꽃을 넘기→통일대문 통과→꽃모자인수
- ② 공이고끼고 달리기: 공 머리에 이고 양옆에 끼고 달리기
- ③ 고깔쓰고 달리기: 고깔을 얼굴 앞으로 쓰고 공을 차고 반환점 돌기
- ④ 우리엄마 찾기: 꼬마가 달려나와 남·북의 어머니를 부르면 함께 뛰기
- ⑤ 병끼고 달리기: 병 안에 고리를 넣어 들고 달리기
- ⑥ 통일열차 달리기

○ 공동연희(오후 6시30분~8시30분): 환영만찬

• 장소: 금강산 여관

- 축하연설: 남측 - 태은심 통일연대 고문
북측 -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 축시: 최민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경제인협회 부회장
- 전대 제의: 박청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미경 국회의원
- 기념품 전달: 남측 참가자들이 평화기원 여성의식에서 웹드래잉팅한 풍목천을 지은희 공동의장과 문정숙 공동본부장이 북측의 박순희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10월 17일(목)▷

○ 부문별 상봉모임 (오전 8시 - 9시)

- * 장소: 김정숙휴양소 앞 운동장
- 방식: 관심분야별 나누어 대표단 전체 참여하여 단체에서 하는 일을 소개
- 분야: 통일분야 / 여성분야 / 종교분야 / 근로여성(노동·농민)분야 / 교육·예술· / 보육·보건 분야 / 경제 분야 / 정치 분야
- 특징: 분단의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남, 북의 상황과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였고 그 만큼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는 자리였다.

○ 합동예술공연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 * 장소: 김정숙 휴양소 운동장
- * 사회: 남측-남연순 공동집행위원장, 북측-김선영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인
- * 공연내용

- 남측 공연: 여성 3중창: '노래해 꽃다지' <반갑습니다>
어린이 8중창: '아름나라'의 통일노래 메들리 <내게 강같은 평화> <손꼽아보자>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는지 아니> <서울에서 평양까지>
시낭송: '평화여성회 김순임공동대표' <평화의 춤을 너울너울>
여성5인중: 민족춤패 '출' <부채춤 공연>
여성 독창: 민요가수 김예명 <영경려야> <진도아리랑>
여성3중창: '노래해 꽃다지' <바위처럼>
- 북측 공연: 여성5중창 <녀성은 꽃이라네>
무용 <돈들라리>
여성독창 <산으로 바다로 가자>
무용 <조개개는 처녀들>
어린이들의 무대 - 독창 <우리엄마보통> 무용 <인형춤>
장고독주와 노래 <군밤타령>
무용 <손복춤>
여성민요독창 <영천아리랑> <양산도>

여성독창과 합창 <우리는 하나>

- 단심줄 고기와 다함께 춤추기 : 오색천을 수십길래로 늘어뜨려 고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주변에 500여명의 여성들이 북측의 안내에 따라 통일노래에 춤동작을 배워 함께 춤 추면서 한껏 흥을 돋우었다.

○ 폐막식 (오전 11시 30분 ~ 12시)

- 장소 : 김정숙 휴양소 운동장
- 폐막인사 : 남측 /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북측 / 로성실 평양시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 공동결의문 채택 : 남측 / 이명신 7대총단 여성위원장
북측 / 리동희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장
- 북측 어린이들의 시와 노래
- 평화의 비둘기 날리기 : 6.15를 상징하면서 6마리 비둘기를 남측 어린이 6명이 날리고, 15마리 비둘기를 남, 북, 해외 여성들 15명이 날리면서 마지막 절정을 이루었다.
- 5명(앞) - 변숙현(통일연대), 윤명선(한국여성신학자협회), 이나호(평화여성회), 안순덕(새천년민주당)
- 10명(뒤) - 김주숙(여성사회교육원), 고은심(천도교여성회), 박용자(원불교), 문춘자(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순덕(제주도여협), 이광옥(예수성심수녀회), 이경숙(민주노동당), 박수분(통일을일구는여성들), 이영자(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김기표(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통일기 하강 : 남측 - 김정숙, 이은하(민족총력 '출')
- 폐회

○ 공동산행 (오후 2시 ~ 4시 40분) • 장소 : 금강문

○ 전송행사 (오후 4시 40분 ~ 5시) • 장소 : 김정숙 휴양소

(11) 추진본부평가

<성과>

가. 분단이후 남북측 각분야의 여성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최초의 일로서 역사적인 남북여성교류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특히 남측은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여성단체들과 통일·평화운동을 전개해온 여성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노동, 농민, 보건, 보육·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대표들이 참여하였다. 북측도 주최단체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협회, 민화협 여성부였지만 참가자들은 노동, 농민 등 각 부문 단체인, 교수, 인민회의 대의원, 병원원장, 출판사 사장, 방송국장 등이 참여하여 특한 여성계가 망라된 자리였다.

나. 남북측 모두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특히 북측은 지금까지 펼쳐온 민간교류행사 중 그 어느 대회때보다 세심한 준비를 하여 남북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대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게 되어 남북여성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파스한 자매애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다. 그동안 남북민간교류에서 파소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독자적인 여성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남북민간교류의 확고한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라. 남북여성들이 직접접촉을 통해 상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남북여성들이 분단과 통일문제를 자기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토론·유회경기·예술공연 및 전시회 등을 통해 반세기 넘게 다른 세계에서 살아오는 사이 상호 달라진 문화에 대해서 공유하고 확인하는 자리였다.특히 수예 및 미술전시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여성미술교류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한계>

가. 대회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시 특측은 남북이 각각 대표단 100명을 구성하고 남북은 참관단을 좀 더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남측이 대표단과 참관단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대표단으로 구성하기로 한 바, 남측대표단의 참석자 수가 3배이상 높아 대회 개최시 남측참가자끼리 모여있는 그룹이 발생하는 등 전체 참가자 수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나. 남측 참가자들 내부의 세대간, 이념적 차이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남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 대회 시기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 연기되어 배편을 고집하는데 많은 예외가 있었고 현대이산측 배편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비용부담이 커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라. 대회 참가자 중 불허자가 8명 발생하였으나 대회 일정상 속초로 떠나는 당일 통보를 받게되어 불허사유에 대한 통일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과제>

가.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나. 6·15 공동선언 실천과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여성들의 역할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남남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구성

*공동의장

박정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태은심(통일연대 고문),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은방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공동본부장

이현숙(상임/민화협 여성위원장,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문경숙(여협 이사), 이명신(7대중

단), 윤금순(통일연대 여성위원장),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남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손미희(통일연대 여성위 부위원장), 송성숙(여협 사무총장)

*공동사무국장

장수경(통일연대 여성위원), 진은주(경화여성회 사무국장), 최성미(여성연합 조직국장)

의전팀장 : 송경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외협력부장)

총무팀장 : 안정희(민화협 조직간사)

연출담당 : 황금명륜(여성연합 기획국장)

미술전시회 담당 : 임정희(미술평론가)

2) 2002년폭공동행사 연대활동

① 새해맞이 반쪽공동행사

· 일시: 2002년 2월 26일-28일

· 장소: 금강산

· 참석: 심영희 공동대표, 정현백 연구원장(여성연합 대표로 참가), 진은주 사무국장

· 내용: 참가는 했으나 본 행사는 무산됨.

② 615공동선언 두 돌 기념 6.15민족통일대축전 / 여성부문상봉모임

· 일시: 2002년 6월 14일-15일/ 6월15일 오전8시

· 장소: 금강산

· 참석: 이길현숙 상임대표, 진은주

· 내용: 개막식, 사진전시회, 단오민속놀이, 각 부문간 상봉모임, 예술공연 폐막식, 공동 산행, 공동식사, 등

· 합의내용:

6월 15일 오전에 열린 부문간 상봉모임 시, 남측 여성대표단은 금강산 여관 2층에서 남,북,해외여성 대표단이 만나는 여성부문 상봉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남측대표단 9명, 북측대표단 10명, 해외 대표단 및 참관인 20여명 등 4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길현숙 남측단장과 리영희 북측단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날 상봉모임에서 참가자들은 2002년 7월 개최예정이었던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시기와 장소문제를 토론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여성통일대회는 (더위를 피해) 9월 중에 개최한다.

2) 대회장소는 금강산으로 잠정 합의한다.

3) 해외대표 참가문제나 참가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후 실무회담에서 확정기로 한다.

- 참가대표단

<남측 대표단>

- 1) 이길원숙(단장, 민화협 여성위원장)
- 2) 고기효(민화협 여성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평화통일위원장)
- 3) 정원택(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연 평화통일위원장)
- 4) 윤금순(통일연대, 전국여성농민회 부회장)
- 5) 신희운(YWCA 사회개발위원회 위원장)
- 6) 이재희(여성의 진화연합 공동대표)
- 7) 손미희(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 8) 전은주(평화여성회 사무국장)
- 9) 김수진(경여대협)

<북측대표단>

- 1) 리영희(단장, 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 2) 리정일(최고 인민위원회,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참사)
- 3) 홍일천(김형직사범대학 학장)
- 4) 유현옥(조국통일연구원 실장)
- 5) 장금숙(온하지도국 모란봉 피복공장 지대인)
- 6) 김정화(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인민배우)
- 7) 박영희(민화협 사무소 부부장)
- 8) 황하숙(여명 중앙위원회 부장)
- 9) 허경옥(여명 중앙위원회 부원)
- 10) 이명순(민화협 사무소 부원)

㉔ 8.15 민족통일대회(서울) / 여성부문상봉모임

- 일시: 2002년 8월 14-16일 /16일 오전 8:30 - 10:00

- 장소: 서울 워커히 호텔 컨벤션 센터

- 주관: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여성위원회

- 사회: 이현숙(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원장)

- 내용: 참가자 소개와 인사, 북측 대표단 환영 및 답사,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토론(2002년 9월 11일(수) - 14일(토), 주제는 6.15공동선언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로 합의)

- 남북 양측의 여성대표 명단

<북측여성대표단>

대표 : 7명(총 대표 55명 중)

리원구(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리영희(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동희(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안성희(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과장)

리순희(민족화해협의회 과장)

박영희(민족화해협의회 과장)

장연희(조선학생위원회 지도원) 외

* 북측은 여성대표단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아 숫자는 변경 가능

예술인 : 31명(총 예술인대표 43명 중)

리명순(문화성 과장)

안무가 2명

배우 27명

의상사 1명

<남측 여성대표단>

* 민화협측

이현숙(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여성위원장 : 실무회담 여성대표)

고기효(민화협 여성위원장)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유혜림(한국여성지도자연합 사무총장)

장복심(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

* 통일연대측

윤금순(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여성위원장)

김혜경(민주노동당 부대표)

손미희(통일연대 여성부위원장)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최현숙(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신지심(전여대협 대표)

* 종단측

정태숙(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위원)

이현숙(원음방송 서울본부장)

* 외부인사

이비경(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장)
 이한자(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경애(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주석단과 일관대표단에 여성 40여명 참석
 박용길(민화협 상임의장)
 은방희(민화협 상임의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민화협 상임의장, 전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
 김희선(국회의원) 등 40여명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여성위원회 활동

- 본 회 이길현숙 상임대표가 민화협 여성위원장으로 활동
- 2002년 6.15 두 돌 기념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민화협 여성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여성부문 상봉모임을 주도하여 남북여성대회 개최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 815 민족통일대축전 서울행사에 여성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여성부문 상봉모임을 주도하고 남북여성통일대회의 남북을 합쳐라다.
- 민화협 여성위원장으로서 2002남북여성통일대회를 발의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남북실무회담과 정부와의 협의 및 남북대화를 주도하여 협상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면서 남북여성교류의 물꼬를 뜨는데 평화적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3. 통일교육협의회(공동의장, 간사단체)

- 의장단 회의: 이길현숙 상임대표가 상임의장으로 활동(의장단회의, 이사회, 총회 참석)
- 여성분과위원회 회의(평화여성회가 간사단체로 활동)
- 참가단체: 부산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1) 통일교육 강사드레이닝

일시 : 2002년 7월 16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참여인원 : 30여명

사업목적 :

-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여성통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기초가 될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 여성과 평화의 관점이 반영된 통일교육의 실시로 전문가를 육성해내고 각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대상자들을 발굴해낸다.
-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관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접근으로 실천을 모색한다.
- 남성중심의 통일운동을 극복하여 여성들의 통일운동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지도력을 강화한다.

내용 :

- 경제분석과 통일운동, 그리고 여성(지은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평화교육에서의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입문(백희불기, 천해지기)
-이필숙(세계평화여성연합 이사)
- 통일교육의 민주시민교육 방법 적용의 의미
-김희은(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민주시민교육 진행전문가)
- 통일교육의 문제 풀이내기 1(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핑 등)
-이경숙(여성사회교육원 사무국장)
- 통일교육의 문제 풀이내기 2(터부게임, 법정게임)
-박연화(민주시민교육 진행자)
-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전은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

2) 여성통일학교

일시 : 일시 : 2002년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8월 25일 오후4시

장소 : 양산 청소년수련원

주최 : 통일교육협의회 여성위원회

후원 : 통일교육협의회

참가인원 : 80여명

사업목적 :

-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북한여성의 생활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의 습득하는 계기를 만든다.
-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태도를 형성하여 통합사회의 모델을 연구개발하는 기초가 되도록 한다.
- 다양한 자료제공과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통일시대에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일교육을 통한 여성단체들간의 교류와 회원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을 지역사회

에 확산하고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및 참여자들과 면대면의식을 강화한다.

내용 :

<8월 24일(토)>

오전 11:30 - 1:00 : 등록 및 결식식사

오후 12:50 - 1:00 : 인사말(김희은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위원장)

1:00 - 3:00 : 1강 / 통일정세와 여성 (지은희 민화협 상임의장)

3:00 - 5:00 : 2강 / "우리의 벽 허물어요"(김순애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실장)

5:00 - 7:00 : 3강 /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요"

- 내가 생각하는 통일, 이것이 궁금해요.(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6:30 - 8:00 : 저녁식사

8:00 - 11:00 : 4강 / 영화로 이해하는 이북여성의 삶

(장영실 부산여성회 통일사업위원장)

<8월 25일(일)>

오전 8:00 - 9:00 : 아침식사

9:00 - 11:00 : 5강/이북여성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박영미 부산여성회 회장)

11:00 - 1:00 : 6강*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전은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

1:00 - 2:00 : 점심식사

2:00 - 4:00 : 7강/ "통일을 여는 여성의 역할"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4.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의장, 공동집행위원장)

1)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을 위한 여성추모제

가. 사전회의

· 일시: 2002년 7월 16일(화) 오전

· 장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 참여단체 : 전여대협, 천주교여성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가나다순)

나. 여성추모제

· 일시: 2002년 7월 25일(목) 오전 12시

· 장소: 탑골공원 앞

· 주최단체 : 기독교인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

화이며니모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 후원 :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호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 요구 :

① 미군측의 재판권 반환, ② 미 부시대통령의 공개사과, ③불평등한 한미소과 협정 개정, ④공동진상 조사단 구성, ⑤ 사고의 책임부대 캠프하우즈, 미군훈련장 폐쇄

· 평가 : 추모제 형식으로 진행된 집회방식과 평화여성회내 평화여성팀의 추모공연 방식 역시 좋은 호응을 불러 일으켜 언론홍보의 효과를 가져와 여론형성에도 기여하였다.

· 프로그램 :

1부 (12시 - 12시50분)

사회 : 정영란 한국여성민우회 간사

① 고 신호순, 심미선양 미군피해자들을 위한 묵념

② 추모사 :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③ 고 신호순, 심미선을 위한 추모의 시 낭독 : 윤명선 평화를만드는 여성회이사,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④ 고인들을 위한 진혼의 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여성팀

⑤ 여성들의 추모발언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실행위원 김신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신혜수

⑥ 성명서 낭독 : 구미정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정의평화 위원장

⑦ 헌화(아름없는 영혼으로 부활하소서) : 참가자 전원

행사2부 (12시50분 - 1시30분) : 서명 및 모금운동

2)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직접사과! 소폭전면개정! 여성도깨비국가, 사진회의 :

· 일시 : 2002년 12월2일 오전10시

·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여단체 : 자주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나, 여성도깨비국가

· 일시 : 12월 5일(목)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제안대경 : 모권적(母權的) 생식의 힘을 주술의 힘으로 전환시켜 마을공동체를 구하고 자 했던 도깨비웃을 제련하여, 효순이와 미선이의 넋을 위로하고, '불평등한 소과 개정'을 이루고자 하는 명원을 모은다.

· 목적 :

① 두 명의 여중생 무죄평결을 규탄하고 사건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② 이번 사건 및 미군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소파개경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
- 주체단체 :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기독교민회, 반미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자주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외교위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총 21개)

· 프로그램

<굿>

- 1) 상주 입장 : 소복입은 여인네 50여명과 삼베수건을 두른 참가단이 도열한다.
- 2) 무당 입장 : 굿을 주관할 무당을 모신다.
- 3) 월경서담 등장 : 효순미선 님을 가리며 소파를 개경하라는 서담이 장대에 걸린 채 등장
- 4) 무당의 굿거리 : 상주들은 곡을 하고, 무당은 굿을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다.
- 5) 님을 달래는 위로가 : 두 어린 영혼의 님을 달래며, 소파개경을 요구하는 민요풍이
- 6) 참가자 발언 :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이양, 부시직접사과, 소파전면개경 요구
- 7) 정리 : 굿을 시작한 장소로 돌아와, 월경서담을 내려 떼우면서 우리의 모든 기원
- 8) 월경서담과 만장을 앞세운 참가단의 미대사관에 항의의 뜻 전달하기
- 9) 항의서한 미대사관에 전달

<주변 설치>

- 1) 금줄 설치 : 숯, 술입, 소파 개경의 염원을 쓴 한지를 매단 금줄을 쟁쟁인 장소 주변에 설치하여, SOFA라는 악귀를 몰아내고 금줄로 차단된 평화의 공간에서 SOFA를 기원하는 행사를 벌인다. 이번 굿에서는 붉은 종이(악귀를 몰아내는 벽사), 술가지(평안도에서는 술가지를 꽂은 금줄을 만들어 태어난 남녀아이의 성적인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한지(소파 개경의 기원을 씌), 숯(정화작용)을 매단 금줄을 행사장 주변에 설치한다.
- (* 금줄 : 아기가 태어났을 때 문간에 걸었던 금줄문화는 누구나 슬복하고 파르는 공동체 의식의 소산이었다. 또한 금줄을 원세끼로 묶는 것은 비밀상적인 행위로써 도발적 시위를 의미한다. - 주장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 2) 만장 설치 : 소파 개경의 염원을 담은 만장을 쟁쟁인 장소 주변에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도깨비국의 목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아. 평가

- ② 21개의 여성단체가 주최가 되어 약 12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기존 발언중심의 집회방식과는 달리 문화제 형식을 도입하여 차별성과 참신성이 있었으며 TV뉴스, 각

신문사에 취재 보도가 일기가 뜨거워 여론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한지 및 과제

① 미대사관측에 여성들의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적점사과! 소파권면계경!의 요구가 담긴 항의시한 직접전담이 거부되자 우편으로 미대사에게 발송하였지만 답변은 받지 못하였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미대사관 방문학박 및 면담요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21개 여성단체가 주최가 되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조직이 활발히 되지 않아 참가자수가 120여명에 그쳤다. 여성대중 조직화의 연구가 필요하다.

③ 문화행식의 집회이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 다가섰지만 무대위치 주변에 이미 참가여성들이 둘러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무대위치 선정 및 참가자 위치 선정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3) 사이버 운동 '1차 형사재판권 이양을 위한 부시에게 항의메일 날리기'

· 일시 : 2002년 8월7일 -

· 방식 : 여중생 범대위의 소속단체인 평화여성회가 주축으로 부시에게 1차 형사재판권 포기요청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온라인 신문 민중의 소리와 함께 전개하다. 또한 공식적으로 1차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내용 공문을 여중생 범대위 대표자 이 김현숙 상임대표의 16명의 서명과 함께 미 태약관,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에 DHL로 발송하다.

1차 형사재판권 이양을 요구하는 항의메일에 약 7,000여명의 사람이 동참하다.

· 결과 : 9월초 미법무부로부터 재판권 포기여부 책임은 미국무성과 군사당국 간의 협의 아래 놓여있다고 하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받았다.

· 내용 : (●글모음 참조)

· 성과

① 항의쪽지 날리기에 7,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DHL로 공식문건을 미국무부, 법무부, 태약관, 국방부등에 보낸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어 재판권 포기요청 여론형성에 기여하였다.

② 9월초 미법무부로부터 재판권 포기여부 책임은 미국무성과 군사당국 간의 협의 아래 놓여있다고 하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여중생 범대위에서는 대표자들의 명의로 발송한 공식문건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ულ텐더러 형사재판권 포기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내었다.

· 평가

① 미 대사관에 항의쪽지 날리기에 실명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아 익기 극복할 정도 수준의 파격한 글들 역시 눈에 많이 띄었다. 일반 네티즌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② 여론분위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항의폭지 날리기 7,000여명의 참가는 예상보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다. 온라인 신문 민중의 소리뿐 아니라 네티즌들의 참여가 활발한 사이 트와도 적극적으로 진척하여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군사주의 반대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contact person)

1) 회의

- ① 구성 회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두레방, 매대춘근전을 위한 한소리회,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개인회원
- ② 회의: 총 17회(참석: 김엘리 정책위원장)

2) 2002 서울국제회의의 준비 워킹

- ① 제목: 2002 서울 국제회의의 준비 워킹: 나의 삶에 우리의 평화를 - 군사주의와 여성 인권 -
- ② 일시: 2002년 6월 15일 - 7월 20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6시
- ③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 회의실
- ④ 참석자: 약 30명
- ⑤ 목적

가. 국제회의의 준비를 위한 사전 워킹의 성격으로

-국제회의의 방향과 성격에 관한 논의를 모은다.

-군사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문제의식을 심화

-회의 준비자들의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도를 높인다.

나. 군사주의와 여성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평화에 관한 담론을 만들고, 한국여성평화운동 방향 논의의 계기를 만든다.

⑥ 내용

가. 1차 워킹: '한국여성평화 네트워크'의 모든 것 (유영남, 두레방)

나. 2차 워킹: 군사주의와 여성 (발제: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다. 3차 워킹: 한국민족주의와 인권 (발제: 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라. 4차 워킹: 한국평화운동의 사례들: 각 참여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각 단체 발표

3) 2002 서울국제회의의 개회

- ① 제목: 2002 서울국제회의의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 ② 일시: 2002년 8월 16일 - 18일

- ③ 장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안성 너리굴
- ④ 주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 ⑤ 주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 ⑥ 후원: (재)한국여성인권재단
- ⑦ 참석자: 공개회의 약 150명(서울), 비공개회식 약 80명(안성)
- ⑧ 해외참가자: 오키나와(군대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행동), 미국(재미한국여성 활동가 모임, LA-오키나와 평화 네트워크,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여성행동), 필리핀(기지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성들의 교육/발전/생산 연구회,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아시아-태평양 연합, 부클로드 센터(성매매 여성들의 지활을 위한 상담센터)), 일본(세계 역사교과서 박물관 위원회, 바우넷 지면, 개인 등), 푸에르토리코(라틴아메리카 인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연구소, 생존, 그 이상을 위한 민중협회, 비에 케스 여성연합)
- ⑨ 주제
 - 가. 공개회의 주제: 군사주의, 여성, 그리고 탈군사화를 위해 / 세계화, 군사주의 그리고 911 / 세계화와 여성국제 성매매 / 탈군사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
 - 나. 회식 주제: 기지촌여성들의 삶, 아메리시안, 일상적 삶속에서의 군사주의, 환경과 건강, 조약, 기지반환 그 이후
 - 다. 여성들의 작품전시회: 나를 그리다, 평화를 그리다
- ⑩ 본회 참석자: 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이은하, 안병진, 장희원, 최현진, 김정수, 정경란, 김철리

6.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상임대표)

- 1) 여중생 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기 자 회 집
 - 일시: 2002년 9월 5일 (목) 오전 10:00
 -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내용: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한 SOFA 개정 요구안을 외교통상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2) SOFA 개정촉구 집회 정례화
 - 일시: 월1회 두 번째 화요일
 - 장소: 미대사관 근처
- 3) 불평등한 한미 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2002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719-894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522-7284)
- 주최 :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법국민대책위원회(757-7304),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개혁국민정당

· 토론자

시민단체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 이강희 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교수)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정희 변호사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 김관태 사무처장

정당

- 한나라당 : 원희룡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 송영길 국회의원
- 민주노동당 : 최규업 자주통일위원장
- 개혁국민정당 : 유기홍 정책위원장

정부

- 국무총리실 : 최종만 외교안보심의관
- 외교부 북미국 : 조태용 부국장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성명훈 부장검사
- 국방부 미주정책과 : 김광우 과장

7. MD저지와 평화군축 공동대책위(공동의장)

1) 사전전개 - 차세대 구축함(KDX-III)도입 전행정경

- 7월24일 : 기공선정 (특히드 마린사의 이지스 전투체계)
- 8월7일 : 대통령제거
- 8월14일 : 미국정부와 본계약 체결

2) 차세대 구축함(KDX-III)도입 왜 문제인가?

① MD체제로의 편입

국방부의 차세대구축함 도입사업은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이지스전투체계 도입이 미국

MD 체제로의 편입을 상정하고 있다는 의혹제기

② 불법적인 무기도입 :

- 이번 차세대구축함 사업은 예초 국회가 2001~2008년 사이에 예산 9,208억원을 들여 구축함 1척을 도입한다는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예산회계법을 어기고 3척을 구매하기로 결정
- 국방부 자신이 정한 획득관리규정 407조(외국무기의 직구대는 외국에서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에 한한다)에도 어긋나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임

③ 대응전행

- 국방부의 불법 무당한 차세대 구축함(KDX-III) 이지스 전투체제 확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 운동
- 국민감사청구서 접수(일시 : 2002년 9월25일)
- 국민감사 사항 : *국회예산회계법 및 국방부 획득관리규정 위반 여부 *작전요구능력에 한도미사일방어 임무가 추가된 배경 *미국 MID체제와의 관련성 *이지스 전투체제 선정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 및 불법 로비 의혹 등
- 평화여성회 국민감사청구 서명장어: 강순원, 김숙원, 김열리, 김대경, 김현희, 노귀남, 박성웅, 박수진, 여혜숙, 이김현숙, 이정자, 전은주, 최원진

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회)

9. 대인지뢰대책위원회(공동대표)

10.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공동대표, 실행위)

□ 비상설연대활동

1. 반전평화연대활동

1) 한미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15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

가. 일시: 2002년 2월 15일 오전11시

나. 장소: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다. 선언참가자: 여성계 원로, 여성단체 대표 및 임원, 여성학자 등 150인

라. 기자회견 내용

*사회: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참가자 소개(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인사말씀(지은희 정대협 공동대표)
- 취지 및 경과보고(이김현숙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선언문 낭독(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김윤옥 정대협, 안상님 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
- 한국정부에게 바라는 글 낭독(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 고문)
- 향 후 계획(이김현숙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2) 부시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선언

- 가. 일시: 2002년 2월18일 오전10시
- 나. 장소: 서울 YWCA회관 대강당(4층)
- 다. 주최: "700인 평화선언"준비모임
- 라. 내용

*사회: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개회 선언(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 고문) /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평화기원 촛불점화식/ 인사말/ '평화의 바이올린' 연주/ 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평화기원 노래합창(우리의 소원)/ 폐회
- 선언문: 미대사관 전달
- 한겨레신문 광고

3) 전쟁반대 평화선언, 대북적대정책 철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 가. 일시: 2002년 2월 20일 오후 3시
- 나. 장소: 봉요공원
- 다. 주최: 부시방한 반대 제 민주시민사회단체(전국민중연대, 미군기지공동대위, 소파개정 국민행동, MD저지공동대위, 통일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등)
- 라. 내용: 개회선언/ 민중의례/ 발언1. 전국연합 오종필 의장/ 발언2.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환 의장/ 문화공연-조국과 청춘/ 발언3. 환경연합 최일총장/ 발언4. 민주노동 혁명구 직대/ 결의문 낭독 여성연합 정현희 공동대표
- 마. 참석: 이김현숙, 김숙임, 이은선, 김정수, 이나호, 김엘리, 박수선, 김귀옥, 윤여영, 진은주, 이은하, 장희원

바. 내용:

- 성명서 한글, 영문 발표(국제 평화단체 배포)
-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글(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제안서)
- 평화쪽지날리기 2판, 항의메일 보내기 등 사이버운동 전개

- * 대회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본 회 이김현숙 상임대표가 얼굴에 부상을 입어 이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2/21)

4) 권쟁반대여성평화행동

① 3차 집행위원회

가. 일시: 2002년 2월 7일

나. 장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다. 내용: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대응 논의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 콘서트 공동주최에 대한 논의

② 평화실현 여성단체 1인 릴레이 시위: 2월14일-20일 오후12시-1시, 1시-2시, 미대사관-방한 중인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발언을 중단하고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

5) 한반도 위기예방 관련 논의 참여 및 대책활동

① 한반도 위기예방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 참여

· 일시: 2002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내용:

* 한반도 위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제와 과제(2시-3시 40분)

평화리더십 창출과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남한 내부의 과제: 이김현숙(평화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및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군사문제
의제와 과제(박순성 동국대 교수 외)

*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4시-6시)

1부에서 제안된 과제와타당성 및 현실성 검토

대선에서의 평화리더십 창출을 위한 유권자운동 방향 논의

범시민사회단체 및 과제 인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연대기구 창설 필요성에 대한 토론 및 추진방안 자유토론

② 한반도 위기예방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준비모임 참석

· 일시: 2002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느티나무카페

· 참석단체: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비폭력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연대

· 내용:

-연대기구에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개별단체 및 기존의 연대기구가 하기 힘든 일이나 그 효과가 비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몇가지 주요 사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선에서의 유권자 운동과 한반도 위기예방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대기구 주요활동(안)과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 선정

③ 한반도 평화연대(가칭)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 일시 : 2002년 9월 3일(화) 오후 3시30분

· 장소 : 6월사랑방

· 참석단체 :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MID저지공대위, 민화련, 비폭력평화연대, 시민정보미디어센터, 6월사랑방,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군축센터 준비모임,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경실련통일협회, 통일문화연구소, 한국YMCA 전국연맹

· 논의결과 : '한반도위기예방'에 초점을 둔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문제는 정족협회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대선과 관련한 활동은 평화단체들 중심으로 임시 모임을 만들어 준비해나가기로 하다.

6) 북핵관련 연대

① 북한 핵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11월 13일

· 장소 : 느티나무카페

· 주최 : 6월사랑방, 녹색연합, 민교협, 민족화해추진위원회,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자회견문 : (붙임모음 참조)

② 문제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참석

· 일시 : 12월 17일, 24일, 28일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강당

· 내용 : 정세공유, 단체별 관련사업공유, 박선원교수의 "북핵문제 대처방향" 발표 및 질의응답(24일), 정세토론, 시민단체의 대응방안 및 사업추진방안 논의

③ 시민사회단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위칙 5개 제안사항 발표

· 일시 : 11월 13일(수) 오전11시

· 장소 : 느티나무카페

· 참가단체 :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녹색연합, 민교협, 자통협, 여성민우회, 6월사랑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킹, 평등사, 평화통일시민연대

· 내용 : 3원칙- 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② 한반도 비핵화와 제네바 합의의 존중 ③ 화해, 교류협력 지속

5개 제안사항 - ① 제네바 합의 의지 재확인 ② 전제조건없는 조속한 대화 ③ 국회와 원외 '평화, 비핵, 화해협력 결의안' 채택 ④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력 ⑤ 북한에 대한 차질없는 중유지원

7) 기타 설명서발표 활동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 2002년 4월 3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중단을 촉구하는 사회단체 기자회견 공동입장 발표/ 2002년 4월 11일

-국방부의 '미 이라크공격 지원 검토'에 대한 논평 발표/ 2002년 9월 18일

-시민사회단체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중단에 대한 반대성명 발표/ 2002년 11월 15일

-'한반도 위기의 첫 번째 피해자, 북한의 어린이,노약자에 대한 식량지원은 계속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대북식량위기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2002년 12월 16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국회 요구안' 발표/ 2002년 12월 30일

8) 10.8 대러리증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여성평화행동

· 일시 : 2002년 10월 8일(화) 오전11시-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 연사동 남인사 마당

· 주관 :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킹

· 주최 : 가톨릭평화복지,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 평화네트워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의힘, 녹색연합, 다함께, 두레방, 대미준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민족문제연구소, 자주평화통일민주회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송파을지구당,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준), 민주노총, 부산여성회, 비폭력평화연대, 4월혁명회, 양심적병역거부실현국대처복무제 도입을위한연대회의, 여성환경연대, 원불교 남부한울 운동본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좋은벗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학생반전위원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대인지회대륙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회, 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의국인노동자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 MD저지공동대위(총 46개

단체)

- 참가해외조직: East Asia-US-Puerto Rico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Asian Peace Alliance
- 내용
 - *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평화행동 : 퍼포먼스
 - 우리는 이라크, 나아가 각 국에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대한 무시행정부의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 2003년 5월까지 미국은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에서 철수하라
 - 미국은 한반도, 오키나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에서 철수하라
 - 팔레스틴 사람들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안보를 만들어라
 - * 범 단체 공동 기자회견 : 10.8 반전평화국제행동 -미국의 아프간 침공 1년을 기억하며 이라크 공격을 반대한다
 - * 평화행진과 거리선전전
 - 참석자: 약 200명
 - 본회 참석자: 이길현숙, 김숙임, 최현진, 김현진, 김현희..

9) 5.24세계여성 평화군축의 날 F-15K반대 사이버행동 및 F15-K도입 반대활동

① 5.24세계여성 평화군축의 날 F-15K반대 사이버행동

- 일시: 2002년 5월24일부터
- 장소: 사이버공간
- 목적: 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을 기념하여 당면한 F-15K도입을 반대하며 국방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여성들의 평화군축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기 위함.
- 주관: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의신문
- 참가관: 약 300여명 참가
- 참여 단체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두레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새세상을여는 전국여성성공동체,새움터,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포항여성회, 호주세월지불위한시민의모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② F-X관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

- 부산대통령의 F-15 전투기 강제 의혹을 영리 성명 발표/ 2002년 2월 19일
- F-X사업 연구추구 성명 발표/ 2002년 3월 7일
- F-X사업 투명성 보장되기까지 기종선정 연기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성명 발표/ 2002년 3월 25일
- 1단계 평가 조차의혹에 대한 국방부 해명 요구 긴급 성명서 발표/ 2002년 3월 27일
- F-X 의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2002년 4월 3일
- F-X 의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추구 범국민대회 개최
일시: 2002년 4월 10일(수) 오전 11시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주최: F-X 의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
- F-X사업 의압 의혹 진상규명과 F-15K 내정 철회 2차 시민 추구대회
일시: 2002년 4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민원실 앞
주최: F-X사업 의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

2. 대선헌동 연대

1)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 활동 및 기자회견

"평화와 주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 일시: 2002년 12월 5일 오전 10시
- 장소: 느티나무카페
- 주최: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6.15남북공동선언실천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6월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평화통일일어나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선유권자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① 경과보고: 사회자
 - ② 기자회견 취지문 낭독: 박수호(통일연대 공동대표)
 - ③ 각 당 후보 평화통일정책 평가(총평) 발표: 오충일(6월사랑방 대표)
 - ④ 각 당 후보 평화통일정책 견고안 발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변연식(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 ⑤ 시민사회단체 평화통일 의제 발표: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기우(대선유권자연대 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⑥ 질의 응답

<관련활동>

- 각 당 후보들의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 각 당 후보들의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질의서 발송 및 취합
- 각 당 후보들의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질의서에 기반한 평가 및 권고안 작성
- 각 당 후보들의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 기자회견
- 각 당 후보들의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서 각 당 발송

2) 대선유권자연대 10대 정책 과제 제시

-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와 합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마련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 4. 이산가족, 장기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납북자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
- 전시 작전권의 환수
-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 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치 복무제 도입
- 북방한계선(NLL)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3) 2002 대선여성연대 정책과제 제시

<여성이 바라는 10대 주요 과제>

- (1)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2) 의회 및 공직,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할당 30% 이상 보장
- (3)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책 수립
- (4)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전 여성으로 확대 및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수립
- (5) 평화·통일 정책에서의 여성 50% 참여확대 및 반전·평화정책 수립
- (6) 여성장애인 관련 부처 내 전담 인력 배치 및 자립생활 지원체제 마련
- (7) 여성 농민의 모성보호, 건강, 육아를 위한 지원 시스템 확충
- (8) 성평등 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미디어·문화정책 실행
- (9)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층 확대 및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
- (10) 성평등적 관점이 통합된 예산 및 국가정책 수립

<여성이 바라는 60개 세부과제> 중

(58) 평화·통일분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및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지원 강화

-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일정책실현을 위해 평화·통일 관련분야(국방, 외교, 통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50% 이상 확대
- 다양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 서로의 여성 상황과 여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마련해나갈도록 행정·예산 지원 적극화

4)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여성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 일시 : 11월 21일(목)~22일(금), 26일(화) 오전 11시~12시 30분
- 주최 : 여성단체연대(11월 14일 현재 78개 여성단체)
- 장소 : 방송회관 2층 국제회의장
- 후원 : 미즈연, (주)여성신문사, 우먼타임스, 이프
- 주제 : 여성의 비전 · 새로운 리더십
- 일정 :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 : 11월 21일(목) 오전 11시~12시 30분

권영진 민주노동당 후보 : 11월 22일(금) 오전 11시~12시 30분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 11월 25일(월) 오전 11시~12시 30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 11월 26일(화) 오전 11시~12시 30분

(이회창 후보 패널로는 이김현숙 상임대표가 참석)

연대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1. 광범위한 연대활동의 전개로 여성평화운동의 위상이 확대되었다.
2. 평화여성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돋보였다.
3. 한반도 위기대방의 연대 필요성을 문제제기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3년도 사업계획안

I. 사업방향

1. 사업목표 :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 확산

2. 사업취지와 기초

2003년은 지난해의 월드컵, 대선, 촛불시위 등을 통해 분출되었던 국민들의 열정과 자발적 참여로 한반도의 희망과 가능성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주는 해이다. 대선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열망과 SOFA 개정을 통해 자주적인 한미 관계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의식과 주체적인 참여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수준을 더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대혁신이라는 시대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앞으로 경제의 합리성이 한층 강화될 정부를 맞이하여 NGO의 시민사회운동은 정책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동성 분출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미군계도차량에 의한 여중생압사사건으로 촉발된 소파개정, 미국의 대 테러전쟁정책 등으로 인해 평화 NGO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평화NGO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확산이라는 사업목표를 중점방향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한다. 그간의 평화통일사업, 평화교육사업 등을 보다 전문화, 대중화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센터, 일상의 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사업센터 등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국제평화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구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수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여성평화운동을 보다 체계적, 여성친화적으로 전개하여 평화여성회의 장기적 비전을 향해 모두 희망찬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자.

1) 소파개정을 통한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 남북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체계의 형성, 이라크전 반대운동 등으로 촉발된 반전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 전망을 가진 한반도 평화의제를 개발하고 평화통일정책제시와 국방부 의정감시활동 등을 전개한다.

- 2) 남북화해 협력을 모색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 3)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반평화에 대한 평화감수성과 평화심성을 고양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평화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 4) 생활 속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적 갈등해결 지도력 고양과 갈등훈련자를 양성한다.
- 5) 여성평화운동의 조직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원사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3. 주요사업내용

1) 전쟁반대와 평화행동

-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 전개
- 사이버 운동, 주요사안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여론형성 및 압력행사
- 평화군축을 위한 의경감시 및 의제개발활동
- 국내, 국제적으로 사안별 연대의 강화

2) 남북화해와 협력활동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 돕기
- 남북여성교류촉진 활동과 토론회
- 여성평화통일 정책제안 활동
- 통일, 의무, 국방분야에 여성의 참여촉진
-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

3) 평화,통일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
- 어린이인형극 전문화 및 대중교육매뉴얼개발
- 학교,교육기관과의 연계로 공교육 영역의 확대
- 일상의 평화문화 지원서 개발과 평화문화 정책제안
- 여성평화통일 지도력 양성 및 강사뱅크 안정화

4) 갈등해결과 중재훈련

-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장사드레이닝 실시
- 학교 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교사 워크샵
- 갈등해결과 중재훈련 매뉴얼 개발
- 갈등해결 전문가팀 운영
- 각 단체 요청시 팀파견

5)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

- 기존 회원 관리의 안정화 및 회원확대
- 여성평화지도력 개발 및 회원활동 강화
- CMS 활성화 및 제정의 안정적 자립화

6)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 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 정세대응 토론회 등을 통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 방향 제시

7) 국내외 연대 활동

- 5.24 세계 여성평화군축의 날 행사
- SOFA 기정운동 연대
- 반평화·반통일적인 법제도 폐지운동 연대
- 반전평화운동 네트워크 강화
- 국제평화운동연대 강화

II. 각 센터별 사업계획

1.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이김현숙 대표)

○ 사업방향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평화적, 여성적 관점에서 장기적 전망 아래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여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과제제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통일, 국방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여 긴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들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

○ 특별 사업계획안

1) 정세대응팀

○ 사업목표

- ① 한반도 평화·통일과 반전평화를 위한 정세와 주요이슈에 대한 활동을 펼친다.
- ② 급박한 정세대응을 위해 국내외 평화·통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 ③ 성명서 발표 등 긴박한 정세대응을 원활히 하여 여론을 확산한다.

○ 사업내용

①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복지 날리기 사이버 캠페인

데 : 2013년 1월 ~ 적절한 시기(판단)

주제 :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복지날리기 사이버 캠페인

방법 : 오마이뉴스에 평화복지날리기 배너 배치, 평화제시지와 전쟁위기극복의 대안제시글 받고 이를 모아 부서행정부, 미국대사관, 청와대 국회, 국제평화단체, 기타 관련 기관에 전송 및 우송

주최 : 평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오마이 뉴스 공동 주최

- ② 전문가 포럼
- ③ 휴전협정 50주년 연대행사
- ④ 국제연대 활동
- ⑤ 기타 정세대응활동-성명서 발표 등

○ 조직구성(안)

팀장: 홍승희

팀원: 김귀옥, 김정수, 정경란, 김민정 등 (총회 이후 팀원 보강)

2) 통일과제팀

○ 사업목표

- ① 한반도의 통일정책이 평화적으로 전개되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한다.
- ② 통일정책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화하고 여성참여를 요구한다.
- ③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④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의 확대와 여성의 역할을 강화한다.

○ 사업내용

- ① 여성평화통일포럼
- ② 남북여성교류관련 활동 - 6.15. 8.15행사, 여성행사
- ③ 국회 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평화통일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한다.
- ④ 정책과제개발학살 - 전문가, 자문위원과 함께 중장기 전망 속에서 여성통일외교 개발을 위한 학살을 실시한다.

○ 조직구성(안)

팀장: 윤덕희

팀원: 박현신, 강남식, 김귀옥 등 (이금순, 김애실, 노귀남 등 총회 이후 팀원 보강)

3) 국방과제팀

○ 사업목표

- ① 국방관련 의정감시활동을 실시한다.
- ② 국방정책과제개발 및 제시한다.
- ③ 대안적인 국방감시체도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 ④ 평화주의와 여성주의적 관점을 국방정책에 적용한다.

○ 사업내용

① 국방의제 제시를 위한 확산

국방의제제시에 필요한 기본 준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반을 형성한다.

② 국방부 정책에 대한 분석, 문제제기

국방정책, 예산을 발표하거나 국방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한다.

③ 국방관련 외국자료 분석

국방과 관련된 외국의 국가제도, NGO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수집하여 국내 국방정책을 감시하고 감독할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시도한다.

④ 국방위원회 의정감시활동

국방위원회의 의정감시활동을 통하여 국방위원회 관련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고 국방부 행정을 감시, 비판한다. 무기도입, 군축, 군대폭력 등 평화의제를 제시한다.

⑤ 5.24 세계 여성평화군축의 날 행사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 확산이라는 본 회의 중점사업에 초점을 두고 5.24행사가 벌어 성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 조직구성(안)

팀장: 안경애

팀원: 여혜숙, 안수경, 김현희, 김숙임 등

2. 일상평화센터

(소장 : 김숙임)

○ 사업방향

일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한다. 반평화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현실 이해를 돕고, 폭력과 군사주의에 의해 사람들의 내면에 형성된 무강을 해체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사업을 전개한다. 평화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 교육과 평화문화행태인을 실시한다. 평화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평화심성훈련을 실시한다.

○ 팀별 사업계획안

1) 평화교육·문화 팀

○ 사업목표

- ① 계층과 연령에 맞는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평화지도력을 개발한다.
- ② 평화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실시한다.
- ③ 평화문화확산을 위한 생활지침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 ④ 대중과 평화를 일상에서 친근하게 느끼고 교육할 수 있는 평화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사업내용

① 여성평화아카데미 2003 강좌 실시

평화운동에 관심 갖는 모든 이들이 여성평화운동에 심도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평화교육의 메뉴얼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다양하게 실시한다.

② 3차 평화인행극 실시

주요 공연기간을 설정하여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평화교육을 어린이대중에게 확산하고 반전평화의식을 고취시킨다. 신청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연출해 제작됨과 긴밀히 조직적으로 연계해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다.

③ 평화문화캠페인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평화문화생활지침을 개발하여 자료화하고 대중에게 홍보한다.

④ 평화기행

분단과 분쟁 지역을 돌며 구체적인 평화체험을 통해 평화의식을 더 높이고 현장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뤄지는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평화네트워크 형성도 시도한다.

⑤ 2차 청소년평화캠프 실시

작년의 청소년평화캠프 첫 경험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또래중계 갈등해결기법, 평화영상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이 강화된 청소년 평화캠프를 실시한다.

○ 조직구성(안)

팀장 : 이명희

팀원 : 김엘리, 임희숙, 김혜진, 김화숙, 김숙임, 박경임 등

2) 평화심성팀

○ 사업목표

- ① 평화심성, 감수성 강화를 통해 평화운동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시도한다.
- ② 여성평화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모색한다.

- ③ 평화주의자의 삶과 운동, 가치를 연구하여 평화운동의 운동방식을 개발한다.
- ④ 시민사회에 평화주의의 마인드를 확대한다.

○ 사업내용

① 평화심성팀 정기 모임 운영

우리 안의 명상체험 나누기, 명상경험을 자신의 삶과 평화운동에 반영하기. 평화주의자의 삶과 운동을 돌아보기. 일상의 평화운동 개발하기

② 평화심성전문요원 훈련과정

다양한 분야의 명상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찾아가서 배우기, 평화주의의 사상, 가치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상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평화심성과 운동의 깊이를 심화시킴으로써 질 높은 평화심성프로그램과 평화리더쉽 형성에 기여할 전문요원을 훈련한다.

③ 2차 평화심성개발프로그램 실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사담, 주부, 일반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심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평화교육의 방식을 시도하고 평화주의적 마인드를 확산한다.

④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평화잇슈의 집회가 비폭력 평화문화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개발한다.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의 춤, 평화평상을 개발한다.

○ 조직구성

팀장 : 문명녀

팀원 : 김현진, 최현진, 김현숙, 김희진, 송경란, 김현진, 이낙호, 박예경, 이순영, 김경화, 노길렬, 유은옥, 김숙임

3. 갈등해결센터

(소장: 박수선)

○ 사업방향

- ①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②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구성, 실천을 모색한다.
- ③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④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적 확대에 힘쓴다.

○ 사업계획

1) "갈등해결과 평화" 중고등학교 창의재량수업 강사 트레이닝

○ 창의재량 수업 "갈등해결과 평화"의 필요성

- ① 입시위주의 경쟁적, 배타적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시도로서 학생들이 평화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 ② 일상에서 빈번한 사소한 갈등을 힘과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한다.
- ③ 대화와 협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훈련한다.
- ④ 권력의 극복,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분노조절과 평화적 표출을 익히고 관용, 평화, 화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⑤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갈등해결·평화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갈등을 청소년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포레 중재인'을 양성한다.

○ 목표

- ① "갈등해결과 평화" 창의재량 수업의 진행자로서 평화의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을 함양한다.
- ② 참여프로그램 진행의 기술을 익힌다.

○ 기대효과

- ① 교육과 실천이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갈등해결센터의 활동력 강화
- ② 센터 회의의 확보

2)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① 창의재량 수업에 진행자로 참가

관악고등학교 1주일 2시간 수업에 강사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자가 강사로 참여한다.(상반기중)

② 학교 인권모듬반(CA반) 활동 지도

인권모듬반 학생들 대상의 갈등해결, 인권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포레중재 적용 노력

3) 갈등해결 적용 확대를 위한 활동 및 트레이닝

① 4월 중 미국의 포레중재 전문가 Robert Harris 초청 워크샵

② 6월 1-30일 필리핀 민다나오 Peace Building 프로그램(3주 프로그램) 참가

4) 국제연대

Nonviolence Peace Force(강동본경지역에 평화활동가를 파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갈등해결 트레이닝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갈등해결을 위한 여러 평화활동에 함께 한다.

Nonviolence Peace Force 와 유럽갈등예방센터(ECCP) 등과 연대

5) 매뉴얼 개발

상반기중 실시되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갈등해결 교육의 경험을 이어 그 평가와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개발한다.

○ 조직구성

구성원: 김정수, 정경관, 최정현진, 김학묵, 이재명, 장윤정

4. 회원참여센터

(소장 : 사무처장-인선예경)

○ 사업방향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희비중대 노력을 기울여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안정적인 재정자립화, 조직의 안정성을 모색한다.

○ 사업목표

- ①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는 평화운동을 위해 회원 확대 및 소모임등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나간다.
- ②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점차 마련해 나간다.
- ③ 회원들의 경보를 함께 서로 공유하고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 및 회원소식 등을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한다.

○ 사업내용

1) 회원사업

- ①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관리

- 가. 회원관리 DB작업,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회원관리, 기타
- 나. 회원들의 관심을 파악하여 한반도 평화센터, 일상의 평화센터, 갈등해결 센터 등 각 센터에 회원들을 배치하여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부여
- ② 회원확대사업 : " 평화씨앗 확대 운동 (가칭) "
- 내용 : 월 2인 회원 가입운동
 - 목표 : 년 400여명 증가 3년 내 1,000여명 회원 확대.
 - 포상제 : 1년 단위로 30명 회원확대운동을 한 개인에게 커다란 상품증정
- ③ 회원 프로그램 : 년 3~4회 정도 평화파티, 여성평화 운동 리더십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 한마당의 자리를 마련한다.
- ④ 정보제공 서비스 : 회원들에게 평화여성포 소식, 회원들간의 소식, 회비현황, 기타 정세이슈등 on line, off line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회원 소모임 활성화 : 회원들간의 관심있는 분야별로 회원소모임을 구성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늘려간다.

2) 회비확대사업

- ① 기존회원의 회비유지 및 CMS 전환가입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약 350여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매월 꾸준히 회비를 입금하는 회원은 약 50여명이며 이는 회원수의 1/7에 불과하다. 기존회원들로 하여금 CMS가입전환을 하여 매월 회비를 꾸준히 낼 수 있도록 한다.
- ② 평화씨앗 확대를 통한 회비 확대
 CMS가입을 목표로 가족, 친지, 지인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인당 월 10,000원 이상 회비 확대를 진행시켜 나간다. 이를 평화씨앗 확대 운동(가칭)이라 하며 평화여성회 회원들로 하여금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한다. 이 운동을 통하여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높여간다.

3) 평화씨앗팀

- 사업방향
 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립재정을 위한 자금조성사업 및 CMS 회원확보에 주력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사업을 전개한다.
- 사업내용
- ① 재정확보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평화씨앗) 계획
 - ② CMS 회원 확대, 회원회비의 안정적 납부 주력
 - ③ 회원사업센터와 연계한 재정사업관련 활동
- 구성원
 팀장 : 이나호

구성원 : 서미숙, 문명녀, 이유일 등

자문위원 : 윤정숙, 양세진

4) 소식지팀

○ 사업방향

정기적으로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및 평화여성회 관련 소식, 회원소모임 회원과의 관계성을 높여가고 사회정세 내용등을 담아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 사업내용

- ON LINE 소식발행

- 소식지 발행

○ 팀장 : 홍승희

5) 회원소모임

○ 사업방향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활성화 시켜나가 평화운동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간다.

○ 사업내용

① 스터디 모임 : 한미 소파를 통해 바라본 불평등한 한미관계 인식

일시 : 2002년 11월 ~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② 친목 및 다양한 자발적 모임

5.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김귀옥)

○ 사업방향

그동안 여성평화운동의 활동의 기반하여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그 연구결과 또한 보다 광범위한 여성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 사업목표

①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② 현실가능성을 검토하여 <여성과 평화>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③ 연구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평화, 통일 전문가 여성인력풀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중연 개발과 연구사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 사업내용

- ① 여성과 평화 3호 발간(학술지 형태)
- ② 여성주의적 관점의 평화·통일분야의 다양한 연구과제(용역) 활동
- ③ 평화토론회 개최

○ 조직구성

팀원 : 윤여령, 박원선, 윤덕희, 이금순, 장남익, 김현미, 정현백, 김영리, 김정수, 심영희

5. 특별위원회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 설치이유 : 위 위원회는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로 전환되었고 북측과 일본측도 아태와 같이 명칭을 변경했으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향후 있을지 모르는 후속활동에 대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래 : 북측 - 조선여성협회(회장 홍선옥),

일본측 - 일본여성회(취미즈스미고 전 참의원)

○ 조직 : 본 위원회 조직은 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 실행위원 일부와 평화여성회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6. 정책위원회

(위원장 :)

○ 사업방향

대표나 센터, 임원의 제기로 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 및 활동을 전개한다.

○ 사업내용

- ① 경제관련 주요 이슈별, 본 회 중심과제별 정책협의회 개최
- ②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7.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김정수)

○ 사업방향

한반도 통일운동과 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운동을 국제화하고, 국제 평화운동을 국내화하는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 사업목표

- 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의 지속
- ②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 강화
- ③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이론화와 홍보활동 강화
- ④ 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 사업계획

1)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관련 국제연대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국내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

2) "아시아평화연대"(APA) 운영위원회 활동

2003년 2월에 계획된 아시아평화연대 운영위원회 참석, 반전평화국제행동 조직 등 반전 평화관련 활동을 아시아평화연대와 연대해서 진행한다.

3)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참석

국내 평화단체의 국제연대 논의체인 전략회의의 운영과 내용을 제 평화단체와 논의를 통해 기획하고 참석한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전운동 관련 평화단체 사이에 연대가 절실하다. (사무국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다.)

4) 동북아시아시민사회포럼 구성 및 활동에 참가

2002년 12월에 진행된 아시아시민사회포럼 이후 동북아시아시민사회 구성 논의가 있다. 동북아시아시민사회포럼은 평화, 여성, 환경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며, 일본, 한국, 필리핀, 중국 등 동북아시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들을 구성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이다.

동북아시아시민사회포럼 구성 및 활동에 참가한다.

5) 영문 홍보활동 : email홍보활동과 홈페이지의 영어판 강화
 반전평화행동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국내외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평화여성회의 활동과 국내 평화운동의 동향
 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국제평화단체, 여성단체 등과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평화여성회 성명서, 활동 등을 email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린다.

6) 사무국의 국제연대 지원 강화

8. 국제연대활동

상설연대활동

1. 여성연합(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2. 민화협 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3. 통일교육협의회(공동의장, 간사단체)
4.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의장, 공동집행위원장)
5. 군사주의반대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contact person)
6. 불평등한 소과개정국민행동(상임대표)
7. MD저지와 평화군축 공동대책위(공동의장)
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회)
9. 대인지뢰대책위원회(공동대표)
10.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공동대표, 집행위)

비상설연대활동

1. 반전평화연대활동
2. 기타 사안별 연대활동

III. 월별사업계획

구분	사업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편안도 일화 센터	장세대유일(전문가모임, 유진50주년행사연대 등)	준비	행사	준비	행사	준비	행사	준비	행사			평가	
	통일과제팀(남북여성교류 정책제시세미나 등)	----- 사업별 -----											
	국방국제제시, 연구 및 국방의질검시활동	준비, 토론							행사	행사			
	5.24 평화군축 행사	준비	행사										
일상평 화센터	여성일화아카데미	준비		행사								평가	
	평화심상전문요원 훈련	----- 인증 -----											
	2기 평화심상훈련	준비		행사									
	평화인형극	준비							행사				
평화,통일관련 연대	----- 사업별 -----												
강동해 경(CR) 센터	강사트레이닝	행사고육											평가
	메뉴얼개발	----- 인증 -----											
	강동해경 직공 활동	행사		행사									
	학교공화문화탐색 활동	활동											
	국제연대	----- 사업별 -----											
외평중 역센터	공회아래	준비		행사								평가	
	소식지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회원소모임	----- 인증 -----											
	oms확대, 직원관리 등	----- 인증 -----											
한국어 성경회 연구원	여성과경학 3호	준비							행사			평가	
	여성평화운동 연구활동	----- 인증 -----											
	평화보론회	상반기							하반기				
집행위	여성일화이론 정립 토론	----- 인증 -----											평가
국제위	평화단체국제연대전략회의 의 참석	----- 사업별 -----											평가
	중북아시아여성사회포럼 구성, 활동 및 국제여성 평화운동연대	----- 사업별 -----											
	5.24 행사 국제연대	준비	행사										
	영문 브로셔뉴스레터	준비							제작				
특별위	남,북,일,동,중 국제세미 나	----- 사업별 -----											평가
연대 기타	평화통일관련 연대, 기타	----- 사업별 -----											평가

정관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안)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고 편의를 위해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개정안)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윤번으로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권장, 관할한다.

개정안)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권장, 관할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증임할 수 있다.

개정안)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증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안) 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1997. 3. 28 제정

1998. 2.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안)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경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총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안)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 팀장, 위원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별첨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인준을 거친다.

2. 임기 : 서기, 회계, 일반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위원회)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직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개정안)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센터, 일상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사업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각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개정안) : 센터에는 1명의 소장, 각 사업 팀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개정안) : 각 센터는 각 센터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센터 소장 과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의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3.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각 위원장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개정안) 센터소장 선출 및 임기: 각 센터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4. 소집 : 각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 각 센터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평화여성회 임원선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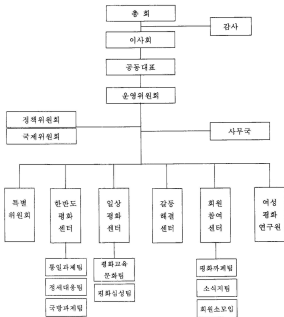
<조직 체제 변경>

지난 5년 동안 본 회는 여성평화운동단체의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평화운동의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오면서 국내외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제 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이 요구되어진다. 그동안 위원회 체제로 운영한 조직구성을 과제로 전환하여 각 사업의 중심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여성평화운동의 질적, 내용적 발전을 높이고자 한다.

<임원선출안>

2002년	2003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 : 이우정 ○ 이 사 : 김숙임 김애실 김지영 윤명철 윤순녀 이김현숙 이경자 권은주 정현백 ○ 공동대표 : 이김현숙 김숙임 심영희 ○ 정책기획위원장 : 김열리 ○ 평화교육위원장 : 임희숙 ○ 평화통일사업위원장 : 홍승희 ○ 국제협력위원장 : 정경란 ○ 재정위원장 : 서미숙 ○ 여성평화연구원장 : 정현백 ○ 갈등해결팀장 : 박수선 ○ 평화심성팀장 : 김숙임 ○ 소식지팀장 : 홍승희 ○ 감사 : 이문우, 윤영애 ○ 회계 : 신윤순 ○ 서기 : 박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 : ○ 이 사 : ○ 공동대표 : ○ 한반도 평화센터 소장 : <li style="padding-left: 20px;">-경제대응팀장 : <li style="padding-left: 20px;">-통일과제팀장 : <li style="padding-left: 20px;">-국방과제팀장 : ○ 일상의 평화센터 소장 : <li style="padding-left: 20px;">-평화심성팀장 : <li style="padding-left: 20px;">-평화교육·문화팀장 : ○ 갈등해결센터 소장 : ○ 회원사업센터 소장 : ○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 국제위원장 : ○ 정책위원장 : ○ 평화과제팀장 : ○ 감사 : ○ 회계 : ○ 서기 :
	<p>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둔다. 총회까지 선출하지 못한 임원은 총회 이후 운영위 논의사항으로 위임한다.</p>

2003 조직표



..... **이
무
미**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한반도에 전쟁을 조성하는 발언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부시는 작년 아프간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편'이 되기를 세계 각국에 강요하였다. 이제, 다시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 확대를 밝히고,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중심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을 조성하고 있다.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위협한다. 북한 위협론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몰고 오는 미국 행정부의 대북강경발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왔던 한반도 거리와 여성들의 노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남북한 각 분야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한의 상호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2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향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한다. 나아가 신과 악, 악군과 적군으로 세계를 가르고 군사화를 촉진시키는 종전시체제의 세계질서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군사주의의 심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여성들은 그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복합성이 얼마나 세계와 인간을 황폐케 할 것인가에 대해 심로 염려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위해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부시가 각국의 직권을 위하여 전쟁 분위기를 선동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그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고 특징 집단을 악마화하며, 군사제권적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는 부시행정부의 초강경 발언을 우리 여성들은 단호히 배격한다.

둘째,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어떤 군사행동도 거부한다. 군사 행동은 세계 전반에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증폭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여성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군사적 행동은 이 땅의 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간에는 대항살상무기 확산 억제 를 위한 많은 대화가 시도되었다. 우리 여성들은 미국이 이 문제를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명분으로 무기구입을 강요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삼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때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왔다. 북한은 테러방지협약에 가입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보장한다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우리 여성들은 군사적 힘의 격대의 대결을 촉진시키는 데 쓰여지는 선진 과학기술과 막대한 자원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나 인권, 환경을 위해 전환 사용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넷째,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항의와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정에서 확

전 대상국가로 저복된 북한과 어떠한 입장으로 관제를 맺을 것인가 하는 점은 신중한 정치적 지도력을 요청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 우리 여성들은 남한 정부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초를 담당하게 추진할 것을 밝히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생적인 사고로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다섯째, 언론은 이번 사태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를 국익확대의 차원에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증진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의 양심적인 사람들,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들, 여성단체, 평화단체들의 북한반대운동이 미국 내부에서부터 강력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세계 모든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곧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7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께 바란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의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위협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저급의 위기 상황을 해소시킬 것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당부의 사항을 밝힌다.

■ 첫째, 부시의 대북한 강경 발언과 적대정책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지적하고 대결에서 회해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상호신뢰를 쌓아왔으며 북한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남독시켜야 할 것이다.

■ 둘째, 외부의 위협이 커질수록 북한은 내부적 질속이 강화될 될 것이며 그런 경우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마지막 수단을 내버리는 일이 될 것임을 설득하기 바란다.

■ 셋째, 한반도 어느 한쪽 귀퉁이에서라도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될 때라도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몰아넣게 될 것임을 부시 대통령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넷째, 한국인 대다수는 비북정치·군사적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 북한을 동포로, 형제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다시는 한국동맹과 같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바란다.

■ 다섯째, 현재의 문단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영토로 규정할 헌법상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자국 영토가 침범당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임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우리 여성들은 김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F15 전투기 구입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부시의 요구를 강경히 거절하기 바란다. 현재 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의 이런 시도가 한국인의 평화협원을 대변하는 것이며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무기구매 합의를 기절하기 바란다. 남북이 화해·협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무기구매압박은 오랫동안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임을 강조하기 바란다.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부시의 강경 발언과 적대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자주적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이해시킴으로써 남·북 문제에서 남한정부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민족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민는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현재 처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2년 2월 15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 150인 일동

한미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150인 평화선언 참가자 명단

장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장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오연대 운영위원장) 장인순(경남대학교 사
회과학학부 교수) 강혜숙(충북여성민주회 공동대표) 좌분미(대전여성학자협의회 공동대표) 구미
경(한국여성학자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권미라(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순경(울산여성회
공동대표) 김경희(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김경희(제주여성회 공동대표) 김귀옥(경남대 복원대학
원 직원교수) 김명현(한국여성학자협의회 회원활동위원장) 김미숙(성남시 인간교육실현학부오연
대 회장) 김상희(한국여성민주회 상임대표) 김선실(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회장) 김신옥
(이화여대법교수,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신실(한국교회여
성연합회 실행위원) 김애실(한국외국어대 교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김애영(한국여성학자
협의회 홍보총괄위원장) 김영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기획위원장) 김연숙(전국여성노동조합
마산창원지부장) 김영숙(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장) 김영순(제주여성회 공동대표) 김유숙(기
독교대한감리교여성교회한국연합회 회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실행위원) 김윤옥(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은진(부산여성회 부회장) 김연영(마포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정수(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 김주숙(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김혜경(전국여성노동조합 안산시흥지부
장) 김현자(한국교회여성연합회 위원) 김혜경(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김혜원(한국여성학자협
회 협동총무)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남인순(한국여성
단체연합 사무총장) 남정현(충북여성민주회 부대표) 민경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미란
(전국여성노동조합 익산전주지부장) 박민자(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성자(광주여성노동자
회 부회장) 박성자(한국여성학자협의회 성폭력문제연구부대표) 박수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
해결담당) 박영미(부산여성회 회장) 박영숙(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박유희(인간교육실현학부오
연대 회장) 박재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위원) 박정금(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부회장) 박
태연(부산여성노동자회 회장) 박현숙(전국여성노동조합 부천지부장) 박오숙(광주전남여성단체연
합 대표) 박후임(기독교여성회 부회장) 배영미(한국여성학자협의회 회장) 배정희(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변지숙(충북여성민주회 상임대표) 서미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재정위원장) 성영자(한
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송서애경(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포항여성회 회장) 송영자(한국기독교강교회여성신도회한국연합회 회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실행위원) 신경아(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신숙희(우편타임스 사장) 신인영(이화여대 법대학장)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현양대교수) 안미영(한국여성학자협의회 회장) 안상남(한국
여성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 양영미(광여연대 연대사업국 국제연대담당
간사) 양희경(인간교육실현학부오연대 정보위원장) 오임숙(함께하는주부모임 공동대표) 오한숙
희(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 우정애(함께하는주부모
임 공동대표) 유영란(부산여성회 부회장) 유은자(한국여성학자협의회 협동총무) 윤경란(전국여성
노동조합 부산지부장) 윤영선(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윤순녀(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윤정숙(한국여성인우회 공동대표) 윤정곤(참여사회연구소 기자) 윤혜
 연(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정숙(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경남여성회 회장) 이경자(고양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계희(여성신문사 사장) 이
 기원(수원여성회 회장) 이길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나영(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
 대표) 이명순(한국교회여성연합회 집행위원) 이명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상담위원장) 이명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문우(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
 동대표) 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상화(이화여대 교수) 이순임(한국여성학자협
 회 서기) 이승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슬리(한국여성학자협
 의회 예비반 대표) 이에리(삼성어린이집 교수) 이재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이은미(울산여성회 공동대표) 이
 은선(한국여성학자협의회 교육위원장)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희(한국여성의전화연
 합 공동대표) 이정순(대전여민회 회장) 이정옥(KBS 구성작가) 이정자(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정
 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이주환(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현순(한국여성노동
 자회협의회 대표) 이호순(한국여성학자협의회 미디어센터위원장)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 교문)
 임학림(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모니터위원장) 임희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위원장) 장경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장필화(이화여대 교수) 장함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전숙희
 (대전여민회 부회장) 전순란(한국여성학자협의회 제정위원장) 전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전봉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정강자(한국여성인우회 공동대표) 정경란(평화를만드는
 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정문자(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정보영(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한국
 연합회 총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집행위원) 정숙자(한국여성학자협의회 협동총무) 정순진(대전
 여민회 부회장) 정인숙(좋은벗들 사무국장) 정영순(한국여성학자협의회 감사) 정진성(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서울대 교수) 정태효(기독교여민회 회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조성혜(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조여옥(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조은희(한국여성학자협의
 회 서기) 조혜경(연세대 인류학과 교수) 주경미(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지은희(한국정신
 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천명화(우먼타임스 홍보이사) 최만자(한국여성학자협의회 감사) 최
 상림(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최영숙(한국교회여성연
 합회 사회선교위원회 위원) 최영순(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최영희(내일신문사 사장) 한국영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총무) 홍승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사업위원장) 황원숙(전국여성노
 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이상 가나다 순 150명

F-15K 반대 사이버행동 글모음 사례

번호/이름/소속/한어디

- [1] 이지형 / 미국 yale 대학 / 평화는 아기의 미소에서..
- [2] 이민형 / 중국 남경 의대 / 사람 몸은 하늘물..
- [3] 이상열 / UNESCO / 전쟁 손은 무어양의 손.
- [4] 조영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의 힘으로! 평화 군축, 민족통일!
- [5] 장성순 / 시민의신문 /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평화를 깨리는 이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다.
- [6] 심병관 / 무래방 / 무기를 녹여 쟁기로..
- [7] 권옥태 / 방송인 / 대중이행... 정신차려..
- [8] 김엘리 / 평화물만드는여성회 / 무기 녹여 엿바퀴 먹고 새학 키워 푸르리게 살아보자.
- [9] 이정자 / 주부 / 자주적인 평화속에 우리의 자식들이 삶을 꾸려나가길 기대하며
- [10] 이종목 / 한일장신대 /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미신..
- [11] 박인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전쟁을 반대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 [12] 한정림화 / 평화이머니회 /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생을 사랑으로 살다가 가고 싶다.
- [13] 허순희 / 비즈우먼 /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 [14] 노귀남 / 불교포럼 / 마음에 평화가 세상을 평화로
- [15] 황정은 / 잠원초등학교 / 을 아비는 전쟁에 안나간대요
- [16] 박유희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F-15K 추진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일이다. 민족을 우롱하는 일이다.
- [17] 이상림 / 참여연대 / 제발 이번만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 [18] 지혜람니다 / 서울광동 초등학교 5학년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싫어요.. 제발 우리 통알래요.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 [19] 오달희 / 회원 / no! no! no! f-15k
- [20] 주지영 / 무소속 /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미국 정부에게는 반드시 역사의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 [21] 유정원 / 예수성심수녀회 / 우리는 형제, 세상에 평화를
- [22] 노용태 / 전교조 평등사회 /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기도입 반대! 평화군축 실현!
- [23] 박김성숙 / 주부 / 세균도 그만... 전쟁도 그만.. 무기살인으로 명세면 도화였으면.
- [24] 문선영 / 생태학자 / 군비축소, 평화네트웍의 물결로 지구에 죽음이 아닌 생명물.. /
- [25] 박관숙 / 순창군여성농민회 / 전쟁반대! 미국반대! 여성의 힘으로 평화군축!
- [26] 유승준 / 한광고등학교 교사 / 사람 죽이기 그만하고, 사람 살리기 합시다
- [27] 김영미 / 서울대 / 더이상 여성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전쟁 반대!
- [28] 조대기 / ngotimes.net / NO! F-15K YES! PEACE... NO ARMS!!! YES BREAD TO HUMAN!!! NO HATW!! YES LOVE TO HUMAN!!! / (05-25 17:49)
- [29] 문정현 / 소파개성국민행동 / 무기는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달라

- [30] 김성찬 / 범민련 후원회 / 군축이야말로 남북간에 상호신뢰를 쌓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 [31] 안유은영 / 멕시코 하나교회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무기가 핵으로 바뀌는 날을 꿈꾸며...
- [32] 박주현 / 서울양화초 / (155바퀴서 국방부에 갖다주자 / 06-05 08:44
- [33] 이근봉 / 이랜드노동조합원 /F-15K 남은 비행기를 왜 우리에게 파는가? 보잉사는 걱정하라
- [34] 정정희 / 광주여성민주회 / 미국 이제 이땅에서 전쟁놀이 그만 꼭! 우연 이미 평화라는 무기가 있다!
- [35] 안선영 / 학생신앙운동 / 외와 사람과 평등의 사회를 기대하며- 함께 반대하는 전쟁!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 [36] 문옥남 / 연정이 할머니 / 비행기 사는데 그게 다 새금남비여!
- [37] 김미영 / 행정이엄마 / 서명은 힘없는 국가의 국력이다
- [38] 최승헌 / 봄여봄교재가연대 /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 [39] 이기홍 / 고등학교 / 그 돈으로 교육에 투자
- [40] 이은미 / 성공회대 대학원생 / 국방비 축소! 사회복지제정, 교육제정 확충!!
- [41] 김유민 / 보람에너지니어링 / 우린 미국의 속국이 아니길 바란다!!
- [42]황태식 / 광운교회 권도사 / 현 정부가 민족과 역사를 사랑한다면, 이번 결정을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 [43] 정경자 / 한국여성민주회 / 힘모아, 힘을 댐! 세계여성 평화군축의 날!
- [44] 류관수 / 민주노동당 / 아예 차세대전투기사업 철회하여 써먹는 이웃들에게나 나누어주지
- [45] 이영일 / 여수지역사회연주소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민족의 통일을 위해 군비는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군상복합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화신입니다.
- [46] 김미선 / 외국인노동자대회협의회 / 반전군축의 함성으로 평화를 이룰시다.
- [47] 홍아 / 우먼역시연탈 / 더이상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총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 [48] 김사영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평화와 화합으로의 길은 군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겨누고 있는 총부리에서 어떤 평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49] 고원상 / 충청대 / 대한민국은 더 공군의 고를 전투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 [50] 이화수 / 부산여성회 사학자부 /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공포를 안겨주는 고철덩어리 수입을 반대한다.

한미정상회담에 밝히는 여성 150인의 평화 요구

최근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2월 20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에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번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갈등과 있는 전운을 탈락히 벗어나고 7천만 주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도모하는 회담이 되길 희망하며 여성들의 평화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 여성들은 이번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전쟁전략과 일방주의를 관철시키는 불공평한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노력을 성숙시키고 남북대화과 북미대화의 길을 여는 획기적 회담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어떤 군사행동도 거부하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실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번 회담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대리 전쟁을 확대시킬 어떤 의도도, 지지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 여성들은 세계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고 북경 집단을 악마화하며, 군사패권적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부시행정부의 초강경 발언과 대외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외사를 밝히는 바이다. 더욱이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세계를 이원적으로 가르고 군사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의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군사주의의 심대한 피해를 입어온 우리 여성들은 힘에근거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넷째, 우리 여성들은 미국정부가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책을 우방인 한국정부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도 정책이 미국에진 세계전략의 하나이지만 7천만 한국인에게는 생사가 좌우되는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평화연이어 태만되는 일이 없도록 우방국 <주민의 의사 우선> 정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 여성들은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에 복원과 체결한 북미기본합의서와 2000년 10.12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외관계에서 체결한 합의나 협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우리 여성들은 미국행정부가 일관된 대북 정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북 정책이나 관련 발언들이 발언자들이 따라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도발적인 대북 발언과 전제조건을 들고 나오는 미국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국제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라는 것을 지적해왔다.

일곱째, 우리는 미국이 남북의 6.15공동 선언이행을 저지하고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무기구입 압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들은 군사적 힘의 적대적 대결

을 촉진시키는데 쓰여지는 선진 과학기술과 막대한 자원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와 인권, 환경을 위해 진한 사용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삼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어쨌든,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항의와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미국의 대북 발언과 정책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해, 협력정책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에 대해 강대국 으로서의 압력 대신 우방국으로써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기 바란다. 우리 여성들은 남한 정부가 대북 화해 협력정책의 기초를 담당하게 추진할 것을 밝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상생각적인 사고로 지체롭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911 테러참사라는 충격적인 재난을 당한데 대하여 함께 슬퍼하고 있다. 그 테러 희생자의 명단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테러에 대한 분노는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의 비통함과 테러근원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테러근원을 명분으로 한 전쟁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것이 근원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무엇보다도 여성을 비롯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과 막대한 자원의 파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은 문명국가인 미국이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확대, 보다 공정한 세계관리와 협치를 통해, 그리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생명애호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문명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상의 요구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수용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미국 의 양심적인 사람들,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들, 여성단체, 평화단체들과 함께 확고한 반대운동을 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세계 모든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15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 150인 일동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만 평화선언

-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약속하 선언한다 -

9.11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열어 일방적 승리를 거둔 미국은 마치 전쟁에 도취나 된 듯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더니, 이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파아프르 세제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제 도처에서 강압적 체권 정복을 휘두르면서 세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위협은 한반도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와 일연연구의 상의조차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기에 이른 것이다. 바로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오만하고 무담한 태도에 차분심 훼손으로 인한 당혹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에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엄숙의 선언하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 남북한의 정치지도자와 7천만 겨레, 나아가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전 인류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한다.

1. 미국은 기어코 한반도에서마져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가? 부시 대통령은 방한을 앞둔 200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협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는 북한이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이래, 이 합의서에 따라 핵을 동결해 왔으며, 1999년부터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도 중단해왔음을 알고있다. 또 1987년 이후 테러에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국제 반테러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도 최근 "북한이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위협이 '반테러 전쟁'이라는 그들의 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맹방인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러시아 등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와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같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의한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을 통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테러 문제마저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나서는 현실도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주장이 여지 논란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테 테러전쟁을 한반도로 확대할 어떠한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면서 부시정부가 대한반도정복을 평화 지향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고 갈 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와 2000년의 [10.12북미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사일 발사 중단, 그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재까

지 북한이 이를 어겼다는 증거는 없으며,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약속 불이행 등 합의를 어겼다는 증거만 분명할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외 후방위지와 대사일 수출금지 등을 사실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므로써 북한의 양보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노골적인압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미간 또는 남북간 상호 균속 방안을 내놓는 대신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외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을 약속한 [북미기본합의서]와 [10·12북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외 평화를 훼손하고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파괴와 살육의 전쟁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국제적인 협정과 합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지구촌 대국의 책무를 망각하는 정책이다. 50여년 전 한국전쟁의 치열한 미국을 몸소 겪은 바 있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화를 목도한 바 있는 우리 겨레는 남이 나 북이나를 떠나서 그 어느 누구도 겨레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초강경 대북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불연인 행정부 시대에 재결된 탈냉전-평화 지향의 [북미기본합의서]와 [10·12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 북한과의 긴지한 대화를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미국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북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는 지난 20세기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최망장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북은 최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것을 온 겨레와 세계안방에 약속의 선언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방한에서 부시 대통령은 F-15K 등 무려 1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제 무기의 구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위협을 빌미로 미사일방어체계(MD)에 남한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이는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 전쟁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며, 21세기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재래식무기 감축을 요구하면서 남한에게는 무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살상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해 국방비로 무려 3천 8백억 달러를 쓰는 초강대국 미국이 연간 15억 달러의 군사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삼척동자도 웃을 익지 주장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미국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자주권 유린과 민중의 생존권 위협,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처리와 용산미군기지 문제 같은 심각한 한미간의 미해결 과제,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미자유협정의 강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압력은 우리 겨레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북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역사적·도덕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김대중 정부는 전쟁반대에 대한 우리 겨레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며, 남북 북의 정부당국자는 전쟁방지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다 과감하게 기울여야 한다! 김

대중 정부는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얼마무리
 래 하거나 '미국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와 대북 대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는 데 급급해
 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여 현실에 눈멀게 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
 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도 국제적인 논의의 틀 안에서 이
 대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은 첫째, 한반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전쟁이 있을 수 없다는 전쟁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와 함께 긴급히 전쟁당지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나라의 총력을 전쟁당지에
 한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의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 공방으로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선
 언을 해야 한다. 북한당국 역시 9·11 사건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위기상
 황을 직시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리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보다 적극하게 나서야 한다. 이런 책임수족 '한
 반도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방안을
 남북이 함께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야 정치지도자에게 정파적 이해와 경선을 넘어 온 겨레의 힘과 지혜와 의지를 모
 이치고,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지도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전쟁반
 대, 평화정착", "6·15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 전쟁과 평화의 길임길에서 7천만 겨레
 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지난 1994년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 임박직전까지
 다가갔던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충격과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국민 일부에 아직도 단연하고 있는 '전쟁불감증'은 하루 빨리 치유되어야 한다.
 '철마, 철마' 하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남과 북
 의 거리가 폐족음을 당하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에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원
 치 않는다. 우리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행보에 미국도 협력하라!"는 절연한 자세
 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부시와 미국도 우리 겨레의 단결된 모습 앞에서는 어찌지 못할 것
 이다.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소중한 이 땅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냄으로써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숭고한 역사행보
 와 굳건한 의지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우리
 의 이러한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여 평화 지향의 대한반도 정책 수립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
 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광명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겨레가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깨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정착", "6·15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의 기치 아래 7천만 겨레의 힘
 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전평화운동을 전
 세계 나갈 것임을 온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02년 2월 18일

'700인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부시대통령의 F-15 전투기 강제 의혹을 염려한다.

최근 부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일련의 강경 발언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차세대전투기(F-X)사업'에서 미국의 F-15 전투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뒷소문이 돌아 시민사회에 이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부시대통령이 방한기간동안 한국정부의 뒷발정착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미국제 F-15 전투기의 구매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자국 군수업자들의이익을 위해서 우방국가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위협계한 셈이 되고 만다. F-15 전투기 뒷거래설은 '차세대전투기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미 최근 한 의식은 부시 대통령이 방한 때 100대의 F-15 전투기 구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과월 국무장관과 번스랜드 국방장관을 비롯한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F-15기 구매를 한국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발표한 차세대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과 진행중인 차세대전투기 기종 선정과정을 지켜볼 때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이미 미국의 F-15기로 기종을 결정해 놓고, 착찰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기종 선정과 관련해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1단계에서 경쟁 기종간의 평가수치가 3% 이내로 우열이 가라지지 않을 경우, 2단계에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 같은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1단계 평가에서 경쟁 기종간의 평가수치의 오차범위가 3% 이내에 들 수밖에 없어, 결국 2단계 평가에서 한대연합과원과 상호운용성과 같은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미국의 F-15기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는 기술이전을 최우선적인 선정기준으로 삼겠다는 당초의 공언을 완전히 뒤집고 차세대전투기에대한 요구사항 자체를 구식 전투기인 F-15를 모델로 하여 설정함으로써 원단 기술을 갖춘 유럽제 전투기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말았다.

미국이 우리에게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F-15기는 자국의 '불합전투기사업(JSF)'에서도 탈락하여 겨우 10대의 주문량 만을 확보하고 있는 도대 일보 직전의 퇴물전투기이다. F-15기는 개발된지 이미 30년이 다 된 구식 전투기로서, 경쟁기준인 유럽제 전투기들과는 달리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계식 발사의 레이다를 장착하고 있는 뒤떨어진 전투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에서 단종 직전에 있는 결코 차세대전투기라 할 수 없는 기종을 단지 보잉사의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에 판매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F-15를 구매한다면 이는 4조 2천억이라는 원문화적인 국민의 혈세가 정치적 고려와 뒷거래로 날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한국국민으로서는 결코 동의해 줄 수 없는 처사다. 더구나 전문학적인 역상이 소요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타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차세대전투기사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부시 대통령의 강경발언의 숨은 의도는 F-15기 한국판매 때문이라는 뒷소문이 무성한 이 시

- 점에서 부시대통령은 한국정부에 소문대로 F-15기 판매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한국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타당성이 의심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단종 직전의 퇴출 전투기인 F-15기를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된다.
 3. 국방부 '차세대전투기사업'의 평가항목과 가중치의 재조정을 통해 기종 선정에 위한 평가방법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종 선정에 위한 평가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002년 2월 19일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한반도평화네트워크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 인류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오만한 대외정책을 한꺼번에 지남으로써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온 인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새로운 전쟁 상대국을 지목하고, 그 나라를 향한 살인과 파괴를 명명하는 당사자이며, 전쟁의 불길은 우리 한반도에 옮기려는 장본인이다. 또한 그는 파국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강요하여 노동자 농민 등 지구촌 민중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리는 주인공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며, 온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을 결의한다.

1. 한반도 전쟁 징조를 막아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을 위협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지난 1월 28일 북녘을 '악의 축'이라 못박았다. 이어서 2월 1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은 미국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협박했다. 이는 '빈 라덴'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쟁의 명분을 전권하고, 그리하며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은 한반도에 옮기려는 부시 온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북과 미국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괴와 죽음을부른다. 그렇다. 이제부터 우리는 북을 향한 전쟁 위협이 북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끔찍한 생명을 빼앗는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있고, 거리의 통일이 있으며, 서지평화의 초석이 있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남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은 모두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한다." 공을 공언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을 방해하더니 올해는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거리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 책동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며 6.15 남북 공동선언실현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내달릴 것이다.

2. 한미자유협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를 이겨내기 위해투쟁한다

오늘 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휘둘러 지구촌을 점령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국가권력이 미국에 고개를숙이면서 미국 자본의 횡포가 극한을 치닫고 있다. 미국 자본이 노동자, 농민 등 다른 나라 국민을 향해 칼도 없이 탐욕을 채우는 데 따라 세계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되고 정리해고되며, 지구촌 도처에서 농민들이 수몰 농산물에 파산하고 있다. 아이젠하워(DRF) 이래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경제의 민생적정책과 국민들의 커다란 고통은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이 땅에 강제하는 미국의 경제침략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자유협정의 강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제침략과 간섭,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3. 옹디(MD) 강요, 전쟁무기 강제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옹디(MD)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군사대결을 촉진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옹디를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0여 대의 에프15케이(F-15K) 전투기를 비롯하여 수 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국산 무기를 강제하고 있다. 일년 국방비가 고작 15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을 향해서는 '군비 축소'를 외치면서 왜 우리에게만 수백억 달러나 되는 무기를 강제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의 군사 대결을 부추기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을 강탈하려는 미국의 옹디(MD)강요, 무기 강제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4.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기 위해 투쟁한다

미군기지는 휴가 범죄와 환경파괴의 온상이며 주민 원해의 상징이다. 수도 서울의 한 가운데를 점거한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주요도시에는 어김없이 미군기지가 버티고 있다. 그들은 온 국민의 반환 요구를 묵살할 뿐 아니라 그곳을 근거지로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다. 더구나 미군기지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의 불서다. 우리는 온 국민에게 고통과 위협을 주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불사건까지, 미군범죄를 사과 받고 소과형정을 재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자행한 양민학살 범죄의 실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씻기지 않았다. 미군은 그 기간에 온 역사 위에 군림하여 학인, 강간,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학살계 여기는 때문이며 동시에 미군 범죄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소과 조항 때문이다. 소과는 한국에서 자행하는 범죄의 사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안전권이며, 따라서 미군을 모두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지, 간첩 범죄 용탈 요인이다. 한미간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미군범죄를 사과하고 소과를 전면 개정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이룩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6.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철회하고 급속적 한미공조를 중지할 때까지 투쟁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전쟁을 협박하고, 남핵에 내정간섭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일삼는 것은 그가 오만한 자답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종속적 태도를 거둔다는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주권국의 당연한 모습을 갖추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정부는 평화로운 합법집회의 과잉폭력진압을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집회에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길현숙 상임대표의 부상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항의의사를 표명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강경 발언에 이어온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애쓰며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한국 민중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혔다. 부시에 의해 고조되는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은 부시가 도라산을 방문 중인 시각인 2002년 2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공원에서 6천명의 각계 대표 및 민중들이 모여 진행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 철폐,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로 결집되었다. 이날 대회는 집시법에 보장된 평화로운 집회로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집회장소를 가로질러 방파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투경찰대가 투입되어 무방비상태로 앉아있던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과잉진압을 자행했다. 특히 대열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었던 대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대는 방파와 곤봉으로 무차별 공격하여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깃발을 빼앗기고, 이길현숙 상임대표가 부상을 당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과잉폭력진압으로 인해 얼굴에 깊은 상처로 인해 40분이나 넘는 시간동안 봉합수술을 봐야 했고, 시위대가 밀리는 상황에서 온 몸의 타박상을 입어서 현재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누구보다도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평화로운 시위문화 확보를 갈망해온 이길현숙 대표의 부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의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단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평화로운 시위 민중을 향해 무차별 물격을 감행한 경찰의 이같은 과잉 진압은 시민적 발언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권력의 이같은 폭거는 평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을 위협하고, 부시의 계속되는 발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과잉진압에 대한 경찰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한다. 아울러 경찰 수뇌부가 현미 관재에서 대미추종적 사고와 남·북을 단지 이데올로기로 가르는 양극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찰이 진정한 이 땅의 평화 수호자,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또한 민족의 평화를 위해 일어서는 민중의 열망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찰로 바로 서기를 권고한다.

- 정부는 평화집회에 대한 과잉진압을 공식 사과하라
- 과잉진압을 지휘한 서울경찰청장장 장로경찰서장을 처벌하라
- 정부는 향후 평화로운 합법집회를 보장하라

2002. 2. 2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국 여성단체 성명서

지난 1월 25일 발생한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업무시간에 도지사 집무실에서 현지 여성단체장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여성 권력을 성적 대상화한 것은 물론 여성단체에 대해 성추행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제주도지사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음모로 몰아붙이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론화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정치적 음모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문제를 희석화 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다. 성폭력 사건은 다른 여타의 사건과 달리 피해자 유법론과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 인신 공격, 비방으로 피해자를 이중삼중의 고통에 이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본말전도가 일어난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주도지사는 성폭력 사건의 특징을 적극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대응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 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기에 우리 여성들은 성폭력이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라고 힘든 싸움을 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성윤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2. 2. 25

(사)제주여민회, 대구여성회, 청소년을위한여성센터,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희생구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위한 제안서

<2002 새해맞이 공동모임>에 참여한 남측의 여성단체들은 이번 모임이 무산된 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교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안한다. 남북여성들은 2001년 8월 21일 오후 1시 고려호텔에서 가진 남북여성계 대표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남북여성통일대회(이하 여성대회)를 가지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북측이 민화형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 기념일을 선택하여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2002 새해맞이 공동모임>에 참여한 남측여성대표들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1. 여성대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대로 연단회와 문화행사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여성대회 주제는 '평화와 여성'으로 제안한다.
- 2) 장소는 1안 서울, 2안 평양, 3안 판문점, 4안 금강산을 제안하나,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다.
- 3) 문화행사 세부내용은 평화노래부르기, 평화시 낭송, 무용, 남북참가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민속놀이(예:강강수월래) 등을 제안한다.

2. 여성대회를 위해 남측 여성단체들은 공동으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3. 여성대회 개최를 위해 남북여성계 실무회담을 3월 중에 가지기를 제안한다.

2002. 2. 27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여 여성단체 일동

F-X 사업의 연기를 촉구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 보잉사 F-15K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2단계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을 산 바 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또 다시 평가기준을 변경·기술이전 항목 중 핵심기술이 빠진 기종제도 0점이 아닌 60점을 주도록 제정 방식을 변경·협조로써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미 보잉사를 노골적으로 편袒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F-15K의 우월성을 알리는 로비를 벌이고, 평가단에 F-15K 점수를 높게 주라는 부당한 압력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3월 9일에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부시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한국 국방부의 공종으로, 국민들의 광범한 F-15K 도입 반대 여론과 달리 F-15K로 결정날 가능성이 현충 높아졌다.

김대중 정부가 한미관계의 정치적 현실 때문에,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F-15K를 도입한다면, 이는 진감할 수 없는 '눈'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15K 도입으로 부시의 대북강경책이 무드럽게 될 리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무기도입 사업은 F-X 말고도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F-X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사업은 남북관계에 미칠 과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강조하면서 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F-X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안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보전략의 우선 순위에서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을 '일단' 뒤로 미루고,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증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도입하려는 무기체제는 통일코리아의 안보자산이다'라는 점을 북한에게 설득하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세대전투기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혀오자 한다.

1.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무기도입사업들에 대한 평가 선정 작업에 앞서 사업계획 진전에 대한 타당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국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2. 관련 정보의 투명성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전까지 F-X 사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3.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하며, 폭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토록 요구한다.
4.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F-X 사업 등 공격무기도입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한과의 실질한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2. 3. 7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통일네트워크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반도평화통일연대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F-X사업 투명성 보장되기까지 기종선정 연기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그 동안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안보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추진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면서 유권비리 등 수많은 군납비리로 얼룩져 왔다. 때문에 우리국민은 이번만큼은 F-X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F-X사업이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F-X사업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밝힌다.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F-X 기종선정 연기를 촉구한다. 또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듭 촉구한다.

1. 부당한 외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가 미국 방위산업체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움직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공조 틀에 얽매어 수명이 다 된 낡은 기종에 손 들어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이익의 입장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은 원단무기 양산과 도입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면서 한미연합방위라는 명목으로 F-X사업이 왜곡되어 부익부빈 기종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보잉사의 F-15K를 구매하기 위한 미국이 의도와 자국민의 뜻과 이익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방부는 전투기 기종 평가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은 작전요구성능(ROC)부터 이미 F-15급 전투기를 모델로 한 것이라 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투기가 높은 가산점을 받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기종 평가기준에서 기술이전 항목 중 핵심기술이 빠진 기종에게도 0점이 아닌 60점을 주도록 점정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종간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3%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2단계 평가는 한미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추진과정 일체와 평가방안 작성과정, 기종선정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F-X사업은 이미 1단계 평가기관 평가가 완료되고 종합평가 및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기종선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불투명한 추진과정과 기종평가 방법에 따른 수많은 의혹을 규명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국민의 동의 없는 세금납부, F-X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는 무기구매사업과 국방장기계획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 그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상상조차 힘든 거액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밀 빠진 틈에 들 훔기 식으로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우리는

F-X사업마저 한국형전투기(KFP)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기대한 부정부패와 부실의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국방부의 그럴듯한 말과는 달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포대미련에 기여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한세대 동안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고철덩어리를 구입함으로써 할세만 낭비할 우려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없는 F-X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 피압과 비리피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원문학적 국민세금이 소요될 F-X사업은 제기되고 있는 피압과 비리의 의혹, 평가과정 변경으로 인한 미국관들기 등 우리 국민에게 생긴 불신과 의혹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외압의혹, 평가기준 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 국회는 우선 피압 및 평가기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시험평가 및 가격협상, 입찰과정 등 F-X사업 추진과정 전체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국민세금 5조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02. 3.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F-X관련 긴급 기자회견 성명

1단계 평가 조직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하라 2단계 평가 중단하고 1단계 평가내용 공개하라
국방부는 오늘 F-X 1단계 기종평가가 F-15K, 라팔 오차범위 3%대로 평가되었다며 2단계 평가인 정복적 판단을 통해 최종 기종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F-15K를 내정했다는 것에 다른 아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압의혹 진상규명이나 기종결정 투명성 보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국방부가 기종결정을 일방적으로용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평가기준과 평가방안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을 풀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압의혹과 불공정한 평가절차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은 채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군의 의지를 믿고 믿어달라"는 국방부 장관의 당부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조대령이 제기한 외압의혹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F-X기종결정 관련 공군 측 평가를 확인하고 있던 김000대령은 군기일취설 혐의로 통상적인 수사제한 기간인 10일을 훨씬 초과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 어제 한 일간지는 공군이 평가하기로 되어 있던 군운용적합성명역에서 F-15K(미)가 라팔(프)보다 3%나 앞섰다고 보도하였다. 이 분야는 선두를 다루고 있는 두 기종이 대등하리라고 예상되었던 분야여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오늘 공개된 조 대령의 녹음테이프는 공군평가분야인 군운용적합성 분야에 서 F-15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며서 조직의혹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미 평가기준의 변별력이 최소화되도록 평가기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어떤 평가기준으로 그러한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기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1단계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밝혔다. 국방부는 2단계 평가 작업을 중단하고 1단계 평가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조직시켜 달하라. 대통령은 즉각 조직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라. 우리들은 평가내용 공개와 2단계 강행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2. 3. 27

정길진,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물민드논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자주평화통일협의회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약 6조원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자기전투기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이 제 기하는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의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F-X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F-X 사업은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구매대금만 약 6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무기구매 사업으로서 단일 무기거래로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F-X 사업을 위해 국민 1인당 13만5천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국익에 부합하게 진행되는지, 비리와 남비 속에 부실사업으로 전락하는지 납세자인 국민이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당연하다. 특히 우리 모두가 수년 전에 발생한 유록비리사건의 뼈저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 F-X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납세자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F-X사업은 갖가지 외압과 조작시비로 얼룩져가고 있다. 특히 수요군인 공군 조주형 대령의 외압혹으로는 국민의 의혹을 더하고 있다.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평가기준과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F-X기종결정을 몰아부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F-X사업은 통일 이후의 자주국방 및 주변국 관계를 상징한 전략적 사업이다.

국방부는 F-X로 도입되는 기종이 북한만이 아닌 주변국의 불복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X 사업의 목적이 과연 그런 것이라면 정부로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는 한편, 미래의 국익과 민족의장래를 위해 필자히 자주적인 태도로 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관계를 통해 남은 미국무기의 가장 손쉬운 경매 대상이 되어 왔던 현실을 극복하고 남북화해와 평화군축의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저F-X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F-X 선정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와 보잉사의 조직적인 압력이 행사되었고 그들이 구매를 강요한 F-15K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해 사실상 선정된 것에 주목한다. 성능이나 가격, 기술이진 등 대다수 요소에서 다른기종들보다 열세인 것으로 알려진 이 기종이 선택된 것은 그 동안의 미국의 압력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또한 미군마저 이미 도태시키기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평화군축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6조 원의 도입비용 이외에도 막대한 운영유지비로 국민부담을 계속 가중시킬 낡은 기종을 도입하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장관, 국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국민 대다수의 외압 의혹 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규명 과정도 없이 평가 일정을 강행하여 F-15K를 사실상 선정 국방부와 이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민 무시 행위이다. 특히 의혹부성이 1차 평가 결과미공개까지 않은 국

방부의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평가 내역을 세세히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에 답하라.

F-15K 내정을 철저히 하고 외압 및 조작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2단계 평가 등 최종
가중결정을 위한 일체의 추가적 평가작업을 중단하라.

F-X 기종 평가 과정의 압력 행사 및 평가기준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다. 여야 각 당과 국방위원들은 국민들이 그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F-15K 도입에 약 6조원이 지불될예정
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야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
여된 F-X 사업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직시
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은 F-X 기종 평가 과정의 외압의혹 및 평가기준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
정조사권을 발동하라.

외압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조주형 대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라.

F-X 예산을 동결하고 주기 비용저불이나 타예산전용 승인을 거부하라.

우리는 국민세금 6조가 쪼들린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통령이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지
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이 F-15K구대와 미국의 외교적 협력을 맞추려 한
다는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F-15K 구대로 경영난을 겪는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우리의 주권이 농락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자
주적인 태도로 F-X사업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F-X 외압 및 평가기준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F-X기종선정일정을 중단하고 그 타당성을결론내 재검토하라

F-X사업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제2의 울곡비리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새로운 안보환경에 걸맞는 민주적절차와 자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새롭게 확립하
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국민
과 함께 실천할 것이다.

2002. 4. 3

F-X 공동행동 참가단체 연명 (현재)

전국 및 서울 (104개)

4월혁명회, 가톨릭평화회, 강서양천여성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단체연합, 정실련, 교회
개혁을위한가장인모임, 경제정의실천농교시민연합, 기독교인사회연대, 기독교연회, 남북민간교류
협의회, 남서여성민우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독도수호
대, 동북여성민우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자주민주
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평화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청년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연중교회

선교연합, 천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포럼한민주연대, 새세상을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생명선교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여희교육원, 서울여성전파, 여성사회교육원, 열린사회회방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대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청년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민민운동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꿈여연대, 참여불교제가연대, 천주교수녀정신연합회사회사목국, 천주교인권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중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성취회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현노동여성정책연구소,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그 외 지역단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으로써 중동사태가 폭력의 악순환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래로 민간인 살상은 물론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침해당해 왔다. 점령, 억압, 전쟁, 가난, 인종차별에 따른 고통은 이 지역의 이혼이 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점령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부자별 체포,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라카트수반을 피국으로 추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정부의 군사적 행동은 팔레스타인들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희망을 줄이고 두려움과 증오의 감정만 강화시켜 팔레스타인인들을 더욱 자살공격으로 내몰 것이다. 우리는 이미 18세 팔레스타인 소녀까지 자살공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소녀, 소년이 자살폭탄공격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0일 결의 1422호를 채택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정부의 강경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군사행동은 고통, 증오, 배인간화를 강화할 뿐이다.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집단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게 평화형성의 길이다. 팔레스타인들은 민주적인 독립국가의 성취를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팔레스타인 주변국들이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정부 또한 생명을 과다하는 자살폭탄공격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스라엘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호 존중에 기반 한 정치협상을 시작하라.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동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라.
3. 이스라엘정부는 즉각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철수하라.
4.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는 모든 폭력행위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6.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라. 우리는 유엔, 이스라엘정부가 이상의 요구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용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평화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양심적 지식인, 평화, 여성,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세계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과 여성단체, 평화, 시민단체들과 함께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02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평화유안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외교연합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중단하고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과 학살을 중단하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들을 무시한 채, 20년 만에 가장 무자비한 공격을 자행하여 거의 보름에 걸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 최근 아리엘 사촌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밀려, 길일야와 물카텔의 도심에서 탱크와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두 도시에 대한 봉쇄의 끈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으며, 다른 점령지에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리엘 사촌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목적이 "자살 테러의 뿌리를 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자살 테러의 뿌리"가 이스라엘과 미국임을 아리엘 사촌 이스라엘 총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리엘 사촌은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때때로는 침공한 전쟁 범죄자이며, 사브라(Sabra)와 샤틀리(Shatila)난민촌의 팔레스타인 2천여 명을 죽인 학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이 학살을 지원하는 전쟁무기를 공급했다는것은 추지의 사실이다. 이스라엘 공격에 힘입으로 일관하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4월 7일에서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촉구했으나, 그의 발언은 미국이 이라크로 전쟁을 확대하는 데 이스라엘의 물줄적인 무력 침공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스추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 민간인들은 전쟁의 공포와 생존의 위태로움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발표만으로도 3월 29일 이스라엘 공격 이후 열흘 동안 2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병대를 수색한다는 이유로 1,500여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법구금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블런스차와 유엔구조차량, 전 세계에서 온 평화운동가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발포했다. 또한 보도통제로 피신 기자들은 이스라엘 점령지구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 이미 기자 한 명은 살해됐다. 보름이 넘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에 식량과 의약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팔레스타인에는 살 곳도 먹을 음식과 물도 부상자를 치료할 의약품도 없다. 단지 전쟁의 광기에 희생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친구만이 아파할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반대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날로 드높아지고 있다. 중동과 유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사촌의 학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4월 6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학살에 반대하는 7,000여 명의 시위가 있었으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촌의 팔레스타인 학살정책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생존과 독립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하며 사촌의 학살이 중단될 때까지 이스라엘 정부에게 지속적인 항의 외사를 전달할 것이다. 사촌은 지금이라도 당장 점령지에서 물러나고 학살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학살중단과 이스라엘 군 철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의약품 지원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하라.
- 하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제국주의적 개입을 중단하라.
- 하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과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학품, 식량, 식수, 전기, 주거 등을 제공하라.

2002. 4. 11.

가톨릭평화복지기 / 경제정의실천연합 / 녹색연합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 / 민주화
 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비폭력평화연대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인권을 평화로 위한 국제
 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학생회협의회 / 좋은벗들/ 청년·학생 반전
 위원회(녹색연합을주축한청년모임·다함께-서울대교구가톨릭대학생연합회·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철학과학생회연대·천주교교구학생선교회·15기서울지역총학
 생회연합) / 참여연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노동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주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 함께가는사람들 / 환경
 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서울시 지부 /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회 / 사회당

남과 북의 각계 단체 대표들의 공동성명

남과 북의 각계 단체 대표들의 접촉이 4월 11일과 12일 금강산에서 있었다. 남과 북의 각계 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올해의 통일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남북단체들은 지난4월5일 평양에서 성명 당국 사이에 발표된 남북공동 보도문을 적극 지지한 영하며 실천해나갈 것이다.
2. 남북단체들은 올해 통일운동을 6.15 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남북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갈 것이며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4. 남북단체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민족공동통일행사, 그리고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 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를 진행하며 이 통일행사를 진행할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 확정해 나갈 것이다. 남북단체들은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02년 4월 12일

금강산에서

서해 분쟁, 평화적 관리가 절실하다.

6월 29일 오전 북방한계선(NLL) 남쪽 연평도 부근에서 발생한 남북한 해군 사이의 교전으로 양측 모두가 큰 인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지 못하며 군사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이번의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북방한계선 지역은 99년 고전사태가 보여주듯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화해협력 분위기 저해를 막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불행한 사태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사건 발단에 대한 주장이 남북한 정부는 물론, 연평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군당국과 정부는 먼저 이번 사태의 진상을 한결 의혹 없이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방송 3사 등 언론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신과 적대감을 유발하는 기사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내용과 평화적 해결 중심의 보도도 남북간 재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언론사가 나서야 한다. 둘째, 남한 군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의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북측의 잘못이 입증되면 북측에게 엄중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만, 긴장 악화와 재발 방지가 가장 큰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합동에서 내놓은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축한 새 작전지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남북이 무력비치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이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고전규칙 개정은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고전 수칙의 본래 목적이 무력 충돌 방지 및 무력 충돌시 확인 방식에 있지 신제공격을 통해 소규모 분쟁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사태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및 냉전구조 해체 노력을 반대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찾는 냉전세력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99년 서해교전 때, 급강한 관광 사업의 지속이 분쟁 확대 및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었듯이,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교류협력 및 화해 노력은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예정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회의 결정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가 또다시 냉전국면으로 돌아서려하고 있다. 북-미 간에는 당장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핵문제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북한과 미국을 바라보는 평화애호가들은 북미협상이 중단되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반도가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치달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 악화와 근본적인 원인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및 이로 인한 북미대화 지연인 만큼, 부시 행정부는 예정된 특사 파견을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정부는 분쟁의 씨앗을 함시적으로 일태한 북방한계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 북미 대화를 풀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

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북방한지선 문제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평화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NLL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합의화하려는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파도기적으로는 NLL 인근 지역을 남북 공동어장형성 및 꽃게잡이 등에 남북한 어민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다시 한번 진상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전심으로 바란다. 이들의 죽음과 부상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길 역시, 하루 빨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물더라도 계속 걸진게 나갈 것을 모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2002. 7. 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미군 케도차량에 압사당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법무부는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고

미국은 형사재판권을 한국에 양도하라.

지난 달 13일 경기도 양주군 풍죽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갖길을 걸어간 신효순(14)양과 심미선(14)양 여중생 2명이 출근중이던 미2사단 공병대 소속 가도 운반용 케도차량에 치혀 압사하는 처참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우리 여성들은 딸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아프게 숨진 어린 님들의 영혼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입장을 밝힌다.지금 우리 여성들은 이처럼 억울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처하는 주한 미군측의 행동에 실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미군측은 사건직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성명을 내는 등 몇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기엔 충분치 못했다. 그리고 7월 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석 예정이던 사고차량 운전병 위커 마크(36) 병장 등 2명을 신변위험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군측은 한국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강단하고 하루빨리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양도하고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배상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또 우리 여성들은 무엇보다 현지 미군측의 조사결과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철저하게 재판권인 진상조사를 위해서 강력하게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SOFA규정 제22조에 의하면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형사재판권에 대한 제1차적 권리는 미군측에 있지만 동조 3항(다)호에 의하면 "제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상대국이 그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포기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법무부는 미군의 공무집행중명사가 정수원 남로부터 21일째가 되는 7월 11일까지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보낼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의정부 지검에서 고소된 내용을 조사할 것이고 미군 측에서 추가 조사된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재판권포기요청서를 보낼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할 내용이 지휘체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단순히 사고차량 탑승자 2명에 국한된 조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법무부가 '차량 탑승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권포기요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벗어나 사건을 보다 구조적으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것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한미군과 변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서는 실제로 3%도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관된 현실을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다른 주한미군 범죄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이런 사건에도 되풀이될 것이다.따라서 법무부가 기한내에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85년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12세 여학생 강간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초기 진행은 미군이 확보하고 있었고 한센 주일 미군기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지만 오키나와 나와 지검이 범죄 미군들을 나와 지방재판소에 기소한 후 일본측에 진행이 인도되어 철저한 수사결과를 통하여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될 뻔했던 미국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있었다는 점은 이번 사건 해결방법의 좋은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정부와 법무부는 SOFA규정 제22조제3항(다)호 규정에 따라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일차적 관할권포기 요청시일이 마감되는 7월 11일까지)을 반드시 진행하라!

둘째, 미군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해 한국에 형사재판권을 이양하라.

셋째,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 등 불명확한 현행 SOFA를 즉각 개정하라

2002년 7월 9일

평화를간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공동성명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6월 13일 나라 전체가 월드컵 열기로 들끓고 있을 무렵 경기도 양주군 효촌면 한가롭기 그지없는 외딴 시골마을에선 돌연에 상상하지 되어있는 불꽃을 빗발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느리고 있던 조양중학교 2학년생 심도선양이 주한미군 2사단44공병대 위커 프크레이 병장이 오는 거대한 장갑차의 무한태도에 밀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참하게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28일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 책임자 위커 프크레이 병장을 비롯한 주한미군측 피의자의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두 어떤말을 할이래면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위를 중심으로한 시민사회단체와 '나라와 존화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이번 여중생 사망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끝나이에 치참하게 죽어간 어린 넋을 회소나 위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한미관계를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첫걸음이다는데 동의하여 오는 대국민 합동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4일 리은 라포브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군측 책임과 사과를 표방하는 성명 발표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하며 치통하고 역을하게 희생당한 여중생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회하고 이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억맸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발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국민 모두의 힘에 있었으며 그 성과가 고스란히 우리국민 모두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을 위해 타고 넘어야할 과제가 숭하게 남아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주한미군 당국과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들을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국민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 있게 나서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는 아직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미군당국은 여전히 사고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에 별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구축되고 제도화된 한미간의 불평등 관계에 있으며 주한미군의 치회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한미SOFA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겪은 치욕스러운 일제 36년간 불행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국가인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엄있게 살며 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대등한 한미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합동 보도대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모두는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를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를 명백히 밝히며 우리국민 모두의 단합된 협조 한민족의 지력으로 실현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시 미대통령은 이번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해 미합중국 군대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국민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미군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전통록 감전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SOFA규정 제22조제3항(다)호 규정에 따라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일차적 관할권로기 요청시일이 마감되는 7월11일까지)을 공식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전동록서에 이어 여중생을 죽제한 사고부대인 캠프하우즈의 폐쇄와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진담조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 7월 9일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대국민 합동 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은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즉각 양도하라!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비명처럼 간고 신호순양과 심미선양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 또한 그동안 주한 미군법리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자매들과 미군 장갑차에 쓰러진 두 어린 넋들의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추모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14살 꽃다운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 대처하는 주한 미군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미군 당국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한국인의 강력한 반발에 접하고서야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부대장 등 사고관련 책임자들을 미국으로 몰아가지 함으로써 더욱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 SOFA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이런 여중생 사건을 책임있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뒤뚱뒤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을 적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하루 빨리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양도하고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배상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재판권포기 압력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행사하여 주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많은 주한미군 범죄에도 불구하고 4%도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여중생 살해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미군 범죄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어차구니없는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열네살 어린 넋들에게 일어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주한미군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한국정부에 형사재판권을 이양하라!

둘째, 미 부시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째,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장지 대륙을 수립하고, 불평등한 현행 SOFA를 개정하라!

넷째, 사고부대의 책임부대 펄프하우스 미군훈련장을 폐쇄하라.다섯째, 한국과 미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

2002년 7월 25일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고 신호순,심미선을 위한 여성추모제 참가자 일동
기독교연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세계상을어는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우회, 한국여성외교포럼,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주한미군은 재판권 이양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판권을 한국에 반환하라

- 미군의 여성성 사망사건 재판권 이양 거부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

최도차장 두 여성성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7일 미군 당국은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 요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거부 사유는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권리가 없고 또한 사건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주한미군 측의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재판권 포기하는 이미 1957년 일본에서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있고 별다른 기소관련 여부는 미군측 내부사정으로 한국측 재판권 이양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이양거부 발표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진정한 사건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는 바로 한국 측에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그때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재판권 이양거부를 철회하고 원만한 사건회결을 위해 재판권을 조속히 한국정부에 넘기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 재판권 이양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법무부가 일본의 공무중 재판권 포기 사례를 가지고 미군이 일본인 여성에게 장난감아 총을 쏘아 숨지게 한 고의적인 사건이기에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로 볼 수 없다'라고 미군의 일방적인 입장을 앞서 발표한 것이 우리 여성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일본의 경우 미군은 공무 중 사건이라 고집하다 일본의 반대어문에 밀려 100여 일만에 미일관계를 고려하여 재판권을 일본측에 넘긴 것이다. 한국정부와 법무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오히려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역효과만 놓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와 법무부가 미군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재판권을 이양 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양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권 이양문제를 비롯한 불평등한 SOFA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주한미군은 재판권 이양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재판권을 한국측에 넘겨라!
- 정부는 재판권을 반드시 이양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미양국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라!

2002. 8. 9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2002서울 국제회의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론: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미국 장갑차에 의해 두 명의 여중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뜨거운 투쟁이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이곳에 모였다. 두 여중생의 희생은 미국정부와 미군이 펼쳐고 있는 테러리스크와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된 군사주의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미국의 경제 군사적 힘에 의해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지체받고 있던 지역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증폭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테러리스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남한, 오키나와, 일본,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와 같은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공포와 불안, 폭력과 억압을 조장하는 정책과 법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왔다. 일본의 군사비상법안(Military Emergency Bill)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 본토안보법(Homeland Securities Act)은 미국정부와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며, 현존하는 법을 무시하면서 경제적 이익 추구가 마치 국가안보의 공적인 양 가장하는 군사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했다. 필리핀의 상호 병참업무 지원 협정(Logistics Support Agreement)과 같은 제안은 미군의 권위와 필리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의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켰다. 미국은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안보를 팔기살아 미국의 세계 경제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세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우리는 해당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절차와 자주적 결정권을 부정하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반대한다. 또한 이민자들과 민민들의 기본권을 차별하고 부정하는 억압정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종, 계급, 성, 국가의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현존하는 정책과 새로운 군사 정책의 의회 통과를 반대한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는 세계화와 미군주권 그리고 유모적인 국가 외교에서 비롯되는 군사화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환경에 대한 폭력으로 과거와 현재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주의적 정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상호연결되어있다. 우리는 각 정부의 군사 정책과 행동을 반대하며 진정한 안보의 비전을 가시화하는 데 여성의 역할과 지도력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우리는 여성에게 가해진 과거의 군사범죄,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그리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오키나와 전투에서 자행된 학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겪은 여성의 경험을 기억할 것이며, 좋은 이웃되기 정책(Good Neighbor Policy)과 같은 군사적 행위의 본 의도를 손색시키는 정책에 기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 군대가 우리의 삶과 지역공동체,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규탄한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군사주의의 반행과 부정적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안전, 복지, 지역 공동체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위한 비전을 굳건하게 다지며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미국과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진정한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정책을 중단하라.

- 우리는 미국이 진정한 안보와 인권을 부정하고, 확대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미국에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

2. 자주적 결정권과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라.

- 우리는 미정부가 2003년 5월까지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에서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미국이 비에케스의 모든 땅, 특히 동부와 로스트(Rotr) 레이다가 있는 지역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필리핀의 방문군정령(Visiting Forces Agreement) 폐지를 촉구한다.

3. 생명을 보장하고 환경을 정화하라.

-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기지환경 정화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불평등한 SOFA 계약을 촉구한다.

4. 미국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파괴된 삶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구비용을 지급하라.

- 우리는 미군훈련으로 발생하는 육체적, 정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미국이 지역공동체에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지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미국과 미군주둔지의 정부가 아메리시안 어린이에게 양국 어느 곳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건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각국 정부가 성매매된 여성들의 노후에 대해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공동체의 삶에 군사주의를 확대시키는 미군의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 우리는 한국과 오키나에 새로운 기지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미국 정부가 무기외 군사장비의 개발과 판매를 미국에 강요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6.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의 조장을 중단하라.

- 우리는 각국 정부에 군대예훈과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기지촌의 활동을 폐쇄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전쟁과 폭력을 찬양하고 부추키는 무기장난감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8월 20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

제4차 국제회의 참가자 일동

국방부의 '미 이라크공격 지원 검토'에 대한 논평

국방부는 9월 1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와 답변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군사지원 여부와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테이라크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국면여론과 우방 동맹,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이라크공격에 대한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인권과 생명, 평화를 중시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 패권적 군사질서 재편에 부응하는 입장에 따른다. 이미 미국의 이러한 군사외교정책은 전 세계의 평화애호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테러근절이라는 명목아래 민간인의 무고한 생명을 짓밟아 갔던 지난 '아프간전쟁'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가 않았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의 무기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등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미국과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평화 외교를 요구해야 할 국방부가 미국주도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군사적 종속관계에 머무르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전쟁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평화 질서의 근본을 쥌는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대테러 전쟁을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평화의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인권과 생명, 평화를 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세계 패권질서를 평화질서로 전환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인만큼 대통령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발생해서도 안된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다시 무고한 민간인의 대량 희생은 수만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미 이라크 공격에 군사 지원과 전쟁을 도모하는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 오히려 국방부는 남북한 군사교류에 집중해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생명과 평화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여성들은 국방부가 또다시 전쟁을 수행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부합하는 어떠한 행동도 수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평화의지를 가지고 인간중심의 안보 가치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2. 9. 18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0월 8일 반전쟁화국제행동 성명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년을 기억하며,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

10월 8일은 부시 행정부가 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이론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강행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걸쳐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였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민중들의 목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결과는 실로 참담하다. 격계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직접 폭력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굶주림과 질병 등 전쟁의 간접적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반 인권적 상황은 정당한 전쟁의 한구석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과 인권문제는 주변화 되고있다. 아프가니스탄민중들이 아직까지도 겪고있는 참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열거하지는않겠다.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에서 보듯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이라크에 대한전쟁은 이라크의 무고한 민중들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기에 국제사회는 이를반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6만여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평화를 주문했고,이탈리아에서도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반대를 외쳤다. 그리고 프랑스와독일 등지에서도 초단간 대규모의 반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인들 스스로도 수십 차례의 평화집회를 이미 열었고 또 대규모 집회들을 언덕아 계획하고 있다.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 역시 10월초에 연달아 대규모 반전 집회들을열었거나 열 계획이다. UN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위한 결의안을 거부하였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 이렇듯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정도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민중들 역시 지구촌 동포들과 그 뜻을 같이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더러운 전쟁'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테러와의 전쟁"을 가강한 더러운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첫째, 미국은 이라크가 테러집단과 연계되어 있거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후세인을 '악마화'하고 있다. 둘째, UN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공격을강행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셋째,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인군산복합체와 석유자본의 이윤보장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911 테러는 이윤자본과 부시 행정부에게는 단지 이윤추구를 위한 명분이 지나지 않는다. 넷째,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테러나테러에 대응 아니다. 이는 다른 국가테러를 예컨대, 이스라엘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테 저질러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조장하고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독재를 지원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나아가테러와의 전쟁은 불법이며, 필리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인권침해의 구실로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부시행정부의 테러리스크의 전쟁은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안보를 기반으로세계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종주의를 조장하며, 세계적 군사화를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화는 여성의 반군을 증가시키고, 빈민과 이인자들의기본권을 차별하며, 여성과 어린이, 환경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 지원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주도의 더러운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려는 한국정부의 발표에 강력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것이 진정한 우방국의 자세일 것이다. 대

다수의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전쟁을 지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대실행위이고 또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 또 만약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끝내고 북한에 대해 같은 논리로전쟁을 획책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이를 막을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또한 모든 전쟁과 군사적 폭력을 반대한다.이에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한 국가 전 세계 민중들의 의지를 모아 부시 행정부와한국 정부가 다음 사람들을 요구한다.

-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람 후세인의 운명을이라고 국민들의 손에 맡기라.
-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많은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프로그램이 촉발한 민권의 확산과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포기하고 제3 세계권 국가들의 부채 탕감과 빈곤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한다.
- 한반도와 일본, 오키나와,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그리고 필리핀 주둔 미군을즉각 철수하라.
- 국제 형사재판소 협약과 같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지지하라.
- 테러리스크의 전쟁과 진정한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정책을 중단하고, 여성과 어린이, 소수 인종들을 위한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라.

2002년 10월 8일

반전쟁과 국제평등가들이결회지기, 정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한국여성 평화네트워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의힘, 녹색연합, 다함께,두레방, 폐대순근정을위한 한소리회, 민족문제연구소, 자주평화통일민족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송파지구당,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준), 민주노동, 무산여성회, 비폭력평화연대, 4 월혁명회,양심적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여성환경연대, 원불교남북한 살 운동본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좋은벗들,주한미군병과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여성 공동체, 청년학생인권위원회,통일연대, 평화과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시인연대,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대인지외대책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환경운동연합, MD지지공동회(총 46개 단체)

6.15 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 남과 북, 해외여성대표들은 뜨거운 통일열망과 의지를 안고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본일사상 처음으로 여성통일대회를 가졌다.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 무문별상봉모임, 합동예술공연, 유취오락경기, 수영 및 미술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하여 6.15 공동선언의 생활력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절박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남, 북 해외여성대표들은 민족구성원의 결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모든 여성들이 굳게 단결하며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갈 일념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 해외여성단체들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힌 이정표이다.

- 남, 북, 해외 여성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본통일대회로 계기로 통일운동의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경제가 이렇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의 기본정신을 지켜 나갈 것이며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 막는 온갖 시도들을 끈질기 반대할 것이다.

2. 남과 북, 해외 여성대표들은 이 땅에서 새전경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민족의 운명과 예 개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을 물고을 어떠한 구실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이 땅에 다시는 불행과 고통, 전쟁이 일어 나지 않도록 국제적여성연대를 강화하고 세계여성들의 평화적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3. 남북 해외 여성단체들은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의 단합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민족통일운동에 중요한 원동력이다.

- 남,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연대와 단합을 더욱 강화하며 통일운동의 길에서 여성들의 힘과 목소리를 합쳐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계속 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들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여성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 접촉과 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4. 남북 해외 여성들은 남남이 평등한 통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과 남남평등한 통일사회구현에 절

대적으로 필요한 요청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민족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도 남성들과 함께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남과 북, 해외여성단체들은 남녀가 평등한 통일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형태의 통일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여성들의 힘과 목소리를 힘차게
모아 나갈 것이다.

2002년 10월17일 금강산

6·15 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북한 핵문제에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제안

1.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문제에의 대응

1.1 최근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 남북관계의 확대 심화, 북일간 정상회담 수교협상 등으로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는 2001년 초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고조되었던 북여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던 남한의 대북보용정책과 북한의 대외관계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하고 생존해 있는 피랍자를 일본으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2 그러나 미국이 2002년 10월 17일 북한이 평양에서 있었던 미국 특사와의 접촉에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였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발표 이후 북한 핵개발 계획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선 핵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 부시행정부는 최근 중간선거 승리 직후 중유 및 남북경협 중단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3 이러한 상황은 자칫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2003년도 한반도 위기설을 현실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현 상황이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대한 교차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하여

2.1 북한의 핵개발 의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도, 또한 어떠한 수준에서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2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제네바 합의(1994)등의 기본 합의들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친 핵무기 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핵무기 불 이끈다 대량살상무기를 '대리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의 필요를 줄 수 있다.

2.3 그러나 한편,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 배경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자체를 불신하면서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우도 사형 역시 이제 겨우 20%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핵국가에게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함에 있어 미국이 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무엇보다도 무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실험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이유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북한이 핵개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한반도 정세불안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3.1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과 관련한 논란에서 미국은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의 명분을 밝히 위해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북미간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보다 정확히 밝혀야 한다.

3.2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하여 남한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북한의 핵 문제가 갖는 중대성에 비하여 매우 경솔하였다. 미국의 발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을 '북한의 핵무기개발 추진 혹은 보유'로 단정하거나, 논란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실효를 단정하고 대북강경정책의 추진을 강요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언론과 정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3.3 미국이나 남한 내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막아낼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북강경정책은 북한 지도부를 불안에 빠뜨림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간의 공방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의도와 목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4.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평화, 비핵, 화해협력

4.1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무엇보다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무력사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국은 지난 94년 북한 핵위기를 당시 영변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폭격과 함께 미군 수 십만명을 동원하는 전쟁 계획을 수립했었다'는 제

리 인 국방장관의 발언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7천만 지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 계획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준다.

42 한반도 비핵화와 제네바 합의의 존중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핵무기가 개발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그 동안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NPT, 제네바 합의는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 핵개발을 반대함은 물론 깊은 맥락에서 미국의 핵실험공격 구상 역시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43 화해, 교류협력 지속 어떤 핵과문제도 불구하고 남북한 및 관련 당사국이 평화적인 해결 원칙에합의한 만큼,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 북미간 제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51 제네바 합의 준수 의지 재천명 제네바 합의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북미 협정간에 체결되었던 제네바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한반도 핵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합의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제네바합의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합의부재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 준수 이행을 재천명하고, 제네바 합의 틀 내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욕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확약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52 전제조건 없는 조속한 대화/대화화 협상'없이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핵개발 포기과 불가침조약은 선후의 문제일 수 없다. 우리는 북-미 양국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만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최근 '불가침 보장 없이 핵 포기 없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대화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핵 불사용 약속을 비롯한 다양한 체제안전보장 없이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53 '평화, 비핵, 화해협력' 결의안 채택우리는 지난 94년 핵위기가 당시 정치권이 대폭넓은 강경론만 내세우다 실질적인 협상에는 소외되었던 핵아픈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이제라도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차원의 '평화, 비핵, 화해협력'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

54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력 지금까지 남한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해 온 일본 등 주변국들과 KEDO 관련국들에게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한 고립-압박 정책에 동참하기보다는 북한과의 관

재개선과 인도의 지원 및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지렛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5.5 북한 중유지원은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KEDO 중유 선적 선박의 회항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반대한다.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중유공급 통합의원 지원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특히 KEDO 분담금의 70%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중유공급 중단 등 미국의 대북경제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에 대한 전례지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02. 11. 13

6월사랑방, 녹색연합, 민고협, 민족화해저우통일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숨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1. 미국이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이유로 중유제공 중단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12월부터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미 간 유일한 합의 틀인 제네바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중단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핵개발 권리 주장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2.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유 제공 중단을 비롯한 대북 봉쇄 및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 특히 이번 KEDO의 중유공급중단 결정은 사실상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KEDO 역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서 향후 양방간의 입장을 강경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제네바 합의 폐기와 합의부재의 무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제네바 합의 이후 지난 수년간 북한과 미국, 남한 기타 KEDO관련국 간에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위안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3. 우리는 KEDO 합의문이 "남미일-북한, EU-북한 간의 대화, 국제적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북한에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포기약속을 가시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채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화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압박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대해결의 핵심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에도 있다. 우리가 누와 강조해왔듯이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 경제안전보장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압박정책을 서두를 일이 아니라 북-미 양방간의 조진 없는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해법이다.

4. KEDO가 결정으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이후 '모든 것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린 것'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북극으로 돌고 갈 것이 아니라 제네바합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12월 이후의 중유공급도 지속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중유공급 중단으로 제네바 합의가 붕괴되는 등 사태가 악화된다면 대북 경제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미국과 이에 부화뇌동한 한국 등 KEDO 관련국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2002. 11. 15

6월사상발, 녹색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민교협,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한국여성민주회, 좋은 벗들, 참여연대, 평화네트웍, 평화문안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학술단체협의회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12월 31일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민주자유권 되찾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랑스런 국민여러분이 해냈습니다. 역대사권을 10만개의 촛불인파가 집어삼킬 듯이 보위했으며 전국 방방곡곡과 16개국가 해외동포들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미선이,호선이의 현을 풀고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위대한 뜻과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고사리손에 들린 촛불과 교복을 입고 나온 중고등학생들, 아기를 들쥐임고 나온 주부들, 연등을 켜고 나선 불교신도들과 수녀님들, 교회 깃발을 들고 나온 기독교 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않은 계층이 없고 참여하지 않은 종교와 계파가 없이 하나의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담고 활활 타올랐으며 반드시 살인자를 심판하고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다음과 12월 현거울의 반하늘을 뜨겁게 달구면서 완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날더노소 없이 계층과 계파를 초월하여 범국민적으로 단합된 모습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세계가 한국인의 뜨거운 애국심과 단합된 힘에 놀라고 현민족의 존엄성을 깊이 느낄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약의 축" 부시와 한국정부는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시는 미국대사를 시켜 "간접 유감표명"을 하더니 이번에는 전화로 유감표명을 했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민의 진정한 요구와 뜻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둔하고 명칭하기 때문인지 오만하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파를 재경할 수 없다고 하고 반미감정이 우려스럽다는 등 어느 나라 정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전미사대적 입장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힘이 좀더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우둔한 "약의 축" 부시에게 한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합니다. 한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크며 더 이상의 기만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후 풀어서는 새 한국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살인자 처벌과 소파계정에 앞장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2월 31일은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확실하게 "약의 축" 부시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무릎 꿇려 사죄를 받아냅니다. 미국에 짓밟힌 대한민국의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고 미선이, 호선이의 현을 풀시다. 새롭게 맞이하는 새 세기의 새해에는 오욕의 역사를 갈장내고 주권을 회복하여 후손들에게 민주자유의 새 사회를 물려줍시다!

2002. 12. 19

미군감찰차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촛불인간띠잇기 폭력진압 한국경찰 규탄성명서

-어린 아이들까지 폭행하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한국경찰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한국경찰이 거기에 합의를 하는, 그것도 촛불을 들고 인도로 행진하는 자기나라 국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게다가 한국경찰은 바로 미선이 효순이 또래의 교육을 입은 어린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 집단폭행을 가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21일의 촛불인간띠잇기 대회를 진압하는 한국경찰의 모습은 인권을 상실한 그야말로 야수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린 것들이 왜 나왔느냐며 욕을 하면서 경찰에 달린 모자를 잡아채서 놀리고 때렸다" "바로 내 앞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아이와 여중생도 맞아 피를 흘리며 응급차에 실려갔다" 이라고도 한국경찰이 "한국"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손에 든 것이라고는 촛불밖에 없는 저 나라국민을, 그것도 어린 아이들까지 방패로 공포로 폭행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던 말인가?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어떻게 매일 한겨울의 거리를 촛불로 예우는 이유를 한국경찰은 모른다 말인가? 진정 한국경찰의 폭력에 의해 제2의 미선이 효순이가 나오기라도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 날 평화로운 촛불인간띠잇기를 하려는 국민들을 향해 보여 주었던 한국경찰의 모습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폭력으로 막아나서는 "반국민적 모습" 그 자체였다. 온 국민은 한국경찰의 이번 촛불인간띠잇기대회에서 있었던 반인륜적 반국민적 반민주적 만행을 절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번도 미선이,효순이를 죽인 미군살인자를 잡아들이고 처벌하는데 나선적 없던 경찰이 이렇게 자기나라 국민을 추습제 여기고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던 이날의 만행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날 있었던 폭력만행에 대해 한국경찰이 진정으로 국민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찰은 국민에 의해 대국노로 단죄 받고 심판 받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폭력진압에 대해 한국경찰청장은 공개사죄하라!
- 국민의 뜻을 막으면서 미국하수인 노릇하는 매국노적 한국경찰라성하라!

2002. 12. 23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서한

지금 한반도는 50년동안 미군들이 저지른 오만무례하고 만인간적인 살인 만행에대한 규탄과 분노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여중생 살인사건을통해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폭파로 일제 된것이다. 대이살한국인은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여중생 살인사건이 난지도 반년이 다되어간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인종들이 물려 여중생을 추모하고있다. 광화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후대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많은 시민들이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부시 미대통령은 한국인의 규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3일,한국인의 요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형식적인 애도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남을시킴서 유감을 표시하더니 이번에는 진화로 사과를 표시했다. 사람을 죽여놓고진화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초등학교생에게 물어봐도상징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부시는 한국인의 분노와 요구를 가버어 보고있다. 이런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사과는 한국인을 우롱하는 작태이며 미신이와효순이를 두번 죽이는 행위이다. 미칠 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2002년은 막을 내리고 새해가 밝아온다.

2002년은한국인에게 특별한해였다. 미신이와 효순이 투쟁을 통해서 미국의 존재를 폭폭의일제 된 해였다.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부시는 사태를 폭폭히 인식하고 유가족과 한국인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한국인의 요구에 끝까지 맞서고 받아들이지않는다면 부시는 한국인과 전세계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과합정을 전면 개정하라!

재판을 무효화하고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

부시 미대통령은 유가족과 한국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한국인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2월 23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촉구서한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거기에 어떠한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지 당선자는 너무도 잘 알 것이다. 대통령당선자로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민중사적 과제는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 살인사건 문제이다. 월 14일 대통령선거직 전에도 광화문에서만 10만, 전국과 해외동포까지 합쳐총 40만의 국민이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기 위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살인디군 처벌과 소과개정, 부시미대통령 공개사과를 외쳤건만 부시 미대통령은 전화로 응답표명이라는 걸 하는가하면 소과개정은 불가하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이에 분노한 온 국민의 촛불대행진은 오늘날까지 더욱 더 뜨겁게 타오르고 국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광화문 앞에서,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어린이들부터20,30대네티즌과 직장인들, 손에 손을 잡고 나온 가족과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의 행진은 이 사건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직전인 12월 9일에 여중생범국민대책위원회와 만나서 두여중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서약시에는 서명은 하지 못하지만 부시미대통령사과와 소과개정을 위해 끊임없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도 여러번 소과개정을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가 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고 국민의 힘을 통해 올바른 정치를 하기따한다면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두여중생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으로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고 주권을 회복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미선이 효순이와 같은 미통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라.

2002년 12월 23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기판적인 SOFA 운영 개선 합의에 대한 여중생 범대위 논평

여중생 범대위는 지난 23일 한미소과 합동위원회 형사재판전문과위원회에서 발표한 형사재판권 분야 소과운영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은 현행 한미소과의 불평등한 내용을 전혀 개정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전역에서 들끓어온 일어나고 있는 촛불평화대행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힘과 불평등한 한미소과 전면 개정을 원하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처사이다. 호순이, 미선이의 주한미군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무죄평결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중 사건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행 소과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다.

무죄평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없이, 한미소과의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일이 일부 운영 개선만으로 국민의 여론과 요구를 무마하려는 미국당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있는 조처평등의 원칙을 다시 한번 묵살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추진권 행사 힘을 믿지 아니하고 미온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만을 내놓고 있어 다시금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초동수사 시 공동 현장질근 및 공동 조사 방안", "미 정부 대표의상서 1시간 내 출석 방안",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방안", "수사 상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공 상호 협조 방안", "수사 대상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소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과 형사재판권 관련사항의 실질적인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소과 합동위원회의 이번 초동수사권 강화 방안은 현행 소과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미당국이 제대로 지켜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초동수사 시 공동 현장질근 및 공동 조사 방안"이나 "수사 상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공 상호 협조 방안"은 모든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 대해 서로 조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한미소과(한미소과 22조 6항, 7)에 의해서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한국 수사관들의 사전 현장 접근과 조사를 막는 미군당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소과규정의 제약요소를 내세워 초동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한국당국의 저지세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권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당당한 한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미 정부 대표의 상서 1시간 내 출석 방안"도 미군당국이 수사나 제권을 위해 미국 정부 대표의 신속한 출석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현행 한미소과(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던 현실에 비추어 필요효과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 대표가 임회하지 않으면 미군 피의자의 진술 증거 능력이 인정하지 않는다(한미소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 사)는 규정을 비롯한 수사권을 제약하는 여러 규정들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 방안"은 이번 여중생사건에서 의정부 지청이 관계명 니노와 온진명 위자를 제소환해 수사했던 것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에 만지 않고 제멋대로 의정부 지청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출석이나 제소환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군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가 강화되기 위해서

는 초동수사에 협조해야 할 미군의 의무가 한미소과 본 협정에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한미소과 최하위 규정에 불과한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는 결코 초동수사를 강화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한미소과의 본 협정이나 합의의사록을 개정하여 미군 범죄자를 일정시간 구금하여 예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며, 계속구금권을 확대하고 미군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줄여야 초동수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체계를 통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동수사권을 강화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판권 행사 및 포기 조항, 공무관단 조항과 같이 형사재판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한미소과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소과 합동위원회의 한미소과 운영 개선 합의로는 미군의 공무 중 범죄를 줄이거나 미리 막기는 어렵다. 공무원 미군의 군사훈련으로부터 한국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 중 범죄 중에서 한국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에 대해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갖도록 소과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비공무중 사건의 90% 이상을 미군에게 재판권을 넘기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과의 근본적인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 한미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한미소과 전면개정에 촉각 나서라
- 미봉책에 불과한 개선합의는 그만이다.
미군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소과개정에 착수하라.
- 불평등한 한미소과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소과개정법국민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2002년 12월 24일

미군감찰차 역중생 고 신효순 김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Dear President Carter:

We would like to offer our sincere congratulations on your winning the Nobel Peace Prize in 2002. It is an overdue honor for a highly esteemed mediator in conflict resolution and a dedicated human rights leader. Your endless efforts in helping resolve major disputes and monitoring elections have meant substantial progress in world peace.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remember with heartfelt thanks your visit to Pyongyang in 1994 to eventually save Korea from the looming threat of war. You certainly deserve the Nobel Peace Prize for having brought peace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brink of war. The people in Korea have been profoundly moved by your priceless dedication and unstinting effor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e feel the current Bush administration's posture towar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quite likely to provoke another crisis.

North Korea has made determined efforts for consistent and potentially dramatic changes in its economy and society, during the past four months. Those changes include economic policy reformation by employing new pricing and incentive systems and ending the central rationing system; the abortive appointment of a Chinese-born tycoon to oversee its newest free-trade zone in Sinaju; the confession of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and the participation by its athletes in the 2002 Asian games in South Korea. North Korea has seemingly been able to gain guarded support from neighboring countries like Japan, Russia, South Korea, and China. Unfortunately though,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reluctant to admit North Korean overtures.

It is also our understanding that North Korea feels insecure in the fac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insistence on regime change, preemptive strategy as suggested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and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which the Bush administration places North Korea on the list as a target for a preemptive attack.

The vociferous allegation of North Korea's admission to hav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has not been confirmed yet. Despite many different voices and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this crisis, we believe that the basic premises of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must be respected, observed, honored, and guaranteed by the parties concerned. We are very anxious about the fact that the sanctions oriented policy without talks favor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suspension of implementing obligations stipulated in the Agreed Framework may lead to a horrible war crisis again.

All Koreans, under these circumstances, hope you will play a key role in bringing talks and peace as you did in 1994. We ask you to help us again in overcoming this crisis.

-- (1) We hope you can call for the parties concerned to pursue peaceful resolution when you deliver the Nobel Prize acceptance address.

-- (2) We also desire that you might intervene to mediat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you did in 1994.

-- (3) We would like you to visit Seoul and Pyongyang to encourage the Korean people who fear a possible war.

In this post-cold war era, the Korean people have suffered from the threat of war as many as five times during the past twelve years. Thus, we are determined to do our utmost for the cause of long-lasting peace on our peninsula.

With warmest regard and deepest respect,

Hyun-Sook Lee

Co-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Sang Jung Park

Co-representative

Peoples' Solidarity of People' s Democracy

Signed:

Member Organizations of Korean Peace Network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President Jang-Hie Lee,Ph.D

Civil Network for a Peaceful Korea

Representative Cheong Wooksik

Green Korea United

Co-representative Lee, Byung-chul,

Korea Professors' Association for Democracy

Co-representative Park, Sang-Hwan (Sungkyunkwan Univ.)

Sohn, Ho-Chul (Sogang Univ.)

Lee, Min-Hwan (Busan National Univ.)

Korean WomenLink

Co-Representative Kim Sang Hee, Jung Kang Ja, Yoon Jung Sook

Korea Women' s Association United

Co-representative Lee Kyung-Suk Lee Kang-Sil Chung Hyun-Back

Nonviolent Peaceforce Korea

Co-representative Park Sung Jun, Kim Young

Pan-Korea Association for Reconciliation
Chairman of the Board Professor Dr. Chu Chong-hwa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o-representative Lee Sang Hee, Choi Young Do, Park Sang Jung
Women Making Peace
Co-Representative Hyun-Sook, Lee, Sook-Im, Kim Young-Hee Shim
Other Organizations--

South Korean NGOs' Recommendations for a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 October 17th 2002, the U.S. announced that during its contacts with Pyongyang, North Korea admitted to having a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Since then tension has been mount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Under the circumstances, the KEDO, mainly due to strong insistence b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suspend fuel shipments to North Korea from December 2002 and US has reportedly forc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cooperative ventures with the North following recent Republican mid-term election victories. In South Korea too, some call for a review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t present, the United States insists the North should terminat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efore any talks resume, while the North retorts Washington has to abandon its hostile policy toward Pyongyang by concluding a non-aggression pact.

There are deep concerns and fears nationwide that the current situation might escalate into a militar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03. South Korean NGOs signing below regard this situation as one of the most serious obstacles for the ongoing peace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In an effort to find a breakthrough of this deadlock situation, we propose principles which all countries concerned should respect, and we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1. Basic Principles: Peace,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1.1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Above all, the security of humans on the Korean Peninsula is of utmost importance, and no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is acceptable. Remembering clearly the fact that the U.S. drew up a plan to attack nuclear facilities in Yeonghyon and mobilize 100,000 U.S. troops in 1994, we unequivocally state that such radical action should not be contemplated. Such military plans would hold the lives of 70 million Koreans as collateral and grievously fail to reflect their opinion about their own fate.

1.2. A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and the Agreed Framework

Whatever the circumstances,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a nuclear free zone and no use of nuclear weapons nor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re is acceptabl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DPRK Agreed Framework must remain intact. We firmly oppos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are equally opposed to any forceful U.S. preemptive strategies.

1.3. Continuation of Cooperation for Reconciliation and Exchange

Despite the current nuclear issue, as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countries concerned have agreed on principles of a peaceful resolution, Seoul and Pyongyang must continue to work toward reconciliation and cooperate to improve their bilateral relations. A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mpacts the continuation of a viable and vibrant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ecognize its role in resolving the problem and initiate measures to renegotiate an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2. Recommendations for a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2.1. Reaffirmation of the US-DPRK Agreed Framework

Scraping the US-DPRK Agreed Framework would bring immediate negative contingencies to the Korean Peninsula. Negating the Agreed Framework would mean North Korea and the U.S. tear up the only available foundation for preventing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we are extremely apprehensive that there are opinions favoring the abolition of the Agreed Framework. Therefore, we propose that North Korea and the U.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Agreed Framework, settling the suspicions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ithin the Agreed Framework. At the same time, we strongly recommend that the U.S. modify and supplement articles promising security assurances to North Korea.

2.2. Prompt Dialogue without Prerequisites

Insisting on peaceful resolution without dialogue and negotiation is nothing but political rhetoric. It is not a matter of whether renouncing nuclear development or signing a treaty of

non-aggression comes first. We urge both sides, North Korea and the U.S., to meet as soon as possible without prerequisites to initiate dialogue on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thereby guarantee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we have noticed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backed down from its initial stance of no renouncement of nuclear development without prior guarantee of non-aggression, showing a desire for dialogue. The U.S. needs to acknowledge that it is impossible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rough a rigid hard-line policy in the absence of assurances to North Korea that its security will not be threatened.

2.3 Resolution on 'Peace,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e should not forget the bitter experience of the nuclear crisis of 1994 when South Korean politicians insisted on a hard-line policy without alternatives, thereby excluding any negotiation proces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e ask politicians, regardless of their party affiliations, to cooperate together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peacefully, and we ask the National Assembly to adopt a resolution on peace,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4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We courteously ask Japan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which have been supporting South Korea'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to play an active role in peacefully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e ask them to continue to improve their relations with North Korea, cooperating for humanitarian support and exchange, rather than joining the U.S. in isolating North Korea.

2.5 Continuous Supply of Heavy Fuel Oil to North Korea

It is hardly acceptable that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stop heavy fuel oil shipments to North Korea. For a desirable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ssistance stipulated in the Agreed Framework, including heavy fuel oil, should proceed as planned. We particularly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s paying 70% of the total KEDO expenses, to clarify its position towards the U.S. policy on North Korea with respect to the cutting off of heavy fuel oil to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lead in urging neighboring countries to cooperate in supplying energy to North Korea.

2002. 11. 13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Civil Network for a Peaceful Korea
Council for National Reconciliation
Forum of the June

Green Korea United
Korea Professors' Association for Democracy
Korean Women Link
Korean Women' s Associations Unite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lf-relian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Women Making Peace, Korea

친애하는 카터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우리는 당신이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전쟁의 막대한 조정자이며 헌신적인 인권개척가인 귀하에게 지구촌이 이제야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분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께서는 지구촌의 주요한 분쟁의 해결과 선거감시를 하는 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엄청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에 처했을 때 귀하께서 이곳 한반도에 경호를 가져오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벨상 수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북민중은 귀하가 1994년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가 전쟁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북 민중 모두는 당신의 이 귀중한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귀하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 보유 시인" 문제에 대한 무시행정부의 강경정책이 1994년의 경우처럼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은 지난 2-3 년 동안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또한 최근 4 개월 동안 경제와 사회 부문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개방과 개혁을 향한 북한의 정책변화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개선노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무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부터 안보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판단됩니다. 물론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험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지적되어야 할 점은 북한이 인정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 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과 핵무기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1994년 북핵기본합의가 문제해결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시행정부가 선호하는 "제재만 있고 대화는 없는" 정책이 급박한 위기를 다시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 속에서 우리 남북 민중은 귀하게서 다시 한번 1994년도에 했던 바와 같은 중재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 중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연설 등에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해 주시고,

-1994년과 같이 북미중재역할을 다시 하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시민사회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쟁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헌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결의가 결합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얻어질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번영을 통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어린 고마움과 깊은 존경을 보내면서

2002. 11. 1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외 평화단체

“평화와 주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 기자회견

(2002년 12월 5일)

1.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총평

대선 후보들은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닦는데 자신이 책임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공약과 각종 TV 토론, 집회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보우선정책, 안보지상주의’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시기의 주요과제로 북의 안보위협계거를 최우선적 과제로 꼽을 만큼 안보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대북정책의 총론적 방향을 ‘역사적에 기반한 불안한 평화를 넘어 상호 공존·협력의 공고한 평화정착’(18일 21일 회담포럼 연설)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확고한 역제력, 튼튼한 안보태세, 군사적 우위, 북 ‘주적’ 유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구시대적인 남북대결시대의 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북이 일방적인 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상호간 협력 등 남북간 평화의 노력을 통해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기 보다는 북이 ‘안보위협’이라는 대북관에 근거하며 북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및 개혁개방 요구 등 북의 변화만을 촉구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경직된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조차 핵개발의혹 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가 이를 핵‘구기보유’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냉전적 사고이다. 또한 대북정책 선결과제 한미관계 개선에서도 주권과 인권, 평화와 화해라는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철저한 현미공조의 입장에 입각한 정책을 주되지 제출하고 있어 대미추종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노무현 후보의 평화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자신과 부채를 이어받았다’는 겸소와 공언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접근이라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치적 신뢰 조성, 화해협력의 틀 마련, 6.15 공동선언 등과 같은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며, 충분한 국민의 합의나 북의 합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견제적으로 노무현 후보는 남북간의 화해협력이라는 큰 골줄기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추세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라는 총론을 넘어선 구체적인 평화정책 및 통일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노무현 후보의 평화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실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미군사분야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실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비군사분야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의 방위태세를 지원하면서도,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의 정책을 답습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핵심인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에는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미관계에 있어서의 모호성도 큰 문제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협력·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대미관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역사일방어체제 참여 문제와 대이라크 전쟁 참여 문제, 저관권 이양 문제 등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화해교류협력 추진의 성과는 인정하고, 6.15공동선언과 기존의 남북합의 사항들(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진지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교류 일련도의 "대북정책"은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 체제하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정책은 일관되게 국익과 민족공조 및 자주 우선이라는 선명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한 대북정책보다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2차 남북정상회담과 군축추진 -> 북극간 핵, 대갈살상무기 폐결과 북대, 북입수고 -> 평화협정 체결로 실현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4단계 통일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미군철수와 군비감축이라는 적극적인 군축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의 안보를 대체할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남측이 먼저 군축을 하였다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16대 대선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비교안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은 북에 대해서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미국에 대해서는 추종의 입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무엇보다도 북을 통일 이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국민과 민족의 주권에 대한 뜻깊은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권리하고 통치하는 '대상'으로서의 북이 아니라 협력하고 화해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모두가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정직한 인정, '군사안보'가 아닌 진정한 '평화'로의 의식전환이 될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진전될 것이며, 이회창 후보가 밝힌 '상호 공존·협력에 의한 공고한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 특히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대북공격이 우려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미공조'라는 입장이라 하여 대해 침묵하거나,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장이 변함 없는 것은 민족과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대한 안이하거나, 무책임한 입장이다. 최근 여중

생 문제와 관련하여 소파개정의 취지를 일정하게 표명한 것처럼, 남북은 저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한미관계 전환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뜻대있는 정책, 자주적인 입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무현 후보는 무엇보다도 평화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에서는 뚜렷한 정책적 입장을 밝히는 것만 만만치 않다. 평화문제, 특히 대미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조성되었던 남북간의 화해협력분위기가 올해 들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는 주변 이해당사국, 특히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칙임을 주변국가로서 분명히 미국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을 촉발할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거나, 대이라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우호관계를 해치는 안된다며 주한미군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한미간의 불명확한 관계를 고쳐나가지 못한 김대중 정부의 '부족'까지 드러받아서 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비축소를 통해 사회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권영길 후보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일관성있고 선명하여 매우 진보적이고 전향적이다 평가된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의 삭감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 이후 국가안보의 유지·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남쪽의 선도적 군축으로 북쪽의 군축을 이끌어 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남쪽에서 선도적으로 군축을 한다고 해서 북쪽에서 군축에 바로 응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선도적 군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평화와 주권이 보장되는 한반도'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 요구안

1) 남북간 직대관계 해소와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마련
남북관계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형 빌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방력에서의 주체 표현 삭제, 헌법의 영토 조항 개헌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남북간에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간의 대결을 종식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왔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사업, 정희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재정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에 꾸준히 발전시켜왔으며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기여해왔다. 자기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것은 2003년 전쟁 위기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자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과 확대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환경 마련, 북미 상호간의 요구를 동시에 줄 수 있는 협상안의 마련, 북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반대, 동맹 핵심국의 재가동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등 북의 극단적 행동 자제 요구 등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번에도 또 다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또 다시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은 어떠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구애받음 없이 꾸준히 지속·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각지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대선 후보들은 교육, 문화, 체육, 여성, 환경, 종교, 노동, 농민, 청년학생, 통일 등 각지의 교류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집권시 이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통일논의는 당국이 독점해오다시피 해 왔으며,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은 일격히 통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각계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한 법적 규정 없이 남북 공동행사들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여러 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해 정부당국은 통제와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지원과 보장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지의 통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남북화해기본법 제정 등 냉전시대의 법령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산가족, 장기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남북자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 관계의 지속으로 인한 남북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남북자 문제 등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제도화하고 해결한다. 이를 위해 남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및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

이번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한미간의 행정협정(SOFA)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 대선 후보들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하에 수사권,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조항 등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는 국민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6) 전시 작전권의 환수

종속적인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동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미군에게 위임된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군사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한 군사행동을 막을 수 있는 한미간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출범 즉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7)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한미간의 비정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어설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MD 참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MD 구축을 서두르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의 무력화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MD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MD 참여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대선 공약으로 MD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차기 정부는 관연된 무기 체제의 도입 중단 및 도입 계획 취소, 미국의 한반도 MD 무기체제 배치 반대, 한미 연합 차원에서 구성돼 운영 중인 'CJTMOC'의 해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이라크 전쟁 판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미국 주도의 대이라크 전쟁 계획은 '베리와의 전쟁'이라는 외과를 쓰고 있는 석유 이전 확보와 미국의 패권주의를 중동 지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 정부가 유엔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고 사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 사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라크 문제 역시 유엔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히야 한다.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현행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6개월에 달하는 과도한 군복무기간은 개인에게 심각한 기회비용의 부담으로, 국가인보 차원에서는 현대의 군사력 조력을 만드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받아오고 있다. 또한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유린과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과도한 군복무기간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징병제에 의존한 병역 수급 구조를 모병제로 점차 전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상호 군축과 21세기 새로운 군사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낭비 방지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실시해야 할 것이다.

10) 북방한계선(NLL) 지역의 남북공동어로화와 새로운 해상 분계선의 설정
 북방한계선(NLL)은 유엔사령부가 북쪽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후부터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전상태 등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남북의 합의아래 새롭지 해상 분계선을 설정하여 군사적 충돌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과도기적 장치로 남북공동어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들의 손실과 분쟁 위험을 줄이고 새로운 협력의 모범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전사태이후 선제공격을 채택한 남측의 교전규칙도 무력 충돌 방지 및 확산 예방이라는 교전규칙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대선 후보 평화(통일/외교/안보) 정책 비교표

* 아래의 표는 평화단체 연석회의와 대선유권자연대가 공동으로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경향신문 답변 내용과 공약집, 언론 인터뷰 등을 참고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평화단체
----	-----	-----	-----	------

1. 남북관계/통일정책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파 이행여부	제2차 재건도	준중	준중	준중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입장	실제한 정책, 선언 수정	계승 발전	계승 발전하되 '통일정책' 강화	계승발전/탈냉전의 남북공동안보화 전략 마련 필요
인도추진력 지원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	완성/ 정부지원은 상호주의와 투명성 보장 조건	반대	반대	반대/ 무조건적인 지원
대북전력지원 입장	북한 핵포기 및 위험 감소후 추진	남북 사이에 상호협력 계획유언서 마련해 추진	적극 추진	적극 추진
여아 및 시진사회 참여하는 대북통일정책 수립, 김정기구 설치	김포 총회	협회는 가능, 김정권 부여는 반대	완성	완성/ 여성참여 50% 보장
북핵문제와 교류협력 연계 문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현금지원 및 남북협력 사업은 중단·유보	교류협력 계속 추진	교류협력 계속 추진	교류협력 강화

2. 대미관계

미국주도의 MD참여	답변 회피	답변 회피	반대	반대
미국의 대이라고 환전 요구 문제	답변 회피	답변 회피	반대	반대
SOFA 개정에 대한 입장	행사감할권 조항, 환경관련 조항 개선 필요	중요 부분 개정	전면적 개정 (수사권제한 조항 폐지, 공무상 범죄관련 재판권 이양 등)	전면 개정
국제형사재판소(ICC) 편제를 위한 미국 의 방무협정 요구에 대한 입장	ICC 회원국으로 의무 이행, 따라서 미국 요구에 불응	검토후 결정	불응	불응
대북 중유 제공 중단	KEDO 결정에 따른	답변 회피	반대	반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문제	답변 회피	소극적 반대	적극 반대	적극 반대
권사자권권 환수	답변 안함	추진	적극 추진	적극 추진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군사행동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답변 안함	현재로도 가능	적극 추진	적극 추진
제미라 합의에 대한 미국의 불이행 문제	답변 안함	불이행한 측면이 인정됨	불이행한 측면이 있음	불이행한 측면이 있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고립화 정책에 대한 입장	압박적 동의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

3.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방안 안보/외교정책

국방백서 '주적' 표현삭제	반대	반대	찬성	찬성
NLL의 공동어로화 추진	반대	찬성	찬성	찬성
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교전규칙에 신제공격력을	찬성	찬성	반대	반대
양심이 다른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유보	찬성	찬성
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시기상조	시기상조	장기적 추진	단기적 추진
예비군 및 민방위제도 개혁	현행틀에서 보완	예비군, 민방위 모두 기간 단축	예비군제 폐지 및 민방위제 유지	개혁 찬성/점진적
제주 화순함여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 지역주민 불의시 추진	검토후 결정	반대	반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유지	폐지후 대체입법	폐지	폐지
방위비 증액 여부	증액	총량(GDP 대비 3.2%) 유지	단기적 삭감	단기적 삭감
주한미군 철수 문제	통일이후에도 구분	통일이후에도 구분	단기적인 철수	단기적인 감축/철수

I.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 이번 평화통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초 '연론사 이외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 방침이다'라며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후 '질의에 편파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2차 답변을 거부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평가안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각종 강연, 합동토론회, 토론회 등에서 밝힌 입장에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1. 총평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보우선정책, 안보지상주의'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대북정책의 총론적 방향을 '역제력에 기반한 불안한 평화를 넘어 상호 공존·협력의 공고한 평화정착'(8월 21일 회담포럼 연설)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확고한 역제력, 군사적 우위, 북 '주적' 유지 등 구시대적인 남북대결시대의 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북이 일방적인 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상호간 협력 등 남북간 항방의 노력을 통해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기 보다는 북이 '안보의힘'이라는 대북관에 근거하여 북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및 개혁개방 요구 충족의 변화만을 촉구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정극된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조차 핵'개방의혹'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가 이를 핵'무기보유'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냉전적 사고이다.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전반에서 추진과 인연, 평화와 화해라는 직극적인 입장보다는 철저히 한미 공조에 입각한 정책을 제출하고 있어 대미추종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어렵다.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 특히 미국에 의한 대북공격이 공론화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미공조'라는 입장아래 이를 동조하거나,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장이 빈약한 것은 결국과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대한 안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평화통일정책제안 10여개의 요구안 중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은 3개(이산가족 상봉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무기감 단축, 소과계정)이다.)

2. 평가

대북정책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남측 내 합치 없는 일방적인 '대북외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발한 문제, 북에게 끌려다니는 무분별한 대북지원으로 북의 권술에 활용된 문제, 이러한 대북지원이 금강산댐, 핵시설로 전용되는 의혹이 있으며, 결국 교육협력이 북의 무장화를 도와주었다며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이러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북이 여전한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며, 변화하지 않았다는 대북관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북의 변화나 개혁개방은 전술적 차원일 뿐 근본

적 변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후 북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북에 대한 '주적'표현은 절대 삭제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2001년 11월 8일, 2002년 11월 5일 제합군언회 특강)

이회창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꼽고 있으며, 북의 개혁개방에 의한 안보위협 해소의 성과와 연제하여 대북지원, 경제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사적 억제력에 기반하여 긴장완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지원이 안보위협 해소에 귀결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긴장완화의 방법에서 무조건성이 군사적 억제력과 검증이라는 부분으로 갈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북을 통일시대의 동반자라기 보다는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확고한 흡수통일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정책은 남북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을 추구하는 '통일지향 정책'이기 보다는 안보위협인 북을 '관리'라고 변화시키는 차원의 '대북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대미정책

이회창 후보의 대미정책은 한미공조의 강화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2002년 초 부시대통령이 북을 '악의 축'으로 발표하기 직전 방미해서 미국관리들과 만난 후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에서 충분한 공간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의 입장에 편적인 동의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7월 25일 한국발전전략연구소 초청토론)거나, "북핵문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10월 23일 대통령-후보 회동)는 등의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최근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미국의 주장과 같이 북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포기하고 핵개발을 한 문제이다(mbc 100분토론 11월 7일)라는 견제이데, 그동안의 지원이 핵개발로 전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북의 핵의혹에 대한 완전한 해소가 될 때까지 일체의 현금 지원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지원과 남북간 협력사업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일정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자 철저한 한미공조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의 핵보유여부는 아직까지 미국조차 핵개발의혹'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가 이를 핵'무기보유'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냉전적 사고이다.

또한 이회창 후보가 자신이 평화정책에서 남북이 논의의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는 당사자주도의 원칙을 주요하게 제출하였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한미공조 강화와는 모순된다. 이는 결국 한미간 조율된 내용을 남북대화해 그다로 반영한다, 또는 관철한다는 대미추종 비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북핵문제'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제네바회담에 대한 미국측 불이행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

이회창 후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로 둘 만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북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한국반전연구원 초청강연)

이희창 후보는 평화원칙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병행을 밝히고 있지만 평화정책 과제에서는 선 긴장완화 후 지원의 입장을 갖고 있다.(8월 21일 회담모임) 한나라당의 초기 대북정책이 선 긴장완화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평화3원칙에 병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별거지 속해 위한 국민여론을 반영한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번 핵문제와 관련하여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중단' 등의 입장에서 확인되었듯이 여전히 선 긴장완화의 입장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5대과제 중 하나로 다자간 북북아평화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만큼 북북아 평화문제에 다자간의 이해와 문제가 얽혀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긴장완화 대책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즉 모든 책임을 북 일방에게로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한미공조와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평화문제는 남북간 논의사항이라고 단정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모순이다.

세 번째로, 평화실현을 위해 북의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에 대한 감축을 말하면서도 정작 남북의 국방비는 증액하겠다는 입장사이의 모순이다. 남북간에는 이미 있던 남북합의서 안에서 상호군축을 합의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게만 군축을 요구하고 남측은 도리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군사적 우위를 통한 평화담보라는 정책과 밀접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안보/외교정책

이희창 후보는 북과 대치하는 안보현실, 북에 대한 안보관의 혼란 우려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기준은 '주력'표현의 고수입장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의 영토조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남, 북 정부가 실현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수도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MD, 이라크 참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미공조의 원칙이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미국의 소위 '반테러 전쟁'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SOFA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최근 신효순, 심어선 양 일사사건을 계기로 전사회적인 개정요구들이 활발히 제기되자, 개정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의 기준과 방향,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권고안

한나라당 이희창 후보는 무엇보다도 북을 통일이 좌드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국민과 민족의 주권에 대한 굳건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편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서의 북이 아니라 협력하고 화해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모두가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정치한 인정, '군사안보'가 아닌 진정한 '평화'로의 의의전환이 될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진전될 것이며, 이희창 후보가 밝힌 '상호 공존·협력에 의한 공고한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력표현/국가보안법 등 북을 적대시하는 제도들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남북교류에서 가져오는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입력행사가 아닌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미관계 개선의 불명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갖대있는 정책, 자주적인 입장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야 한다. 최근 여중생 전차암사사건을 계기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소극적인 개성, 작전지휘권 환수 등 불명동한 한미관계를 근본에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동시에 전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패권적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가져야 하며, 대북지원 및 협력 중단요구, 이라크 참전요구, 미사일방어체계 동참요구에 대한 거부외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야 한다.

II.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1. 총론

노무현 후보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았다'는 평소의 공언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신뢰에 바탕을 둔 대북접근이라는 원칙적 자세를 전제하고, 정치적 신뢰 조성, 화해협력의 틀 마련, 6.15 공동선언 등과 같은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되,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북한의 합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후보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이라는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는 확고한 의지에 기반한 것으로 대체로 긍정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의 열거름이라는 총론을 넘어선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대미정책에 있어서는 평소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공약해 왔지만, 답변서에 의하면 지나치게 미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무사 행정부의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미 자세는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문제와 대이라크 전쟁 참여 문제, 재관련 이양 문제 등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미 동맹관계를 고래하고 국가이익을 면밀히 따져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인정하는 등 사실상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평가

대북정책

노무현 후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 노후보는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북에 권력을 지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건부 지원' 단서를 달고 있다. 북 핵문제가 해결되고 개성공단이 추진될 때 전력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과 외교관련 송사자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노무현 후보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는 1) '남북 화해협력'을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확장하고, 2) 소극적인 '북한의 도발 불응'(대북 3대 원칙 중 1항)을 '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시키며, 3) '흡수통일 불추구'(대북 3원칙중 2항)을 '공동번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통일에 대한 개념을 제네나 국가간의 통합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간의 신뢰 확립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제일 먼저 분단체제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북간 분쟁 및 갈등사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 추구,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미정책

노무현 후보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의 실체를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한 외교적 수석'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다만,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선제 공격과 한반도 전쟁은 한민족의 공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

북의 미사일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타결"을 통한 해법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제네바합의 파기는 꼭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은 제네바 합의가 원상회복되도록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합의의 다른 쪽 당사국인 미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노무현 후보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군사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쟁 방지를 위한 좀더 확실한 법적도덕적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 방안

노무현 후보는 현정권 동안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긴장완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기 정부가 남북간의 군사문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군사 직통 전화재설과 군 인사, 정보교류,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북의 전방배치 군사력 후방이동 및 감축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가 아직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요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북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향후 남북간의 군사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북방한지선(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의 해상 무역상선의 소지를 풀이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 한계선 지역을 남북 공동어로도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후보 측은 공복이 평화와 균형적 안정추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실상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인정하고 있다.

평화체결 협정 방식에 대한 북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남과 북이 먼저 체결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간의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보/외교정책

노무현 후보측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 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항들은 기존 형법 체제 속

에 흡수하거나 대체입법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비의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군 복무 기간 단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원성하면서도 군 전력수준의 저하 등을 이유로 군 복무 기간 단축문제는 '고려'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동약으로 내건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입장이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지만,

양심의 자유도 소중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 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이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MD의 내용과 의미, 한반도에서의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라크 참전에 대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하여, 국가이익차원에서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시 극작전 지휘권 환수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미평정협정은 미국측에 추가협상을 제외하되, 전면 개정보다는 '주요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는 주권 비교기준으로 미-일, 미-독 소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호혜평등의 기준에 입각,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불평등이 강조되는 조항들을 개정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시라이 분명하지 않다.

3. 정책권고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노무현 후보는 그와 더불어 민족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칙임을 주변국가로서 분명하게 미국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을 촉발할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거나, 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패권주의와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외교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우호관계를 해치는 인권다며 주한미군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쳐나가지 못한 김대중 정부의 '부제'까지 물려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비축소를 통해 사회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Ⅲ.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1. 총평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화해교류협력 추진의 성과는 인정하고, 6.15공동선언과 기존의 남북합의 사항들(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교류 중심인 "대북정책"은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 체재하에서 현재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의 정책은 일관되게 국익과 민족공조 및 자주 우선이라는 선명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그 한계성을 지적, 비판하고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한 대북정책보다는 구체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차별화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2차 남북정상회담과 금측추진 -> 북미간 핵, 대량살상무기 해결과 북미, 북,일수교 ->평화협정 체결로 설명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4단계 통일 방안"이 그것이다.

2. 평가

대북정책

권영길 후보는 "대북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극적이고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화해협력>→<민족연합-민족통일기구수립>→<연방국가>→<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4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E15공동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그 기본 정신인 민족 공존의 입장을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권영길후보는 북을 통일의 대상 즉 통일을 위한 파트너로서 규정함으로써, 북을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대북관 보다는 매우 진취적이고 진일보한 대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적개념을 조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두후보와는 뚜렷이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과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먼저 인도주의적 지원은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교류도 민족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즉, 분단이전 남북경제의 유기적 상호의존성 회복과 현 남한 경제체제의 장전과 북한경제 잠재력과 결합을 말할)과 비전을 갖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남북에서의 상호주의나 대북 피주기 논란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북측으로부터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제심과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미정책

권영길 후보의 대미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공조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에 입각하고 있다.

권영길후보는 "악의 축" 발언으로 상징되는 미국부시정부의 대북관과 강경일본도의 대북압박정책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일방적인 세제패권 지배전략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북미간 제재나 합의와 관련한 미국의 위법행위와 북에 대한 부당한 위협과 압박을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대북 핵 위협 및 핵무산 정책" 폐기와 함께 북에도 미국의 핵문제 관련 우려 해소를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생산, 반입, 배치, 사용도 금지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협정과 더불어 "남북미 3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1996.12.31에 있었던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이 남북의 의무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비핵지대와 사례처럼, 주변국들의 핵리협금지 보장과 자국의 핵무기 생산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핵무기 반입-배치까지도 금지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것은 기존의 한인도를 둘러싼 핵 관련 협약의 불평등성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세우면서 설득력 있고 필요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남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SOFA 등 무속합의서를 개정 또는 폐기하고,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없이 미국에 현남한 군사주권을 되찾고 자주적인 국방·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방안

권영길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과 관련하여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권영길후보는 남북의 선도적 군축을 통한 남북간 상호군축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미간 평화 협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로 생기는 동북아시아의 균형상실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과 북이 참여하는 "다자간안보협의체"를 통해 극복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 미국 주도의 정전체제하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남북이 선도적으로 군축을 시작한다는 입장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20만 군병력축소가 실제 전력에 영향이 없는 후방부대 병력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력의 손실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남과 북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완화하는데 있어 남북의 선도적인 군축만이 남과 북의 상호불신 해소와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하면서 북쪽을 상호군축의 흐름에 동참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외교정책

권영길 후보는 국가보안법 개혁 문제에 관하여, 유지 혹은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타후보들과는 달리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그 정신에 위배되며, 실정법상으로도 남북교류협력법과 상치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방위비 및 군 병력 규모와 군 복무기간 문제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감축 입장을, 미국의 MD체제와 이라크 전쟁 참여에 대하여도 국익 차원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하여도 대체복무제나 지원병 제도 도입 등 현실성 있는 대안과 연계하여 인정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정책 권고안

권영길 후보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일관성있고 선명하여 매우 진보적이고 전향적이라 평가된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다

소 미흡한 점이 부분이 아쉽다.

예를들어 방위비의 삭감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 이후 국가안보의 유지·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남쪽의 선도적 군축으로 북쪽의 군축을 이끌어 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남쪽에서 선도적으로 군축을 한다고 해서 북쪽에서 군축에 바로 응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선도적 군축에 대한 국면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즉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상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남북 상호군축의 실현 가능한 Process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대립체제를 법적으로 종결짓고, 그에 근거하여 상호군축을 추진해 나가자는 제안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일 수 있다.

700 Persons' Peace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Visit of U.S. President Bush to Korea

-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bsolutely must be prevented! -

The U.S., having achieved a one-sided victory in the war in Afghanistan following the September 11 event, has effectively declared 2002 as the "year of war." As if intoxicated by war, it has gone on to name North Korea, Iraq and Iran as an "axis of evil" and even to imply the concrete possibility of military attack against Iraq. Now the sole remaining world superpower, the U.S. is throwing around an oppressive and weighty policy of hegemony thereby emerging as the major threat to world peace.

This threat by the U.S. is directly influencing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Bush has made it clear without a word of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at the U.S. can start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e who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feel a combination of shock due to this affront and extreme anger over the arrogant and unjust attitude of the Bush Administration.

One day before U.S. President George Bush's visit to Korea, we solemnly declare--in the name of regional and world peace--that there must not be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any circumstances.. Therefore, we sincerely make the following appeal to U.S. President Bush, the political leader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70 million Korean people and all people around the world who want peace.

1. Does the US Intend to Star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his New Year's address on January 29, 2002, President Bush called Iran, Iraq and North Korea an "axis of evil." He declared that "the U.S. will not allow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in the world to threaten us with the most dangerous weapons in the world," and "will not wait until the danger approaches." Such a strong speech by President Bush implying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military action by the U.S. is shocking.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frozen its nuclear program as laid out in the 1994 "North Korea-U.S. Agreed Framework (Geneva Agreement)" and has suspended its missile launches since 1999 for the sake of

negotiations with the U.S. We are also aware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participated in any terrorist activity since 1987, and we know they subscribe to the International Anti-Terrorism Conventions. Even the U.S. Ambassador to Korea, Thomas Hubbard, recently admitted, "there is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supports terrorism." This means that the U.S. threat to attack North Korea cannot be justified even based on its own standards of "the War against Terror."

The European Union -- an ally of the U.S.-- and most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China and Russia, as well as international civic organizations, have expressed concern over the possibility of war arising due to unilateral U.S. military action. They have warned that world problems including terrorism cannot be solved through war. The claims of President Bush and his administration are simply based on poor reasoning.

We therefore declare that the U.S. has no justification for expanding the war against terrorism to the Korean peninsula, and we urge the Bush Administration to change its Korea policy in the direction of peace.

2. The United States Must Immediately Stop Its Ultra Hard-line Policy of Bringing War to the Korean Peninsula and Faithfully Fulfill Its Agreements with Nor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have agreed upon the North's freeze of nuclear development and cessation of missile launches, improvement of North Korea-U.S. relations, easing of sanctions, and continued dialogues for these purposes. This has been set out in the North Korea-U.S. Agreed Framework of 1994 and the North Korea-U.S. Joint Communiqué of October 12, 2000. Up to the present, there has been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fallen back on such agreements, and the U.S. cannot deny this reality. On the other hand, the evidence is clear that the U.S. has breached the agreements by not carrying through on its promise to lift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evertheless, U.S. President Bush has set up new conditions for renewed dialogue, such as the removal of conventional weapons from the front lines and a ban on missile exports, bringing one-way pressure to bear on North Korea. Demanding only that North Korea yield, without presenting North Korea-U.S. or North-South armament reduction plans,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is demanding that the North 'surrender unconditionally.' This is one-sided tyranny that goes against the spirit of the North Korea-U.S. Agreed Framework and the October 12 North Korea-U.S. Joint Communiqu , which promised improvement of relations through dialogue.

This is fundamentally a dangerous policy that will forestal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rive our people toward a war of mass slaughter and destruction. It is a policy that disregards the responsibility of a powerful nat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guar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accords.

The Korean people, having personally experienced the horrible tragedy of the Korean War 50 years ago, and most recently having witnessed the disastrous war in Afghanistan, by no means want another war, which would bring about the extinction of the Korean people as a whole, North and South.

Thus, we strongly urge President Bush and the U.S. Government to alter their obstinate, ultra hard-line North Korea policy. Such policy only elevates the possibility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must return to the spirit of the North Korea-U.S. Agreed Framework and the October 12 North Korea-U.S. Joint Communiqu conclud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It must move in favor of peace and an end to the cold war and thoroughly fulfill the agreements made with North Korea.

3. The U.S. Must Stop Its Unjust Interven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Accord and Must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Effort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Establish a Peaceful Structure and a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of the 21st century is taking hopeful steps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breaking the chains of division forced upon it by the powerful nations of the 20th century. Through the first North-South Summit, following 55 years of division, and the June 15 Joint Accord, the two Koreas have solemnly declared to all Koreans and to the world a determination to heal their previously hostile relations and open a new chapter in history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peace and reunification.

We hear that during his visit to Korea, President Bush intends to

demand that President Kim Dae Jung purchase U.S. weapons, including F-15K fighters for a sum of billions of dollars. In addition, the U.S. persists in trying to include South Korea in its MD system, based on its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threat." This policy is stirring up ten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which increases the danger of war, damages the spirit and the fruits of the June 15 Joint Accord, and fundamentally threatens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We cannot but question the logic and grounds of the idea of demanding that North Korea--with annual war expenditures of less than 1.5 billion dollars--reduce its conventional arms while pushing South Korea to purchase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deadly weapons. Furthermore, the plan by the most powerful nation in the world, with a military budget of 380 billion dollars, to us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establish a missile defense system against North Korea, which spends less than 1.5 billion dollars on the military, is seen as absurd even by the world's youngest citizens, the children.

All this occurs when so many Koreans are suffering due to the trampling of our economic sovereignty and the threat to our people's right of survival caused by the U.S.A.'s neo-liberalist globalization policy. The accumulated unresolved issues facing Korea and the U.S. including dealing with the Nogun-ri massacre of innocent people, the Yongsan U.S. base issue, and the enforcement of the R.O.K.-U.S. Investment Agreement -the latter unfavorable to Korea- all hang heavy in the balance. Impending U.S. pressure on the one hand and U.S. inaction on the other will lead to strong opposition by the Korean people.

President Bush and the U.S. Government must stop their unjust interven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process. Rather they must instead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independent effor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they head in the direction of peaceful reunification. This is the historical and ethical obligation of a n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Must Forcefully Represent the Korean People's Strong Opposition to War and Their Determination to Act for Peace, and Government Officials of the South and the North Must Make Joint Efforts for War-Prevention and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must not ignore the gravity of the hard-line speech against North Korea by U.S. President Bush and his administration nor be swayed by empty claims that "there is no change in U.S. support of the Sunshine Policy and its will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Such a stance would weaken the people's will and capacity to deal with the crisis by misleading them and blinding them to reality.

At the summit, President Kim must firmly state his position to President Bush that there must never be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 WMD issue with North Korea must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in an international framework of discussio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must first make a no-war declaration stating that there must not b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any pretext.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must--together with civil organizations--immediately form a special structure to prevent war and organize national resources to prevent such a disaster. Thirdly, it must call for an emergency meeting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issuing of a joint no-war statemen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lso must squarely face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has taken place since September 11. Given the dangerou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too must block the possibility of war. They must take a more active role in dialogue and cooperation to build a structure of trus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o that Korea can proceed steadily along the path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They must bear in mind tha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is all the more essential for the North and the South to establish and carry out realistic and concrete plan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primarily be solved among our people."

Furthermore, we urge all political lea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ranscend factional interests and political views in order to gather the strength and wisdom of all Korean people and to take a leading and responsible role in preventing war and maintaining peace.

5. "No War! Make Peace!" "Fulfill the June 15 Joint Accord Now and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Finally, we appeal to the 70 million Korean people, who stand at the crossroads between war and peace. We experienced shock and relief upon learning after the fact in 1994 that the Korean peninsula had been on the verge of war according to U.S. war strategists. Nevertheless, an "insensitivity to war" is still prevalent among some of our people. This must be rectified immediately. We cannot take the chance of the Korean peninsula's being suddenly hit with the lightning bolt of war and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dying by the masses after thinking, "There won't be any war."

The Korean people must stand as one. We must demonstrate to President Bush and the U.S. Government our strong will and determination to prevent any war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Bush and the U.S. must cooperate with the Korean people's historical march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Bush and the United States cannot thwart a united Korean people.

There must not be another war in our precious land, the Korean peninsula. No one can be allowed to block the Korean people's procession in history nor can anyone subvert our determination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through the realiza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expect President Bush and the U.S. Government to accept our demands and to move toward a peace-oriented Korea policy. We truly hope that during this visit President Bush will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earn how much the Korean people desire peace.

In conclusion, we solemnly pledge to all Koreans and to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we will move forward unwaveringly under the banner of peace, toward fulfillment of the June 15 Joint Accord, and to the achievement of peaceful reunification.

February 18, 2002

Participants in the 700 Persons' Peace Declaration

**Statement of Korean Groups for Peace:
We Urge Israel to Stop Slaughtering Palestinians**

April 11, 2002

Israel is killing Palestinians for two weeks with its fiercest attack in recent 20 years, ignoring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to withdraw and international societys demands.

Upon international pressure, Prime Minister Ariel Sharon recently withdrew tanks and troops from Qalqiliya and Tulkarem. The two cities, however, are still under Israeli blockade, and other Palestinian towns and refugee camps are under even stronger military attacks. In his speech to Israeli parliament on April 9, Sharon emphasized that "military attacks would continue until the mission is completed" and said the purpose of the killings is "to uproot suicidal terrors." He needs, however, to remember that the very root of the suicidal terrors is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We do know that Sharon is a war criminal who is responsible for Mideast War, the attack on Lebanon and death of 2000 Palestinians in refugee camps in Sabra and Shatila. Only on April 7, George W. Bush, who has been silent regarding Israels attack so far, urgently pleaded Israeli military to pull back. This, however, looks like a mere gesture of hoping the Israels prominent military attack does not get in the way of the United States attempt to expand their war to Iraq.

According to Israeli officials, nearly 200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ten days since March 29. The Israeli military raged on the ambulance which were evacuating the injured, UNs relief vehicles and peace activists from all over the world. Foreign reporters are not able to cover the situation and terrified to death. One of them has been already killed. The medical situation is serious, and there are no food or water available and no place to live. Only the cry of Palestinians who are victimized by insane war fills the area.

In the midst of all this, there is increasing number of voices from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Israels slaughter of Palestinians. There are protests against Sharons campaign even in Israel, not to mention Mideast and Europe. On April 6, there was a protest of 7000 people in Tel Aviv, Israel, against the massacre. In addition, there are more and more conscientious Israeli objectors against guns.

We deeply admire all those, including Palestinians and Israelis, who

protest against Sharons massacre, and will fight with them until Israel stops slaughtering Palestinians and true peace and justice come to Palestine.

For that reason we demand the following:

1. Israel should stop killing Palestinians.
2. Israel should stop occupations immediately.
3.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aiding Israel with arms and imperialist intervention.
4. For their right to live and settlement of peace, Palestinians should be provided with medical supplies, food, drinking water, electricity and housi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omen' s Position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ugust 26, 2002

Korean women who attend the WSSD People' s Forum in Johannesburg would like to make the case for the Korean people' s desire toward a peaceful Korea. Korean women have suffered tragedies and pains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We have made efforts to build peace and resolve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his address of State of Union on January 29th 2002, the US President Bush labeled the North Korea as an 'axis of evil' . According to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 the US would use nuclear weapons strikes in a preemptive mode to North Korea. The US administration' s hard line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reats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make peace in Korea and Northeast Asia.

We want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women' s efforts for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omen devote herself to the improvement of North-South Korea relations as well as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North-South Korean women' s interchanges. Interchange program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omen help us to understand difference in basic values and culture since the division of Korea.

We strongly urg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to revis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On June 13,2002, two South Korean middle school girls were crushed to death by an US armored vehicle (AVLM).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not even prosecuted the US soldiers concerned due to the US Forces Korea authorities' primary jurisdiction established in the SOFA. Amend unequal articles in the SOFA to prevent USFK from violating human rights and ensure that the US military bases are held accountable for environmental degradation.

Peace Team of the Korean Women' s Environmental Committee on Rio+10
Women Making Peace

Young Women' s Christian Association of Korea

Korean Women' s Environmental Network

Korean Women' s Associations United

POLITICAL DECLARATION OF PEACE CAUCUS

WSSD JOHANNESBURG, SOUTH AFRICA - AUGUST/SEPTEMBER 2002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28/08/2002

We call upon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address the global destruction of humanity and the environment caused by militarism, war and violence in all its forms.

We note with concern that prev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on peace and demilitarisation issues are conspicuously absent in the Johannesburg draft plan of implementation.

The WSSD in Johannesburg must make the link between violent conflict and the destruction of the Earth's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s. Violent conflict continues to bring death, displacement and injury to millions of people. War causes direct ecological damage and destroys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Efforts to reduce poverty in the world will fail while agricultural land is planted with landmines instead of food crops. The humanity of citizens is violated when their country is under military occupation. The health of planet Earth is harmed when the environment is polluted by toxic bombing campaigns and the disposal of chemical waste left over from production and use of arms.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an end to militarism and violent conflict.

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must commit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citizens of the world to:

* REDIRECT MILITARY SPENDING

Military expenditure and the arms trade are major impediment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oney saved by reducing military expenditure must be redirected to promoting socio-economic justice, sustainable development, eradicating poverty, under-development and inequality. Military resources and technology must be channelled towards human development.

* ENFORCE NUCLEAR DISARMAMENT

Governments and citizens of the world must work to remove the threat of global destruction posed by nuclear weapons. We must promote and ensur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nd work towards a nuclear abolition treaty.

*** ADOPT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SYSTEMS**

The world must reject the notion that waging war brings about security. We must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state and the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The military - the institution that is meant to 'protect' and 'defend' us - is the principal threat to our security. We must begin to rely on non-violent and constructive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Real human security can only be attained by the establishment of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sses and structures to deal with intra-stat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ust be transformed from being an instrument to wield power by the rich countries to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eacemaking and building justice and as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 CLEAN UP TOXIC LEGACY OF WAR**

Governments and military corporations must take responsibility to clean up landmines, unexploded ordnance, depleted uranium and radioactive materials, chemical and biological waste. The dumping of radioactive waste, particularly in Africa, must be stopped.

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must agree on practical measures that will achieve peace, justice, human dignity, prosperi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Solidarity with Anti-US Protests in South Korea

The Asian Peace Alliance takes special note of the recent upheaval of public reaction in South Korea concerning the countrys half-century lo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e are witnessing with profound compassion how tragically two young girls were crushed to death by a US forces tank on a public road, and with shock how unfairly their families have been treated while the assailant US servicemen were set free by a sham trial in the American military court. While expressing our deepest condolence to the two girls, Shin Hyo-Soon and Sim Mi-Sun, and their families, we hope this brings us to the dear memory of many more innocent people in Korea and around Asia, so often hurt or perished by the criminal conduct of US forces. We also note that this is truly a crucial time of change towards peace in Asia, and would like to convey our strong support for the wave of actions against US military presence now spreading widely in South Korea.

We condemn the US Governments continued neglect of civilian lives and well-being in South Korea.

We are deeply appalled that in South Korea hundreds of serious crimes are committed by the US servicemen every year, but most of the assailants are not brought to justice at all. The case of the recent victims is part of thousands of criminal cases, involving rapes and murders, since US forces were stationed in the country. Security concerns have been used to quell the rightful public anger and demand for justice in the past. But the accumulated democratic energy among Korean people in the past two decades no longer allows the arrogance of the US authorities to continue unnoticed. What is totally unacceptable in a normal society has been justified too long in South Korea in the name of the US strategic interest. The Korean people today are standing up to correct this abnormality, as a way to protect innocent lives from arrogant power. The candles they light every evening these days will, we believe, light a new path ahead for the people. We stand with them in the name of peace and human dignity. We console the souls of the dead with our common stand. We condemn the US arrogance over innocent lives.

We call on our friends in Asia to salute the Korean peoples hard efforts to have a critical reflection of their unequal and unjust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ir respectful actions to change it.

We now witness voluntary protests spreading from Seoul to all over the major cities in South Korea. Everyday there are evening candlelight vigils in front of

the American Embassy in Seoul and town centres in other cities, called for and participated in by people of all age and profession. The first evening vigil near the American Embassy was attended by more than ten thousand people, most of them informed through voluntary networks of communication. Millions of young people are talking, networking, organising and spreading words on this anti-US protest on the net every day. Some of them have tried to shut down the White House website. Pop stars and movie actors are joining the vigils, holding special concerts and declaring their views on the arrogance of the US policies towards South Korea. Religious groups are holding prayer meetings and protest fasts. So far two US military bases have been broken in and unintentionally hosted peaceful demonstrations launched by students. School pupils are holding special discussions. All are deeply significant signs of a fundamental wish of the people in Korea for peace and dignity in the face of military might. They are creating an important moment in the countrys history, as well as ours.

We declare that the new US war strategy is the direct cause of a new anti-Americanism now spreading in Korea and elsewhere.

South Korea has been a strategic base for American interest in East Asia for five decades. Raising a voice against the US policy was unthinkable until recently. Many were tortured and imprisoned for raising such voice. State terror and taboo have protected American interest in the public domain in Korea. Even when the US gave a tacit approval to Chun Doo-hwans army for crushing civilian protesters in Kwangjuo City in 1980, there were only limited voices questioning the presence of the US in the country. The crimes similar to the recent ones have usually gone unnoticed, almost every day every year.

It is only when the new Bush administration began to question Kim Dae-jungs soft-line approach to North Korea that people in Korea began to express unease. From this point, the American strategic interest began to clash with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n Korea. The new messages from Washington began to publicly discredi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he reconciliatory developments between two Koreas, which have been hailed by almost all people except Washington hawks. Then, Bush administration kept North Korea in the list of countries sponsoring terrorism while introducing the new pre-emptive strike doctrine. This amounted to a de facto war signal in Korea. And in 2002, Bush announced North Korea as a part of the Axis of Evil,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Seoul. His first visit to Seoul was consequently marred by unprecedented antagonism from the Korean public. Seoul was kept on the sideline whenever Korean issues were brought up in Washington.

We embrace the recent wave of anti-US protests in South Korea in this historical context. It is both a compassion for the innocent souls of the two girls and a collective call for peace and anti-militarism now instigated by Washington. It is calling for a long-awaited question, questioning the legitimacy of the US military forces and Washingtons dictation whe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ave become norms of engagement in the region. Today's popular actions start from the Korean peoples long-held love for peace, and reaches out to be a direct expression against the war-seeking interest of the US. And by their determination and level of participation, Korean people are now achieving a new step towards peace away from old shackles. We are witnessing the coming of a crisis of legitimacy for the American heavy-han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and in Asia at large.

We therefore urge all those concerned with peace to forge a strong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today and to raise a voice together against the danger caused by the war-seeking US forces.

We as members of the ASIAN PEACE ALLIANCE and as peoples of Asia, where so many innocent lives have been lost by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superpowers, also urge all peace-loving people and peace groups to join hands with the current global anti-war movement. The US war on Iraq is inhuman violence by military intervention, and our global anti-war movement will stop it from happening.

We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demn the continued US efforts to cover up criminal activities of its servicemen abroad.

We call on all PEACE-LOVING ASIAN PEOPLES to come together to generate strongest voice together, to end violence caused by the US overseas forces.

We call on strong solidarity among all peace loving people and peace groups to stop the US from launching a war for oil.

Signed:
Steering Committee
ASIAN PEACE ALLIANCE
December 14, 2002

..... **보도기사모음**



남북교류 남북여성문화교류사업
2003년 10월 20일 서울에서
2003년 남북 여성문화교류사업

"남북여성 '문화적 대동잔치'로"

남북여성 문화교류사업은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들, 남북 민간교류 첫 물꼬 터

각지 여성 10여명 6·15선언 2주년 행사 참석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6.15 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이런 관심과정책서 여성이 주무체를 논할 때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2년 9월 13일 금요일 [제78호]

www.hanjin.com

남북여성동일대회 10월로

실무절차, 추석 후로 연기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철학인문교육전문가 육성 시급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13일 9월 14일



이철호 박사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8·15 민족통일대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는 남북여성들이 서로의 생활상을 알리고,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여성행사에 힘 실린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남북여성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주황우당
최기우
김도연
박기우

수신으로 20여 명이 넘는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20여 명이 넘는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20여 명이 넘는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고도도 새정치연합을 지지할지 여부에 따라 20여 명이 넘는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20여 명이 넘는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계속해서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20여 명이 넘는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20여 명이 넘는 주황우당 최고위원들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였다.



김미아의 향유

문학평론가 김미아

김미아는 문학평론가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미아는 문학평론가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미아는 문학평론가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O 19월16일(수)~17일(목)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의의

남북여성 57년만의 해후 "반갑습네"

남북 여인들이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남북여성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지난 1938년 10월 17일(수)~18일(목)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의의

남북여성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남북여성 함께 준 평화와 대동 줄



남북여성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남북여성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우리는 동일을 위해 필 하나구요?



남북여성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남북여성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고향에서나 57년 만에 고향에서나



